국내 유일의 경제정책 정보지

나라경제

nara.kdi.re.kr

2015 8

에너지 '자립'을 꿈꾸다



특집 2015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INTERVIEW** 윤성규 환경부 장관 **ISSUE** 에너지 '자립'을 꿈꾸다 **경제정책해설** 판교 창조경제밸리, 300개 창업기업 · 300개 성장기업 입주 / 서민금융상품 공급 규모 5조7천억원으로 확대 **특별기고**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당선에 대한 소고 **경제학 소믈리에** 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 **인사이트** 우리나라의 FTA, 어디쯤 와 있나? **세계는 지금** OECD: 지속성장의 해답 '투자'에서 찾는 OECD / EU: 미래 먹거리 디지털시장 살리려는 EU의 노력 **시평**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정책방향 **기획2015** 정부 교육지원 · 교육정보의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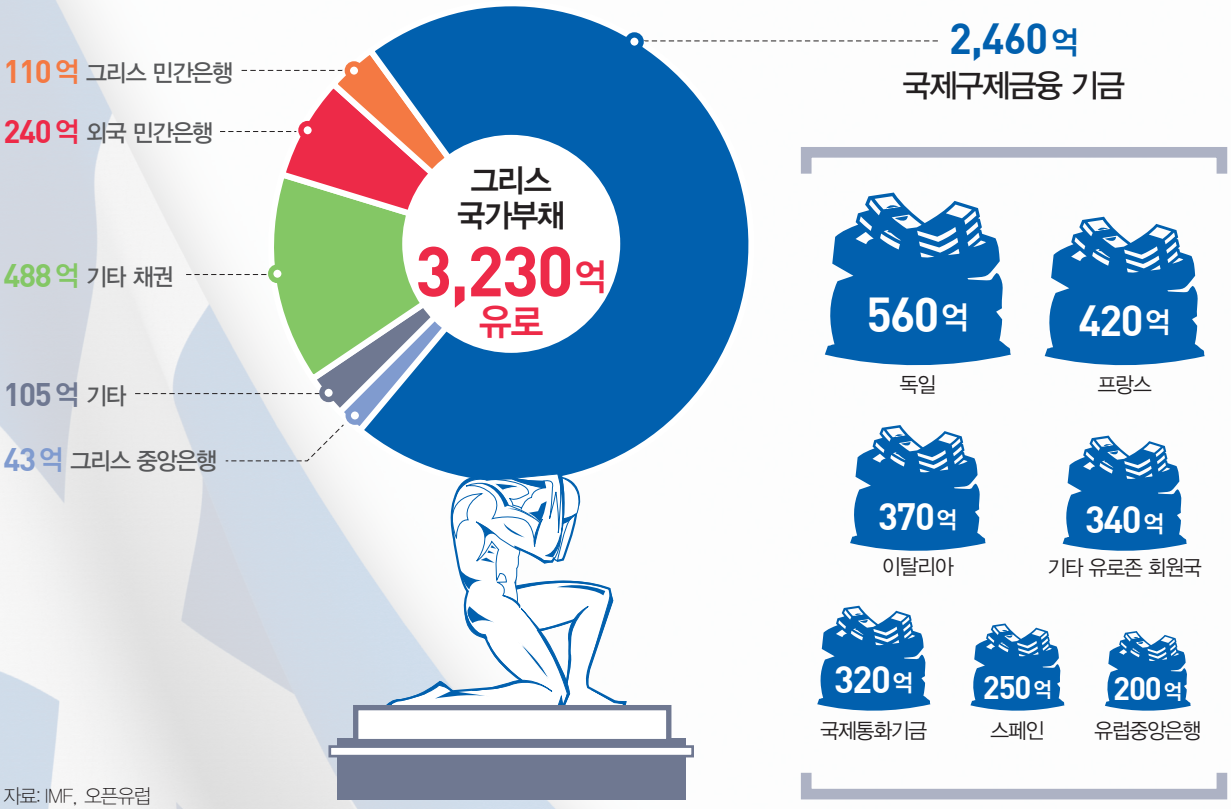
ISSN 1227-8033

KDI 경제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흔들리는 그리스 경제

그리스 국가채무와 구제금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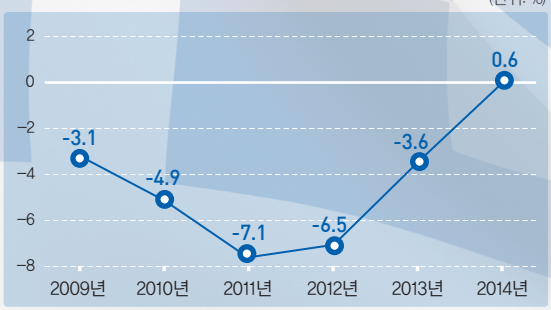
(단위: 유로)



자료: IMF, 오픈유럽

그리스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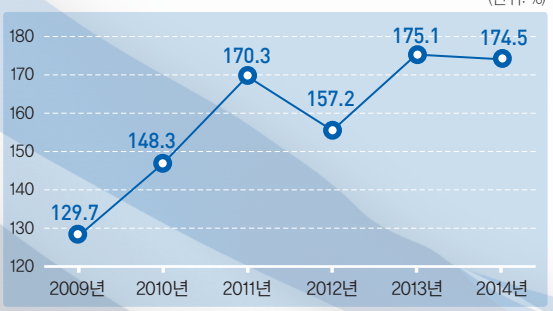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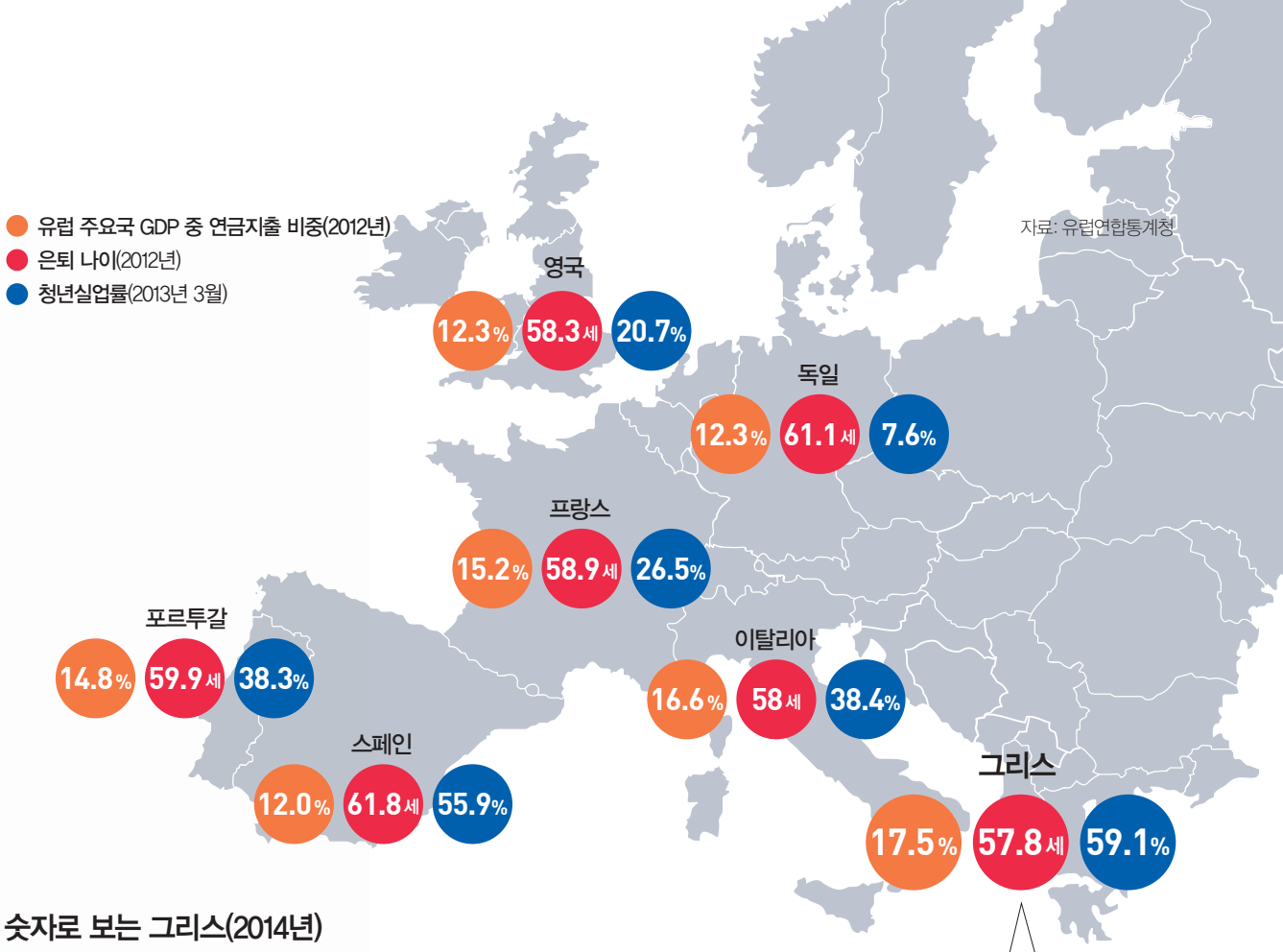
자료: EIU, 유럽연합통계청

그리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단위: %)



자료: EIU, 유럽연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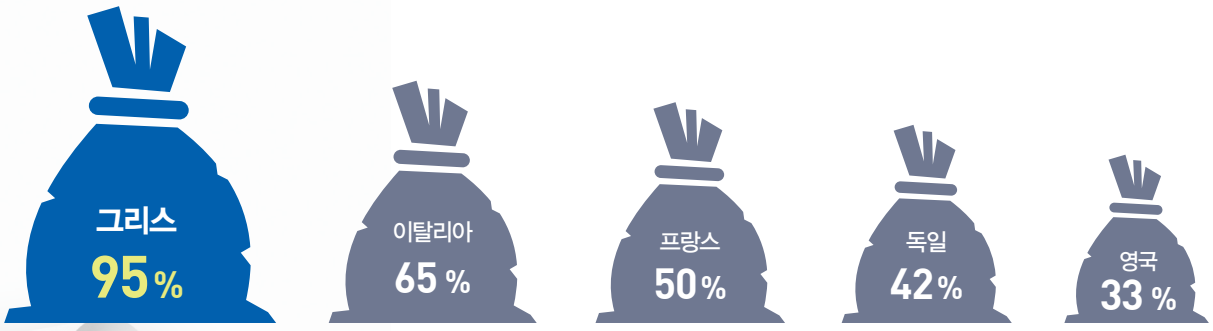


숫자로 보는 그리스(2014년)

인구	수출	수입
1,106만명	351.7억달러	629.1억달러
주당 노동시간	**1인당 GDP**	**실업률**
42시간 (2013년)	2만 5,952달러	26.6%

자료: IMF, 코트라, OECD

은퇴 직전 임금 대비 연금수령액 수준



자료: 유럽연합통계청

나라경제

2015 08 CONTENTS

나라경제는 KDI와 15개 경제부처가 함께 만듭니다.

디지털 **나라경제**를 만나보세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나라경제**를 입력한 뒤
〈나라경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면 최신 경제동향과 주요 경제정책 등
디지털 나라경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INTERVIEW

윤성규 환경부 장관
"우리와 다음 세대, 말 못하는 동식물도 보듬는 발상의 전환 필요"
대담 이재열 나라경제 편집장 22

SPECIAL THEME

2015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08 총 22조원 재정보강으로 경제활성화 모멘텀 마련
이형일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10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 및 창업 거점으로 육성
이태희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담당관

12 전국 지자체 하반기 추경예산 11조9천억원 편성
이우종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장

14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16조2천억원 무역금융 확대 · 공급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

16 청년일자리 수요 확충과 함께 노동시장 개혁 과제 지속적으로 추진
김종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18 주거비 부담은 완화하고 건설투자는 확대하고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20 핀테크산업 활성화하고 가계부채 철저히 관리할 것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46

ISSUE

에너지 '자립'을 꿈꾸다

29 공급확대 정책 한계 드러내…수요에 기반한 에너지 자립 필요
정우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가스정책본부 위촉연구위원

30 냄새나고 소외됐던 마을의 대변신…환경과 에너지 문제 동시 해결
이일형 에너지경제신문 정책팀 기자

31 디젤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63개 도서에 에너지자립섬 추진
이귀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과장

32 "베트남 참전용사들의 에너지 사랑…태양광발전으로 전기세 '제로'"
노성남 십자성위재공업사 전무이사

33 기존 에너지의 10분의 1만으로 쾌적한 실내…공사비는 10~15년이면 회수
배성호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실 사무관

34 '제로에너지' 기술 상당부분 확보…경험 많은 기술자와 시장 키워야
최정만 자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35 경작지 2m 아래 지열 활용한 '플러스에너지' 주거단지
홍도영 독일 Kramm & Strigl 실시설계부 팀장

36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에 초점 맞춘 정책 나와야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경제정책해설

54 일자리는 늘리고, 격차는 줄이고
정경훈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

56 판교 창조경제밸리, 300개 창업기업 · 300개 성장기업 입주
윤의식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58 해양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2019년 상용화
이상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

60 서민금융상품 공급 규모 5조7천억원으로 확대
김기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세계는 지금

62 OECD: 지속성장의 해답 '투자'에서 찾는 OECD
전응길 주OECD대표부 참사관

65 EU: 미래 먹거리 디지털시장 살리려는 EU의 노력
최준환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과학관

COLUMN

02 INFOGRAPHIC
흔들리는 그리스 경제

37 生生 관가엿보기_문화체육관광부
뼛속까지 문화적 인자를 담아라!
김고금평 머니투데이 차장

38 특별기고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당선에 대한 소고
조승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

41 이완의 글 그리고 글
눈이 아닌 마음으로 읽기
이완 서예·캘리그라피 작가

42 경제학 소믈리에
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

44 세계시장에서 배우는 진열의 미학_터키 이스탄불 그랜드 바자르, 이집션 바자르
똑같은 물건은 있어도 똑같은 진열은 없다
이랑주 비주얼머천다이저(VMD)

46 그들은 바쁘다 시즌2_교육부 공교육진흥과
꿈과 끼를 찾아 떠나는 여행, 자유학기제!
신소영 사무관

50 소비자 정보_습기제거제 가격 · 품질 비교 정보
제습량 및 내구성 꼼꼼히 확인해야
남현주 한국소비자원 화학섬유팀 책임연구원

53 혁신 스타트업!
유럽의 스타트업 허브, 베를린의 다섯 가지 매력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68 무세이온, 문학과 예술에 바쳐진 집들
바람의 노래, 온양민속박물관 구정아트센터
최우용 건축가

70 인사이트
우리나라의 FTA, 어디쯤 와 있나?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72 김세윤의 신작토크_종이 달
멈추기 위해 달리는 그 여자의 이야기
김세윤 방송작가

74 시평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정책방향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book in BOOK 정부 교육지원 · 교육정보의 모든 것

02 저소득층 · 소외계층 자녀 공교육비 부담 덜어요~
03 커리어넷 '커리어플래너'로 진로정보 · 검사 종합적으로 관리하자
04 전국 20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 · 긴급구조 제공
05 심리 · 정서적 문제, 가출, 폭력 겪는 청소년이라면 ☎1388로 'SOS'
06 방학 끝나기 전에 무료 체험현장으로 gogo!
07 해외파견 봉사단 정보는 '월드프렌즈코리아'에서
08 등록금 ·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10 2개월 200시간 이상 훈련 프로그램으로 기초 · 실무지식 습득
11 창업 관련 체계적인 교육, 여기에 있어요
12 대학 가지 않고도 학위 취득하려면 학점은행제 · 독학학위제를
13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 1인당 연 200만원 지원
14 평생 동안의 학습이력, 한곳에서 관리하고 학력취득에도 활용하고
15 정부기관 특색 살린 강좌 풍성…국어문화학교 · 지식재산교육 등

2015. 08 [제26권 8호 통권 297호]

발행	KDI 경제정보센터
편집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인	김준경 KDI 원장
편집인	김철주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편집주간	이용수 KDI 경제정보센터 경제정보실장
편집위원	기획재정부 안병주 창조정책담당관 미래창조과학부 이태희 기획재정담당관 외교부 김선영 G20경제기구과장 행정자치부 이우종 재정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이진석 창조행정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 김영수 홍보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이재식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 이상진 기획조정담당관 환경부 김승희 정책총괄과장 고용노동부 김종윤 기획재정담당관 국토교통부 김흥진 기획담당관 해양수산부 홍종욱 기획재정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최성호 창조기획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김성삼 경쟁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김성조 정책홍보팀장
편집간사	허영락 기획재정부 창조정책담당관실
편집장	이재열
취재 · 편집기자	유성임, 권기대, 양은주
배포	김경숙
발행처	KDI 경제정보센터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ISSN 1227-8033 8
구독문의	044-550-4656
홈페이지	http://nara.kdi.re.kr
e-mail	nara@kdi.re.kr
발행일	2015년 7월 31일(매월 말일 발행) 제26권 8호(통권 297호)
등록일	1990년 11월 14일(문화 라 04859호)
기사문의	044-550-4634
구독료	권당 3,000원 연간 30,000원
제작지원 · 인쇄	(주)성우애드컴
사진	이래스튜디오

*『나라경제』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과 사진은 KDI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청년 일자리,
노동시장 개혁 이 열어갑니다.

누구나 원하면 일할 수 있는 사회, 제2의 인생 시작!
능력 있는 커리어맘, 든든한 엄마가 될 수 있는 노동시장 개혁!
모두가 차별 없이 함께 가는 노동시장 개혁!

내 아들과 딸의 취업이 열립니다
노동시장 개혁!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PECIAL THEME



2015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한국경제가 심상치 않다. 메르스와 가뭄 피해가 겹치면서 2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은 0.3%로 추락한 것.
이에 정부는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서민 · 중산층의 자산형성 기회 확대와 서민금융 지원강화, 소비 심리 회복을 통한 내수활성화 방안 등과 함께
11조5천억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된 '2015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그것.
「나라경제」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특징 및 부처별 업무 추진계획을 살펴봤다.

총 22조원 재정보강으로 경제활성화 모멘텀 마련

- 10만개 일자리 경험기회 제공 및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 10조원 규모의 인프라투자플랫폼 만들어 투자 확대
- LTV · DTI 규제 합리화 조치 연장해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 유지

2014년 12월 22일 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를 골자로 한 '201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이후 우리 경제는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내수와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비록 그동안 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수출은 부진했으나 저유가와 저금리 효과에 더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회복세에 힘입어 각종 심리지수가 상승하고 소비 · 서비스 · 건설투자 등 실물지표도 차츰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나 6월 들어 메르스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가 지난해 세월호보다 더 큰 충격을 주며 경제 곳곳에서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신용카드 사용이 급감하면서 소비가 얼어붙기 시작했다. 아울러 여름휴가라는 대목을 앞둔 시점에서 12만명 이상의 해외 여행객이 방한을 취소하고 놀이공원 입장객 수가 50% 이상 급감하는 등 서비스업이 받은 충격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었다. 비록 메르스 관련 상황이 다소 진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심리위축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어 5분기 이상 0%대 성장과 6분기 이상 저성장 지속이라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2015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회복세가 견고하지 못한 우리 경제에 대한 엄중한 상황판단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청년 고용절벽 완화하고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우선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5대 경제활성화 과제와 4대 부문 구조개혁 방안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흐름을 다시 3%대로 되돌리기 위한 방안들로 구성됐다.

첫째, 경제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12조원의 추경을 포함해 총 22조원의 재정보강으로 메르스 충격확산을 차단하고 경제활성화의 모멘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재정보강의 핵심 키워드는 재난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이다. 의료기관 · 관광업계 등 메르스 피해 부문을 지원하고 가뭄 · 장마에 대비한 수리시설 확충을 최우선 해결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노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들의 활력 강화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집행에 속도를 내게 하고 지자체 추경과 안전투자도 적극 지원해 지역경제 곳곳에 활력이 퍼져나가도록 하겠다.

둘째,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까지 정년연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



지난 6월 2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 대책 등을 담은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leehi_mosf@korea.kr

다. 대기업과 우수 중견기업 등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인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10만개의 일자리 경험기회를 만들 것이다. 아울러 직접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사 · 간호사 등 분야별 채용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 이와 함께 기업에는 청년고용을 늘리면 세제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임금피크제로 청년채용을 늘릴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 채용을 장려하겠다. 또한 서비스업 육성과 관광 · 벤처 투자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수출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것이다. 14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등 과감한 지원으로 수출 부진을 타개하고 전략적 · 선도적 분야에 집중투자해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비과세 해외주식투자펀드 도입, M&A 규제완화 등을 통해 해외투자를 촉진해 경상수지 흑자로 쌓인 외화유동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조원 규모의 인프라투자플랫폼을 만들어 투자를 늘리고 민자유치의 걸림돌을 제거해 공공 부문 투자에 민간 부문의 창의성이 살아 숨쉬도록 할 것이다.

넷째, 가계소득과 자산을 늘리고 생계비를 줄여 서민 · 중산층의 주머니를 든든히 하겠다. 저금리시대에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고 펀드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난 경우엔 세금을 내지 않도록 과세방식을 바꿀 계획이다.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가계소득 증대와 생계비 절감에도 더욱 힘쓸 것이다.

다섯째, 대내외 리스크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적용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 규제 합리화 조치를 연장해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가계부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7월에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기업부채도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으로 생존 가능성 있는 기업은 적극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과감히 정리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아울러 그리스 경제위기,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리스크도 상시 점검해 대응하는 동시에 여성의 임신 · 출산 · 육아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해 저출산 · 고령화에도 착실히 대비해 나가겠다.

임금피크제 통해 청년고용 창출하고 근로조건 개선

한 세대가 땀 흘려 나무를 심으면 다음 세대가 시원한 그늘을 얻는 것처럼 4대 부문 구조개혁은 다음 세대를 위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순간 반드시 심어야 하는 나무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활력 강화와 함께 4대 부문 구조개혁에도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선 노동과 교육개혁은 곧 '일자리를 위한 개혁'이라는 마음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고용을 창출하고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입법과 함께 비정규직 보호, 대-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1단계 노동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와 병행해 채용, 능력개발, 배치전환, 근로계약 종료 등 합리적인 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노동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2단계 개혁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개혁의 경우 학과 단위로 세분화된 인력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정원조정 우수대학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서 취업 성공사례를 대학 전반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금융규제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자본거래를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바꾸는 등 금융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으로 시장 간 경쟁을 강화하고 벤처캐피탈 3법의 차이를 없애는 등 자본시장도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공공 부문의 경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페이고(Pay-go; 법안 발의 시 재원대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는 등 재정개혁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비록 메르스 그 자체를 종식시키더라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메르스 사태가 완전히 종식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정부는 더 이상 "될까?"라는 의구심은 떨쳐버리고 이제 "된다!"라는 확신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만의 노력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정부와 함께 국민, 정치권,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하나가 돼 내수를 살리고 수출을 늘리고자 하는 노력이 한 방향으로 모아져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제 다시 한 번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경제의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 및 창업 거점으로 육성

- '기업공감 원스톱서비스' 7월부터 본격 실시
- 융합클러스터 연내 20개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융합연구단 운영도 활성화
- 제4이동통신사의 진입 여건 조성하고 요금인가제는 폐지

미래창조과학부는 수출부진, 메르스 여파 등 상반기의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고 하반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우선 전국 17개 시 · 도에 들어선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대기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의 상생 정착, 중소기업의 성장과 글로벌화 지원 등 창조경제 성과 창출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정부 R&D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가 R&D 시스템을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한편, ICT산업이 우리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난 3월 수립한 'K-ICT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 또한 지난 상반기에 있었던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 데이터중심 요금제 출시에 이어 하반기에도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가계통신비 절감 추세가 지속되도록 노력해 나간다.

17개 혁신센터, 창업선도대학 · 창업보육센터와 유기적 협력 강화

하반기부터는 전국 17개 시 · 도에 출범한 혁신센터를 기존 지역 인프라 ·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 특성을 살린 혁신 거점으로 본격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별 혁신센터가 창업과 사업화 지원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 내 창업선도대학, 창업보육센터 등과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망 아이템을 선별한 후 전담지원팀을 구성해 집중 지원한다. 또한 문화콘텐츠 · 농수산업 등 17개 혁신센터별 특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공기업 등과 연계한 테마별 분과위원회를 8월부터 구성 · 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창업기업 및 지역 중소기업 등의 글로벌 진출과 해외교류 확대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혁신센터에서 국내 창업기업과 외국 벤처캐피탈 간, 국내 창업기업과 엑셀러레이터 간 원활한 투자연결을 지원함은 물론 상품 · 서비스의 해외 판매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술기반 창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지원 플랫폼도 구축해 나간다. 중소기업의 기술애로를 단일창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업공감 원스톱서비스'를 7월부터 본격 실시하고, 혁신센터를 통해 온라인 창업 수요자 사전문진 서비스를 이용한 후 직접 혁신센터를 방문해 창업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정부 R&D 혁신방안'도 올해 말까지 조치를 완료한다. 우선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의 중소 · 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출연연별로 올해 중 집중 육성할 120여개의 '패밀리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 · 출연연-중소기업 공동연구실을 지난해 4개에서 올해 25개까지 확대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역량을 증진시키고, 정부 R&D로 취득한 장비의 소유권을 과제종료 후 국가가 다시 취득해 중소 · 중견기업에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정부 R&D를 통한 중소 · 중견기업 지원을 본격화한



이태희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담당관
lthee67@msip.go.kr

다. 이와 함께 정부-민간 중복투자 우려가 제기되는 개발 · 상용화 R&D 비중과 대기업 직접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정부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출연연이 미래선도형 기초원천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PBS(연구과제중심제도) 축소 등 예산구조도 개편한다.

또한 출연연이 기업 · 대학 및 다른 출연연과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융합클러스터'를 연내 20개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융합연구단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는 주요 기술 분야별로 투자 우선순위와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장기 R&D 투자전략'을 수립해 정부 R&D 예산안을 배분 · 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ICT 융합 신서비스 시장 개척…핀테크 기술 조기 상용화

ICT산업이 우리 경제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중장기 전략으로 마련한 'K-ICT 전략'도 본격 이행한다. 올해 중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사물인터넷 등에 활용되는 용도자유대역 주파수 확대, 정보보호산업 투자 활성화 대책 마련, 기가(Giga) 네트워크 실증단지 구축 등 국내 ICT산업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ICT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ICT R&D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ICT 특화형 인재양성 방안' 마련 및 'K-Global Startup 300' 선정 · 지원 등 ICT 인재 육성과 창업 활성화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ICT 융합 신서비스시장 개척 노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등과 협업해 핀테크기술의 조기 상용화 · 활성화를 추진하고, 3D프린팅 지역특화센터(경기 · 전주 · 대구 · 포항)를 구축해 3D프린팅 비즈니스 육성도 지원한다. 더불어 「방송법」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통합, 유료방송 기술규제 완화 등 융합 신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 UHD · 5G · 클라우드 · 빅데이터 등 주요 전략산업 육성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력 증진 및 소프트웨어 창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 · 시행과 함께 산업단지에 클라우드를 적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지상파 UHD와 이동통신의 상생을 위한 700㎒대역 배분 관련 제도정비를 마무리하고, 광대역 LTE 주파수 공급과 지상파 UHD의 선도적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속 추진해 온 가계통신비 부담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제4이동통신사의 진입 여건을 조성하고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등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도 더욱 가속화해 나간다.

이처럼 미래창조과학부는 올 하반기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혁신센터 등 그간 구축해 온 창조경제 플랫폼을 토대로 성과 창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 기술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과학기술, ICT는 물론 융합 신산업 분야까지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7월 9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제1회 I-Gen 에그데이(EGG Day)' 행사 모습. 에그데이(EGG Day; EDISON Group Gathering Day)는 에디슨과 같은 창의적 기술 및 아이디어 발굴에 관심이 있는 그룹이 모이는 날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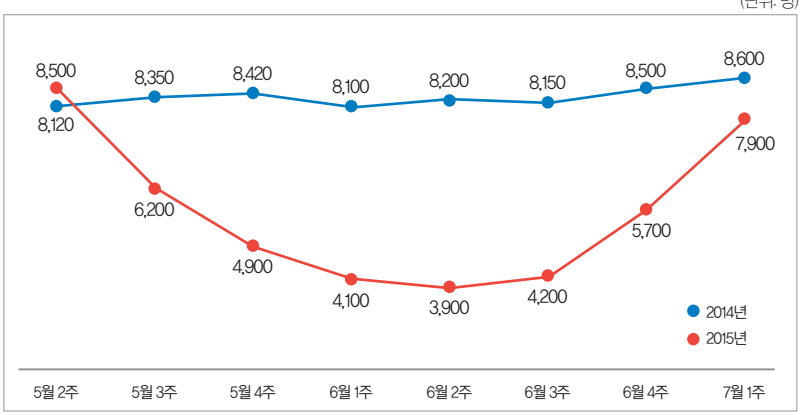
전국 지자체 하반기 추경예산 11조9천억원 편성

- 메르스로 피해 입은 영세 소상공인 및 농촌지역 농가에 저리대출 및 만기연장, 지방세 감면 및 납부연장 실시
- 하반기 최종 지방예산 134조원 집행 계획, 최종 집행률 87.2% 목표
- 지방비 매칭에 따른 자체 재원의 조속한 확보와 예산편성 유도

2015년 6월 대한민국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과 가뭄으로 휘청거렸다. 메르스로 인해 36명의 사망자(7월 15일 현재)가 발생했고, 격리된 환자가 한때 6,700명을 넘기도 했다. 또한 40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이 말라죽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식수가 부족해 제한급수를 하는 곳도 발생했다.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띠고 소비심리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던 시점에서 메르스와 가뭄은 내수침체와 수출부진 등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실제로 지난 7월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 4월에 발표한 3.1%에서 0.3%p 감소한 2.8%로 내다봤다.

〈그림〉 부산 자갈치시장 방문객 수

(단위: 명)



자료: 부산 자갈치시장 상인협회

다행스러운 일은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침체에 놓였던 지역경제 상황도 점진적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5월 초부터 7월 초까지 17개 시도별 주요 지역경제지표의 주 단위 추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지역에서 상가 매출액, 관광지 방문객 등이 메르스 발생 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일부 지표는 발생 전 수준을 넘어서기도 했다. 외부활동 위축으로 주춤했던 전통시장 방문객 및 열차 이용객 수도 6월 둘째 주를 기점으로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분야에 2조8,894억원 투입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한 직 · 간접적 지원과 홍보가 지역경제 상황이 조기에 회복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간 행정자치부는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 및 농촌지역 농가들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를 통한 저리대출 및 만기연장, 지방세 감면 및 납부연장, 민관합동 일손지원 및 농산물 구매 캠페인 등을 실시해 메르스 발생에 따른 지역경제 여파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여름철이면 항상 찾아오는 태풍, 폭우 등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산재해 있고, 그리스 디폴트 우려 등 유럽발 경제위기도 한층 고조



이우종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장
leewjong@korea.kr

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행정자치부는 2015년 하반기에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방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메르스, 가뭄 등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하반기에 11조9천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추경 편성된 12조2천억원을 포함하면, 올해 추경예산은 2015년 당초 예산보다 24조1천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하반기 추경예산의 중점 투자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분야 2조8,894억원(24%), 사회기반시설 확충 분야 2조9,088억원(24%), 사회복지사업 분야 2조2,704억원(20%), 공공질서 및 안전 등 기타 분야 3조8천억원(32%)이다. 대부분의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사업 추진, 메르스 피해업종 지원, 영세 소상공인 및 개인 자영업자 지원 등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투입될 전망이다. 추경 시기별로 보면 6~9월에 9조6,243억원, 10~12월에 2조3,702억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 재원은 지방세(4조원), 이전수입(국고보조금 등 4조원), 순세계잉여금(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잔액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등 3조9천억원) 등이다.



지난 7월 24일 부산 롯데백화점 주최로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블랙 쇼핑 데이' 행사에서 방문객들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12월에 몰아서 예산 집행하는 쏠림현상 방지, 이월 · 불용예산 발생 최소화

한편 이렇게 편성된 추경예산이 적기에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집행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하반기에도 상반기 조기집행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12월에 몰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쏠림현상을 방지하는 한편, 이월 및 불용예산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목표액 86조1천억원보다 1조7천억원 많은 87조8천억원을 집행해 계획 대비 102% 달성했다. 이는 최근 5개년간 집행률 중 가장 높은 규모이며,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분야 등에 집중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조기집행 기조를 하반기에도 유지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출납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에서 당해연도 12월로 2개월 단축됨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긴급입찰제도, 적격심사 기간 단축, 소액 수의계약 활용 등 각종 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존 사업은 신속히 집행하고 신규 사업은 최대한 앞당겨 발주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의 추경예산 편성과 연계된 국고보조사업의 적기 집행을 위해 지방비 매칭에 따른 자체 재원의 조속한 확보와 예산편성을 유도하고,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자금이 적기에 배정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등을 포함한 최종 지방예산은 약 30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상반기에 128조원을 집행했고, 하반기에는 134조원 정도를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 하반기는 전년도 최종 집행률 86.2%보다 1%p 높은 87.2%를 집행 목표로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할 계획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해에 비해 약 3조원 이상 더 집행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집행 상황을 일(日) 단위로 점검하고 필요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 ·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월 1회 시 · 도 부단체장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예산집행을 수시 독려하고, 연말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 · 포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하반기 지방재정 운용방향이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16조2천억원 무역금융 확대 · 공급

- 중국의 성(省) · 시(市)별 시장정보 제공하는 통합무역정보서비스 확대 · 개편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특별지원사업에 1,500억원 지원
-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조 개편, 주택용 3~4구간 통합

우리나라 경제는 그간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 2014년 말의 부진에서 벗어나 내수를 중심으로 점차 활력을 되찾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아직 생산과 투자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예기치 못한 메르스라는 경제 외적인 충격으로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대외교역, 즉 수출과 수입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 1월 전년동기 대비 1.0% 감소하던 수출이 5월에는 10.9%까지 감소폭이 확대돼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유가하락에 따른 단가하락과 세계 교역량의 둔화,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 생산 확대라는 구조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나라를 지탱해 주고 있던 수출의 지속적 하락은 우리 기업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반도체의 수요 증가, 자동차 등 신제품 출시 등으로 수출이 점차 회복될 가능성도 있으나 엔화 및 유로화 약세와 중국경제의 부진 등 수출 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제약요인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와 가뭄으로 피해 입은 지역경제 · 中企에 3,418억원 지원

이러한 인식 아래 산업통상자원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을 회복하고 내수와 수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첫째, 정부의 추경 편성에 맞춰 산업통상자원부도 3,418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의 기본방향은 무엇보다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인해 직 ·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했다. 특히 급격한 내수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확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중소 · 중견기업 수출경쟁력을 강화(70억원)하고, 무역보험기금(1천억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기타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지원을 확대(677억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특별지원사업(1,500억원) 등에도 추경을 통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의 단기적인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근본적인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9일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보고한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에 산업통상자원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우선 우리 중소 · 중견기업의 수출활력을 제고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역금융 · 마케팅 등 수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16조2천억원의 무역금융을 확대해 공급하고 해외 전시회 지원 및 대기업 해외 유통망을 활용한 마케팅 지원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무역방식을 통한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협업해 중국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온라인 특별 할인전'도 실시한다. 기업들의 FTA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의 각 성(省) · 시(市)별 시장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무역정보서비스(TradeNAVI)도 확대 · 개편할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
chn01@motie.go.kr



7월 6~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이미용 전시회 '코스모뷰티 아시아 2015'에서 우리나라 미용업체들이 바이어들과 수출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수출품목 및 시장의 전략적 다각화도 추진한다. 먼저 수출품목의 다각화를 위해 민간 유통사와 공동으로 글로벌 생활명품 및 지역특화상품 등 다양한 유망 소비재를 발굴하고 각 품목의 특성에 맞춰 맞춤형으로 해외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올 하반기부터 한국산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산 '정품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선진국 등에는 해외인증 획득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수출지역의 전략적 다각화를 위해 중동 · 중앙아시아 · 러시아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신흥시장 점유율 선점을 목표로 무역금융 및 마케팅 지원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해외 생산거점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베트남의 해외공동물류센터, 멕시코 금형기업 진출지원센터 등을 신규 개소하고 해외공장 설립 시에는 무역금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베트남 · 인도 등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큰 생산거점을 대상으로 각종 수출지원기관을 재배치하는 한편 우즈베키스탄, 중미 등 역내시장 진출이 용이한 거점국가와 FTA를 우선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알뜰주유소 선정방식을 최저가 낙찰제로… 화물복지카드 추진

이번 대책에는 이러한 단기대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다. 즉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의 혁신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다. 민간기업 등에서 준비 중인 91조원 규모의 선제적 설비투자(2015~2016년, 착수기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핵심 기자재의 수입관세 감면을 확대하고 주요 투자 프로젝트별로 전담지원관을 지정 ·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2~3년 이내에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모바일CPU 등 차세대 유망 품목의 선제적인 육성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6조8천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조세특례제도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 중소기업 수출경쟁력의 핵심인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성 혁신을 지원한다. 특히 엔 · 유로 약세의 피해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성 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끝으로 이러한 수출경쟁력 강화대책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민생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돼 있다. 우선 에너지 생활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조를 개편(7~9월 중 주택용 3~4구간 통합)함으로써 여름철 중산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복지할인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등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석유 관련 비용 부담을 경감할 것이다. 즉 알뜰주유소의 공급사 선정방식을 기존의 협상에서 최저가 낙찰제로 변경하고 할인 한도와 폭이 큰 화물복지카드 발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정책방향은 무엇보다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아무쪼록 이러한 대책이 실효를 거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수출이 경제성장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청년일자리 수요 확충과 함께 노동시장 개혁 과제 지속적으로 추진

-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3만5천명→5만명 이상으로 확대
- 청년일자리사업은 고용연계성 및 취업실적 우수사업 위주로 재편
- 연 1,08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도입

최근 고용상황을 살펴보면 지표상 지난해 고용흐름의 영향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일자리가 60만명 이상 증가했으나 올 상반기엔 30만명 수준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 사정은 더욱 좋지 못하다. 외환위기 이후 8%대를 유지하던 청년실업률은 올해 들어 10%대를 기록하고 있다. 중장년층의 조기퇴직 걱정 역시 여전하고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통상임금 · 근로시간 관련 입법 지연, 내년 정년 60세 의무화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가중돼 기업은 신규채용 규모 설정 등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고용상 어려움이 경제성장의 둔화와 함께 경제 ·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낙후된 노동시장 구조에 있다고 판단해 노동시장을 개혁하기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했다. 노사정은 노동시장 개혁의 큰 방향에 공감하고,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100여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다. 비록 일부 과제에 대한 이견 때문에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다수 개혁과제에 대해 노사정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이해를 높인 것은 성과라 하겠다. 정부는 노사정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년 60세 시행 이전 마지막 임단협 시기를 앞두고 현장의 노사가 가장 필요하면서도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개혁 제1차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시급한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했다.

내년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 감소분을 별도 정원으로 인정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자리 수요를 보다 늘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해외투자 · 정보화 등 청년고용 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증원하고, 내년 정년연장에 따른 퇴직 감소분(2년간 6,700여명)만큼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 정년연장이 청년들에게 고용절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세대 간 상생고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관광 · 문화 등 청년이 선호하는 서비스업 확충, 청년 · 벤처 투자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확대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선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청년고용 문제가 어려운 만큼 시장에서 청년일자리 수요 확충과 함께 정부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현재 청년들에게 인턴 기회 제공 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을 운영 중인데, 기존 3만5천명 규모였던 것을 5만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하던 것을 유망 중견기업에까지 확대해 청년들에게 보다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확대 계획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해 올 하반기부터 조기 착수할 방침이다.

미취업 청년 등에게 취업상담(1단계)→취업역량 제고(2단



김종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herekjy@naver.com

계)→취업알선(3단계) 등 단계적 · 통합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해 지원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2단계 취업역량 제고 프로그램이 현재는 내일배움카드제 등 훈련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청년인턴, 해외취업 지원 등 다양한 청년고용 지원사업과 연계해 보다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기존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업성과 위주로 전면 개편해 취업성과가 우수한 훈련과정은 대폭 확대하고 부진한 훈련과정은 통폐합하거나 효율화할 방침이다.

임금피크제 확산 위해 취업규칙 변경기준 · 절차 명확히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재정비하고 지역별 특화진출전략 마련을 추진한다. 정부 내 해외 청년일자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외공관 · KOTRA 등을 활용해 해외구인처를 집중 발굴하며 청년 진출 유망 지역별로(중남미 · 동남아 · 중동 · 선진국 등) 차별화된 맞춤형 진출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공관, KOTRA 등을 활용해 맞춤형 진출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5월 21일 개막한 '2015 KOTRA 글로벌 취업상담회'에 참가한 청년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 경영지원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대 · 중소기업 인재교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부처별로 산재한 청년일자리사업(약 1조4천억원)을 고용연계성 및 취업실적 우수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유사 · 중복사업은 조정해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 도움을 줄 계획이다. 한편 미래인재양성협의체를 운영해 대학개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6대 전공 계열별로 제공하던 인력수급 전망을 35개 학과 단위까지 세분화할 방침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청년-장년, 중소기업-대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상생고용을 이루는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17일 발표한 1단계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청 · 장년 상생고용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기준 ·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민간으로 확산을 유도한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신규채용할 경우 연 1,08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노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인력운영 합리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2단계 개혁 추진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맞춰 채용, 평가, 보상, 능력개발, 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 인력운영 전반에 걸쳐 합리적 원칙을 정립하고, 기간제 · 파견 관련 고용규제는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실직자 생활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개편방안 마련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것이다. 영세 사업장,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보험 ·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화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주거비 부담은 완화하고 건설투자는 확대하고

- 영구임대 · 50년 임대주택 중 15년이 경과된 단지 개보수해 임대주택 물량 최대한 확보
- 2개 이상 대지에 대해 일괄정비, 공동조경 등이 가능한 '건축협정제도' 확산해 건축물 정비 촉진
-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도 본격 추진

최근 국내 메르스 사태를 비롯해 중국의 경기둔화, 그리스 사태 등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소비여건 개선, 건설투자 활성화를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복 70주년을 맞아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인프라 확충사업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2만9천호로 확대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요즘 상황에서 임차인에겐 높은 전세가격, 월세 전환 모두 부담스럽다. 주거비 부담 상승은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는 만큼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노력이 절실하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행복주택 공급,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바우처 도입, 전세대출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반기엔 기존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재정비사업 이주시기 조정 등을 통해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3천호 늘려 2만9천호(영업인가 기준)로 확대하고, 영구임대 및 50년 임대주택 중 15년이 경과된 단지를 개보수해 임대주택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비사업이 집중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주시기가 겹칠 경우 지역 전월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단지별 이주시기를 조정해 파급효과를 최소화한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행복주택 공급,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바우처 도입, 전세대출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사진은 오늘 12월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강일지구 행복주택 예정지인 강일 11단지 아파트

두 번째로, 독거노인 ·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고령자 · 장애인에게 행복주택의 10%, 영구 · 국민임대주택의 5~8%를 공급할 예정인데, 이들을 위한 공공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학생 ·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게는 행복주택의 80%, 신혼부부는 추가적으로 국민임대의 30%와 10년 임대의 15%를 공급할 계획이며, 대학생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logkim@molit.go.kr

을 위한 행복기숙사를 추가로 확충해 약 5,500명이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다. 한편 주택 구매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처분해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차입자의 다른 재산까지 추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담보물(주택)만으로 상환의무를 한정하는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을 보급할 계획이다. 즉 주택을 처분해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출자는 차입자의 다른 재산을 추징할 권리가 없게 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책임성 있는 대출심사와 리스크 관리,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확대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새만금 한 · 중 경협단지 조성…통일시대 대비 인프라 확충

정부는 한 · 중 FTA 타결(2014년 11월)로 중국과 한층 가까워진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새만금 내 한 · 중 경제협력단지 설치를 추진해 왔다. 한 · 중 정상회담(2014년 7월)에서 주요 어젠다로 채택되기도 했으며, 지난 6월엔 새만금 산업단지가 한 · 중 FTA 산단으로 확정됐다. 이 경제협력단지에선 외국인 고용쿼터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통관 · 출입국 간소화 등 맞춤형 규제완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새만금을 대중국 진출의 전진기지,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협력단지 밑그림을 그리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이용률이 저조한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에 대해 수익창출이 가능하도록 복합개발을 활성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반시설 복합화의 대상 · 요건 · 절차 등을 규정하는 '기반시설 복합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한다. 기반시설 복합화가 확산되면 민간투자도 촉진하는 한편 침체된 지역의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2개 이상 대지에 대해 일괄정비, 공동조경 등이 가능한 '건축협정제도'를 확산해 건축물 정비 등을 촉진할 계획이다. 개별 토지 · 건물 소유자 간 협정을 통해 하나의 대지처럼 개발할 수 있는 건축협정제도를 활용하면 개별 대지를 각각 개발하는 것에 비해 공사비가 절감되고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 따라서 건축협정제도는 노후건축물 정비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SOC 공기업 간, 국가–지자체 간 SOC 등 투자 분담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정부 재정여력이 감소하고 있어 국비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SOC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와 공기업 간에는 수익자부담 원칙, 시설의 공공성 등을 감안해 투자분담을 합리화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설계비 중 일부를 도로공사가 부담하도록 하거나 휴게소 건설비는 국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그 예다. 국가와 지자체 간에는 역할에 따라 국고 지원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하천정비사업 중 친수시설(공원, 체육시설 등)의 조성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 분담률도 상향하게 된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통일을 위한 준비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제기됨에 따라 경원선 복원사업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경원선 복원사업은 2006~2012년 신탄리~백마고지역 구간 복원 후 중단됐는데, 백마고지 지역부터 군사분계선까지의 남측 구간(총 11.7㎞) 복원을 올 하반기부터 다시 시작한다. 우선 1차로 백마고지~월정리 구간(9.3㎞)을 복원한 후 잔여구간(월정리~군사분계선, 2.4㎞)은 남북합의 후 추진할 예정이다. 2014년 10월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사업은 우리 민족의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한반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할 기념비적인 사업으로 오랜 기간 발전이 지체된 접경지역에 새로운 활력소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를 뛰어넘어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준비도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0월 밀라노에서 열린 ASEM 정상회의에서 유라시아 복합 교통물류 네트워크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서울에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라시아 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국제적 어젠다로 제시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핀테크산업 활성화하고 가계부채 철저히 관리할 것

-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개설 등 추진
- 예 · 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 · 교체 허용
- 4대 서민금융 정책상품 공급규모 확대하고 금리부담은 경감

지난 2년여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창조경제 지원 및 금융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비전을 설정하고 창조금융 실천계획 등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아직 현장 체감도가 높지 않는 등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초부터 현장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금융감독 쇄신, 실물지원역량 강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장점검반을 통해 금융사를 일일이 방문(약 150개사 방문, 약 1,500명 면담)해 현장애로를 청취하고 신속하게 회신하고 있다. 그리고 감독당국은 솔선수범해 개인 제재를 폐지하고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기준을 제정하는 등 검사 · 제재 개혁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은행권 스스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꼼꼼히 심사하도록 유도하는 등 선제적 위험관리 방안을 지난 7월에 마련했다. 사진은 한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한편 이번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금융개혁 주요과제들이 담겨 있다.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핀테크산업 활성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거래소 구조개편,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외환제도 개혁과 중소 · 벤처 투자금융 활성화 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아울러 잠재적 리스크요인인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하고, 서민과 취약계층 금융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은행업무에 핀테크 접목 · 활용해 혁신적 서비스 제공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인 핀테크에 우리나라도 결코 뒤처져선 안 된다. 이에 금융위는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 전략(총 4단계)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전자금융업 등록절차와 심사항목을 간소화하는 등 핀테크산업 진입장벽을 제거(1단계)했다. 또한 핀테크 생태계 조성(2단계)을 위해 핀테크지원센터를 설치해 핀테크기업 상담을 지원하고 데모데이(Demo-Day; 스타트업이 개발한 데모 제품, 사업 모델 등을 투자자에게 먼저 공개하는 행사)를 통해 금융회사와의 연계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3단계)해 보안성 심의 및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등 각종 사전규제를 폐지하고, 다양한 서비스 활성화(4단계)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개설 등을 추진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도 도입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예금, 대출, 결제 등 모든 은행업무에 핀테크를 접목 · 활용해 혁신적 서비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kwondy92@korea.kr

를 제공할 것이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점포방문 없이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낮은 금리 · 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23년 만에 은행을 신규 인가함으로써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해 전반적인 은행경쟁력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50%까지)를 허용해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일반은행과 동일한 영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올해 중 1~2개를 시범 인가하고, 향후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추가 인가하는 단계별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거래소 구조도 개편할 계획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우수기업 유치, 영업범위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한 거래소 간 경쟁과 연계 · 제휴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데 반해 한국거래소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경쟁부재 등으로 국제적 흐름에 뒤처진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코스닥 · 코넥스 시장의 경쟁력 강화, 기업공개(IPO) 및 국제화, 거래소 외부 경쟁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 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거래소의 모습을 정립해 나갈 것이다. 수요자 · 시장 친화적인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하고 국제적 활동을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투자자에게 더 큰 편익을 주는 역동적 자본시장 조성에 기여하려 한다.

외환 · 세제 등 관계부처 협업과제 적극 추진

금융규제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간 여러 차례 규제 개혁이 있었지만, 아직도 규제가 금융의 자율과 경쟁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이번 금융규제 개혁은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과 함께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의 인식 · 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고자 한다. 우선 금융규제를 규제 목적에 따라 분류해 과도한 건전성 규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정비하고 영업행위 규제는 과감히 완화할 것이다.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이 향후 규제 · 감독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인식 · 행태 개혁도 중요하다. 금융당국은 그림자 규제를 근절하고 현장점검반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청취할 것이며, 금융권은 창의적 금융인이 인정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규제환경에 대비해 자체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 부처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외환제도 개혁, 중소 · 벤처 투자금융 활성화, 금융세제 개선 등도 부처 간 협업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먼저 외환규제 개혁을 통해 국민 · 기업의 대외거래 자율성을 높일 것이다. 또한 중소 · 벤처기업 투자금융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자금에서 민간 중심의 생태계로 전환한다. 경쟁적인 벤처캐피탈 산업구조를 형성해 벤처캐피탈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며, M&A전용펀드 확충 등 회수시장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세제를 개선해 펀드투자 원금이 손실이 난 경우 과세되지 않도록 하고, 예 · 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 · 교체를 허용하고 비과세하는 새로운 재산형성 수단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도입할 것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 적극적 관리도 실시된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다소 빠르지만 안심전환대출 등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전체적인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다. 다만 가계부채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면 향후 상환부담 등으로 소비가 위축돼 거시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경제 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은행권 스스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유도하고, 빚을 처음부터 나눠 갚는 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등 선제적 위험관리 방안을 지난 7월에 마련했다.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기관과 가계 등의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가계부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서민 ·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지난 2년간 국민행복기금과 4대 서민금융 정책상품(햇살론 · 새희망홀씨 · 미소금융 · 바꿔드림론)을 통해 서민들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 우선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부담을 경감하고, 성실히 상환하는 서민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는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징검다리론을 통해 서민의 제도금융권 정착도 지원할 예정이다. 탄력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자 재기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해 원스톱 서민금융지원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다.



1956	충북 충주
	한양대 기계공학 학사, 환경공학 석 · 박사
1975~1978	건설부 근무(7급)
1977	제13회 기술고등고시
1978~1992	문화공보부, 환경청, 환경처 근무
1992~2001	환경부 기술정책과장, 폐기물정책과장, 수질정책과장 등
1995~1997	독일 연방환경부 연수
2001~2004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환경정책국장
2004~2005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심의관
2005~2008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장
2008~2009	기상청 차장
2009~2013	한양대 연구교수
2013. 3~현재	환경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때_2015년 7월 20일 오후 5시
장소_장관 집무실(서울 종로구)
대담_이재열 나라경제 편집장

"우리와 다음 세대, 말 못하는 동식물도 보듬는 발상의 전환 필요"

박근혜정부 최장수 장관 중 한 분이십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지난 2013년 3월, 환경부 본부를 떠난 지 9년, 공직에서 물러난 지 4년 만에 다시 장관으로 환경부에 돌아왔습니다만, 2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하루하루가 취임 첫날처럼 긴장의 연속입니다. 끝까지 초심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이번에 인터뷰를 앞두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올 가뭄도 그렇고, 탄소 감축을 하면 기업이 반발하고 민간단체도 가만히 있지 않는 등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이 환경 분야 같습니다.

환경은 특히 더 해요. 다른 쪽은 이익이나 손해 보는 게 바로 나오는데, 환경은 안 그래요. 지금 살기도 바쁜데 10년, 20년 기다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하는 거죠.

항상 걱정을 어깨에 가득 얹고 다니시겠습니다.

그렇죠(웃음). 오늘이 7월 20일인데, 다른 경제부처들은 8월 1일이면 7월 성적표를 받잖아요. 수출 · 무역수지 · 청년실업률 등 성적표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환경은 한참 후에야 나타나니까 우리보고 너무 엑셀을 밟지 말라고 해요. 이쪽이 엑셀이면 그쪽에선 브레이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난개발 등에 브레이크를 안 밟아놓으면, 저도 아들이 둘 있지만 그 친구들 세상이 됐을 때 우리가 엄청난 부채를 남겨주는 거죠.

환경과 경제성장 간엔 그런 상충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셈이죠. 그런데 잘 생각하면 상충관계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감축을 통해 자기들 국제경쟁력을 더 높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지만, 환경규제는 기업에 부담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체질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경제성장을 유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거하면 나라 죽습니다. 경제 다 망가집니다." 이럽니다. 이게 생각을 달리하면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참 아쉬워요. 저는 지금 우리 경제구조가 어떤 임계점에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력업체의 희생에 바탕한 대기업 중심의 대량생산과 대량판매, 에너지 · 자원 다소비형 경제,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 진입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우리나라 기업계가 유독 환경정책에 예민해서 큰 틀에서는 이해를 하면서 각론에 들어가면 잘 적응을 못하는, 저항이 좀 있다고 할까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하루하루 느끼는 게 그거죠. 저는 우리 대기업의 기본이 취약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스마트폰이나 전기차의 경우 핵심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원천기술을 스스로 개발하고 세계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우리 대기업에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 한계 아래 어떡하든 국내적으로 짜내서 외국기업들과 싸우기도 바쁜데 '환경'에 신경쓸 여력이 많지 않은 거죠.

취임 후 굵직한 성과가 보이던데요.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우선 최근 일로는 두 가지 난제를 풀어낸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연장 문제에 대해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지사와 1년여간 지리하게 협의한 끝에 최종합의를 이룬 것과, 2030년 이후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밖에 구미 불산 유출사고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거 세 차례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제정한 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 일이 생각나네요.

장관께서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30~40년간 유지돼 온 대기 · 물 · 토양 등 개별 매체 중심의 환경 인허가 제도를 맞춤형 · 통합적 허가제도로 전면 개편했는데요.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려 합니다. 또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제정해 재활용 자원을 최대한 모은 후에, 모인 순환자원이 최대한 이용될 수 있는 자원선순환 사이클을 만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했는데요. 산업계와 민간단체 모두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감축목표치 37%를 설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에 확정한 37% 감축목표는 당초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됐던 4개안보다 더 진전된 겁니다. GCF(녹색기후기금) 유치국으로서 쌓아온 기후리더십과 국제사회 신뢰를 고려해 2020년 감축목표보다 후퇴하지 않으면서 IPCC(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 권고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설정한 것이죠.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미흡하다고 평하고, 산업계는 당초 가장 낮은 1안(14.7%)조차 감당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구조상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축수단 발굴과 이행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해외감축도 추진키로 한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볼 때 연착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시장이 과열되지 않고 차분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연착륙 조짐이라고 봅니다. 거래가 없다고 하는데, 배출권 거래제 시행 첫해에 거래가 부진한 것은 당연스런 현상입니다. EU도 첫해 거래수준은 지금의 1%밖에 안됐어요. 첫해에 왕성하다면 그건 기업별로 배출해도 좋다고 할당해준 온실가스량이 너무 많았거나, 아니면 유동성이 급해서 출혈성 투매를 한 경우 중 하나일 겁니다. 이는 정상적 시장이라면 일어날 수 없는 거래죠.

어찌됐든 지금 수요와 공급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이 잘 형성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게 아닌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이 회계연도와 같아요. 1년의 기간을 두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출한 양과 할당량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산서가 없잖아요? 결산서가 업체별로 내년 3월에 나와요. 그때 덜 썼다고 하면 그만큼 시장에 내놓을 것이고, 더 썼다면 시장에서 사올지 과징금을 받을지 등을 생각하게 되겠죠.

내년 3월이 되면 뭔가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겠네요.

그때면 아마 많이 움직일 겁니다. 지금은 중간평가도 안 되니까 거래가 일어날 여지가 없는 것이죠.

내년 시행을 앞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현재 준비상황은?

지금 하위 법령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거기에 담겨야 할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같아요. 기업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같이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사고 시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처럼 신속하게 배상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며, 국가는 보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원인불명 등의 피해에 구제급



"환경규제는 기업에 부담으로만 작용하지 않아.
기업 체질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경제성장을 유인할 계기"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반드시 조성될 것…
자원재순환 확대되면 조성 자체가 불필요해질 수도"

"'우리가 환경을 지켜주면 환경은 몇 배로 보답…
생활 속 작은 불편을 흔쾌히 감수하기만 하면
환경은 잘 보전돼"

여를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되고 환경책임보험제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는 제도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려 합니다. 일단 사업자의 최고배상책임한도를 2천억원으로 했는데, 이걸 기업 규모별로 재설정하는 작업에 들어가요. 보험 가입대상시설 선정, 최소 의무보험가입금액 설정 등 환경책임보험 상품을 준비하고 있어요. 보험개발원과 함께 보험요율 기준과 약관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피해구제계정 재원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최근 '친환경에너지타운'이 화제입니다.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번 호 『나라경제』도 '에너지 자립' 이슈를 기획하면서 홍천 사례를 다뤘습니다만, 막상 살펴보니까 주민들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었더군요. 반신반의하는 분들을 마을 이장분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동의를 얻어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자체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역할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이를 위해서 장관께서 특별히 신경쓰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뭐 장관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할 수도 있겠죠. 하하. 친환경에너지타운이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에너지 문제와 님비(NIMBY)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기피 · 혐오 시설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사업입니다만, 여기선 무엇보다 이 사업이 돈이 되고 마을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부로서도 관계 부처나 마을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면서 공감대를 넓혀가는 데 중점을 뒀죠. 중앙정부의 단독사업으로 오해하면 나중에 안 돼요. 지자체와 마을주민들이 사업 주체가 돼야만 책임감을 갖고 하지 아니면 방관자가 됩니다. 정부 지원으로 시업을 진행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지원이 끊겼을 때 자립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홍천은 가구 수가 57가구까지 줄었다가 다시 72가구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에너지를 자립한다고 해서 큰돈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퇴비와 액비(液肥)가 나오잖아요. 이것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그만큼 화학비료를 덜 쓰게 되고 판매도 할 수 있어요. 또 그동안은 에너지를 사다 썼는데 올 11월부터 바이오가스가 생산되면(약 77만m^3/년) 생산량의 6~7%밖에 안 쓰고 나머지는 다 팔거든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재생에너지가 많이 보급된 외국 사례를 보면 전기요금이 우리의 3~4배 비싸요. 에너지 요금이 오르면 수입이 더 늘어나겠죠.

우리가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생태 관광을 가는 것처럼 홍천에도 국내 타 지역에서 견학을 온다든지 개도국이 관광을 온다든지 하면 좀 더 수익구조가 탄탄해지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가 독일 윤데 마을인데요. 우리가 그 정도 되려면 한 10년은 사업을 진행해서 완전히 정상 궤도에 올려놔야 하는 것이 있구요. 두 번째는 덩치가 더 커져야 돼요. 지금 70여 가구는 너무 작아요. 200~300가구 정도로 더 모이거나 그게 힘들면 주변 마을까지 끌어들여 규모가 커져야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지난해 3개 시범지역 외에 올해 다섯 곳을 추가 선정했는데, 그 마을들도 얼마나 자립경제가 가능한지 가늠해봐야 돼요. 자립경영이 가능한 곳을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려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전기료가 너무 낮은 만큼 이를 현실화하는 쪽으로 관계부처하고 계속 절충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전기를 너무 많이 씁니다. 지금 1인당 전기사용량이 미국이 거의 세계에서 최고에요. 그런데 우리가 근접하고 있어요. 미국은 에너지 · 자원이라도 많지. 이런 구조에선 아무리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간들 의미가 적어요. 소득이 올라가는 만큼 외국에 나가는 돈이 많은데 이 통계에선 잘 안 드러나요. 그래서 환경경제통합계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연장 논의가 오랜 진통 끝에 지난 6월 28일 합의에 도달했습니다만 이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전제된 것인데요. 이를 놓고도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지금 서울 · 경기 · 인천은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에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게 돼 있습니다. 일단 103만㎡(3-1공구)를 쓰기로 했는데 만일 대체매립지를 마련하지 못하면 추가로 106만㎡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이 두 개를 다 쓸 동안에 찾지 못하면 공멸하는 거죠. 따라서 그전에 대체매립지가 반드시 조성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우리는 생활쓰레기의 9%가량을 매립하는데 지금 유럽에선 재활용 등을 통해 매립률이 제로에 가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국회에 제출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도 그렇게 가자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그런 쪽으로 자꾸 노력하다 보면 103㎡, 106㎡ 다 못쓰고도 수도권 매립양이 제로가 될 수 있어요. 대체매립지 조성 자체가 불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원재

순환이 확대되고 생활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등 생활 자체가 선진국형으로 가게 되면 말이죠.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중 · 고교 환경과목 선택률이 낮고 환경을 전공한 교사 임용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동기가 안 주어지면 잘 안하려고 해요. 환경도 수능 필수과목으로 들어가면 하지 말라고 해도 전부 할 텐데. 우리에게 환경에 대한 다급함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나온 거라 봅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 과목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깨닫고 지키게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 시골에서 클 때 집 담장 안쪽에다가 화단을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나팔꽃씨, 오이씨, 맨드라미씨를 뿌려놓고 매일 한 번씩 가봐요. 싹이 났나 안 났나. 싹이 조금 밀고 나오면 정말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파리가 나오고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피는 걸 보고. 이런 것이 진짜 교육이에요. 생명의 신비를 느끼게 되거든요. 요즘 산에 가면 꼬마들 손잡고 매미채 갖고 오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로 매미나 곤충을 잡기 시작하면 어린이에게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져요.

낮에는 일하고 야간에 공부해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모두 받으셨는데, 참 흥미로운 이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석 · 박사는 늦게 했는데요. 학사를 정말 힘들게 했어요. 낮에는 세종로 청사에서 당시 건설부 공무원 7급으로 일하고, 야간에는 대학 가서 수업 듣고 거기에 기술고시 공부도 했거든요.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20대 젊은 나이지만 체력을 다 소진해버렸어요. 그래서 야간은 죽어도 안 한다고 다짐했었죠.(웃음) 그런데 2005년에 제가 국립환경과학원장(1급)으로 가면서 보니까 이게 제대날짜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호적상 48살인데 벌써 제대날짜는 나왔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박사 학위를 받아서 뭔가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한 건데, 그때 기관장이었으니까 또 야간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학사도 석사도 박사도 야간에 다 했죠(웃음).

요즘 젊은이들은 열심히 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천에서 용 나기는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위축되고 희망을 잃은 우린 청년들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고 싶으신지요.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실제로 희망이 없어져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과거 가정사정이 어려워 학사과정 등을 야간과정을 밟아 취득했습니다. 그야말로 주경야독이었죠. 제 좌우명이 '성불고(誠不孤)'입니다. 논어 이인편(里仁篇)에 나오는 '덕불고 필유인'(德不孤 必有隣; 덕이 있는 자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의 덕(德)을 성(誠)으로 바꾼 것으로, "성실하면 언젠가 알아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저 스스로 그렇게 살아왔기에,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는 알아주고 인정받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현재가 아무리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더라도 희망을 갖고 성실하게 준비해나가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제주에서 제비를 보고 "2015년 5월 23일 아침에 일어난 실로 사반세기 만의 사건"이라고 감격해 하신 장관님 기고를 보았습니다. "자연이 주는 고품격 환경복지야말로 자연만이 선사할 수 있는 기쁨이고 국민행복의 종결자"라고도 말씀하셨는데요. 장관께선 평소 감동을 잘 받는 편이십니까?

성격이 세심하긴 한데 감동을 잘 받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웃음). 속으로는 감동을 받아도 겉으로 표현을 안 하죠. 화날 땐 표현을 잘 하는데. 하하. 사실 제비는 정말 놀랐어요. 육지에선 전혀 보지 못했는데, 거기에서 창문을 열고 있자니 두 놈이 놀고 있더라구요. 지난주 제주에 또 갔는데 역시 제비가 있더군요.

제비 보고 감동을 받는다는 건 좀 슬픈 일인데요.

그렇죠. 예전에 시골에서 클 때 보면 지금 이 시기엔 정말 거짓말 좀 보태서 하늘이 까맸어요. 제비가 처마에다 집을 짓잖아요. 마루에 앉아 있으면 거기서 들락날락하면서 제비들이 몰려다니고 정말 하늘의 절반이 까맸는데, 지금은 시골에서도 전혀 안 보여요. 우리 고향 가봐도 제비가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장관께서 일전에 하신 말씀처럼 "환경부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환경부를 응원합니다. 다른 경제부처들도 중요하지만, 환경은 마음의 고향이니까요. 이런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가 환경을 지켜주면 환경은 몇 배로 보답해줍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불편은 흔쾌히 감수하는 생활만 하신다면 환경은 잘 지켜질 것입니다. 양치질할 때 계속 수도꼭지를 틀어놓지 말고 필요한 경우에만 열어서 쓰는 것과 같이 생활 속에서 작은 불편을 우리가 흔쾌히 감수하기만 하면 환경은 저절로 지켜집니다. 그런 불편을 이제부터는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는 현세대뿐만이 아니고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 또 말 못하는 동식물 모두를 보듬어야 합니다. 잘 보듬어서 우리의 손자세대, 또 손자의 손자세대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꿈과 끼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해 환경부 직원 모두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THE KOREAN EMPIRE,
DREAMING OF A MODERN STATE

대한제국, 근대국가를 꿈꾸다

2015. 07.21.Tue – 09.13.Sun

상설전시관 1층 테마전시실
THEMATIC EXHIBITION GALLERY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ISSUE



올해 12월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선 신기후체제하의 온실가스 감축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그동안은 기후변화 당사국들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으나 신기후체제에선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중요하다. 저탄소 에너지 자립국가를 표방한 독일을 비롯해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새로운 관점에서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친환경에너지타운, 에너지자립섬, 에너지자립마을 등을 통해 주민참여와 공동체에 의한 새로운 에너지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축에서도 패시브하우스, 제로에너지빌딩 등과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나라경제』가 이러한 움직임들이 기존의 에너지 전략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지, 과제는 무엇인지 집중 탐구해 봤다.

정우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가스정책본부 위촉연구위원
wjchung@keei.re.kr



공급확대 정책 한계 드러내… 수요에 기반한 에너지 자립 필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공급확대 대책에서 벗어나 수요 부문에서 환경 친화적이며 분산된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사진은 서울시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으로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 태양전지에서 생산된 전기는 버스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가동에도 사용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산업발전과 함께 에너지 공급 부문에서 다각적인 에너지 확대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가 늘어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고 거대한 에너지 공급설비의 입지 문제로 지역 주민들의 저항이 높아지면서 공급확대 정책은 많은 한계를 노정시켰다. 이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공급확대 대책에서 벗어나 수요 부문에서 환경친화적이며 분산된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수요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자립 확대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며 ICT를 기저로 한 신성장산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나아가 분산시스템에 의해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중앙 집중의 장대한 에너지 설비로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을 축소시키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매체의 확산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부는 지난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과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는 중점 과제들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여러 대책들이 추진될 예정이지만 그중 가장 핵심은 에너지신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에너지신산업은 신재생에너지와 신기술 및 ICT를 기반으로 한 수요관리를 통해 생성된 자원의 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 융합형 기술집약산업이다. 특히 에너지신산업에는 지역 단위로 송배전망과는 분리해 마이크로그리드에 의해 독립적인 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주로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화석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는 사업모델들이 많다.

97%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에너지자립도 제고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들여 100일분 이상의 석유를 비축하고, 공기업을 통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했으며 에너지 공급 다변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불안 대응정책들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야 하고,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다각적인 공급불안 요인들에 전부 대응하기도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에너지 절약은 생산'이라는 말이 있듯 수요 부문에서 에너지 자립을 높이는 것은 곧 수요관리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본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신재생에너지가 주로 사용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면서 에너지 해외의존도도 축소하는 '질 좋은 에너지 자립'을 이룩하는 것이라 하겠다.

에너지신산업과 이를 통한 수요 부문에서 에너지자립도 제고 정책들은 기술발전을 수반하지 않고는 성공하기 어렵다. 수요자 시장이 작동하기 위해선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경쟁력이 확보돼야 하고 스마트계량기(AMI),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ICT 기반의 융합기술들이 발전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정부 주도의 R&D를 통해 개발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수요자 시장에서 기술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제한적인 발전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수요 부문의 에너지자립도 제고는 과거와 같이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를 통한 수요관리가 아닌 다양한 기술서비스에 의해 수요관리 시장이 형성돼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다양한 교차보조의 전력요금체계에서는 수요관리서비스 시장의 형성이나 이를 위한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어렵다.

현재 에너지자립섬,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신재생에너지와 마이크로그리드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자립 프로젝트들이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확대되려면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구조의 변화가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가격 합리화를 통해 시장 중심의 탄력적인 수요반응을 유인하면서 에너지 부문의 수요자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정책들이 우선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이일형
에너지경제신문 정책팀 기자
21083@ekn.kr



냄새나고 소외됐던 마을의 대변신… 환경과 에너지 문제 동시 해결



태양광 발전설비가 들어설 예정인 강원도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공공하수처리장

정부가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에 조성 중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우수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매립장이나 하수처리장 등 기피시설을 활용해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첫 삽을 뜬 홍천을 비롯해 광주와 충북 진천 등 3곳이 정부의 1차 시범사업 대상지다.

홍천은 특히 국내 최초로 자체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로 전환해 주민들이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간의 유사사업이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혐기성(嫌氣性) 미생물로 소화시켜 메탄가스를 생산하고 발전하는 형태였다면, 홍천은 한 발 더 나아가 생산한 메탄가스를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고 이를 정제한 도시가스로 재전환해 나눠 쓰는 방식이다.

하지만 홍천이 대표 사례로 회자되는 데는 정부의 첫 시범사업이라는 프리미엄 외에도 지역 주민들이 사업의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다른 사업주체와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실제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고형물은 퇴비로, 소화액은 액비로 각각 만들어지며 이런 생산공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 이를 통해 양질의 퇴·액비를 생산해 마을 농경지에 공급하고, 주민 일자리를 창출해 연간 5,200만원의 수익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소매곡리는 등유와 액화천연가스(LPG), 화목(火木) 등을 연료원으로 쓰고 있으나 향후 도시가스로 전환하면 가구당 연 91만원의 연료비 절감과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마을 전체로 환산하면 연 4,200만원의 연료비가 절감된다. 도시가스회사는 이를 통해 연간 60만㎥의 도시가스를 생산할 예정인데, 이는 750세대에 공급 가능한 양으로 인근 지역에도 남는 에너지를 나눠 쓸 수 있는 규모다.

홍천군 소매곡리 주민들이 처음부터 정부사업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 반대를 설득한 이 마을 지진수 이장의 숨은 노력과 주민여론 수렴 과정이 있었기에 마을의 분위기가 바뀐 것. 지 이장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하수처리장이 들어선 마을에 추가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적극 활용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설득해 주민 동의를 얻어냈다. "밤늦게까지 주민 설득을 하고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기에 그날 마신 커피를 세어 보니 40잔이나 됐다."는 그의 일화는 이미 유명하다.

이 지역에는 주민들이 직접 퇴·액비시설을 운영하는 영농조합이 지난 1월 설립됐으며, 태양광발전을 담당하는 특수목적법인(SPC)도 4월 28일 구성됐다. 이 법인은 마을 주민의 지분이 71%나 되며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확대·발전시킨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냄새나고 소외됐던 마을에 희망의 새바람이 불면서 떠났던 사람들도 돌아와 마을 가구 수는 57가구에서 현재 72가구로 늘었다.

환경부와 지역 주민들은 연말로 예정됐던 완공계획을 앞당겨 오는 10월에 에너지타운의 기본골격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홍천 강변을 따라 해바라기와 야생화 꽃길이 조성되며, 에너지홍보관과 농산물직판장, 관광객을 위한 카페테리아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도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바이오에너지 마을로 유명해진 독일 윤데 마을에 매년 전 세계에서 수천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은 물론이고 관람료 등의 관광수입도 짭짤하게 얻고 있는 데서 착안한 발상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이 환경과 에너지 문제뿐 아니라 관광자원화는 물론 이농현상과 고령화라는 고질적인 농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홍천의 한 마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귀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과장
guihyunlee@korea.kr



디젤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63개 도서에 에너지자립섬 추진

최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결정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는 신기후체제의 출범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창조적 발상의 전환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 아래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에너지자립섬은 에너지신산업의 대표 모델이다. 에너지자립섬 구축사업은 현재 섬에서 운영 중인 디젤발전기를 태양광 · 풍력 · 수력 ·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에너지 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을 통해 최적의 전력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사업이다.

에너지자립섬을 향한 노력은 2010년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날씨 변화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신재생에너지로 기름만 있으면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디젤발전을 대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한 전력의 생산과 저장, 제어 · 유지 · 관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태양광 ·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나라들도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태양광 · 풍력 ·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리고 ICT(EMS)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로서 그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제주도 가파도를 시작으로 전남 가사도 등 총 4곳에서 에너지자립섬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에너지자립섬 프로젝트는 연구개발과 실증 차원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추진됐다. 그런데 에너지자립섬을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된다. 가사도의 경우 R&D 성격이 강했지만, 민관합동으로 수십억원 이상이 투입됐다. 만약 지금과 같이 정부예산 중심으로 추진한다면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민간 중심으로 자립섬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민간이 자기자본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구축하고, 생산된 전기를 장기간에 걸쳐 판매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현재 도서지역의 발전원가는 전력판매가격보다 매우 높다. 그래서 판매손실분을 전력발전기금에서 보전해 주고 있다. 민간 중심의 에너지자립섬 구축사업은 도서지역 발전 부분을 민간에 개방해 경쟁과 시장원리를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손실보전금액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제주도 가파도를 시작으로 전남 가사도 등 총 4곳에서 에너지자립섬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진은 가사도의 풍력발전 · 태양광발전 단지

산업부는 전국에 120개가 넘는 유인도 중 전력수요가 커서 한국전력이 직접 관리하는 63개 도서를 대상으로 민간 중심의 에너지자립섬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부터 울릉도를 시범대상지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인구가 1만1천명이 넘는 울릉도를 태양광 · 풍력 · 수력 · 지열 등을 이용해 친환경 에너지자립섬으로 변모시키는 일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대형 프로젝트로, 올해 10월에 1단계 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지난 7월 6일에는 공모를 통해 덕적도 등 5개 섬을 추가로 에너지자립섬 대상도서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46개 도서에 29개 사업자가 신청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 정부가 도서지역의 발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정부 3.0), 도서지역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기업들의 투자리스크를 줄여준 것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앞으로 산업부는 2, 3차 공모를 실시해 궁극적으로 63개 모든 섬을 에너지자립섬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자립섬의 수출상품화도 추진 중이다.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발빠르게 실적(track record)을 쌓아 전력사정이 좋지 않은 섬을 많이 보유한 아세안 국가 등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별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기금의 자금을 활용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 및 대상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것이다.

"베트남 참전용사들의 에너지 사랑… 태양광발전으로 전기세 '제로'"

노성남 십자성위재공업사 전무이사



'지구 주름살 하나 펴보자.'는 각오로 평균 연령 72세 어르신들이 에너지 자립을 위해 뭉쳤다. 주인공은 바로 십자성 에너지자립마을(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이다. 노성남(70세) 십자성위재공업사(십자성복지공장) 전무이사를 만나 에너지 자립을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십자성'이란 마을 이름에 담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우리 마을은 베트남 파병에서 전상을 입은 해병대 출신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부산에서 출발한 배가 남지나해를 지나갈 때 '十'자 모양의 네 개의 별이 보인다. 그 별이 남십자성이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월남을 다녀왔다는 상징으로 우리 마을에 '십자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 1974년 마을이 설립될 당시만 해도 101가구였는데 지금은 46가구만 남아 있다.

에너지자립마을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2012년 서울시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자립마을을 모집했다. 강동구청에서 십자성마을도 한번 지원해 보면 어떻겠냐고 권유해 시작한 것이 벌써 4년이 됐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십자성 마을. 주택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우리 마을엔 '십자성마을회'라는 운영기구가 있다. 마을주민들이 회원으로 1974년부터 만 40년을 함께했다. 그러다 보니 한가족처럼 단결이 잘 된다.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지 않았나. 원전은 고마운 에너지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엄청나다. 일본은 땅덩이가 넓으니까 후쿠시마에 안 살면 되지만 우린 정말 갈 데가 없다. 후손들을 위해 우리가 투자를 하자고 설득했다. 다들 할아버지라 손주사랑이 끔찍하지 않나. 처음엔 시큰둥하던 회원들이 너도나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지붕에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한 집들이 많던데….

하하. 우리 마을의 자랑이다. 처음엔 우리도 절전부터 시작했다. 가정별로 에너지 진단을 받고 에너지절감목표를 정한 후 멀티탭 사용, LED등 교체, 창문틈새 바람막이 설치, 옥상텃밭 등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다. 절전만으로 첫해에 에너지를 12%나 줄였다. 모두 깜짝 놀랐다. 하지만 아무리 절약한다 해도 생산을 하지 않는 이상 한계가 있었다. '이왕 시작한 것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에 2013년부터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했다. 현재 30가구가 태양광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 올해 20가구가 추가로 신청해 연말이면 50가구가 된다.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면서 전기요금이 많이 줄었나?

물론이다. 가구당 3kW짜리 태양광발전기를 통해 한 달에 300kW를 생산한다. 이 정도면 웬만한 가정에서 쓰기엔 충분한 양이다. 현재 전기요금이 제로인 집이 우리 집 포함해 8가구나 된다. 전기를 많이 쓰는 집도 2~3만원대로 요금이 줄었다. 태양광발전기가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올해는 에너지자립마을 인센티브(100만원)도 없어 자부담이 더 느는데도 20가구나 신청을 했다. 에너지자립마을은 3년까지만 지원된다.

일반 주택이 아닌 아파트에도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나?

가능하다. 대신 설치를 베란다에 하는 거라 용량이 200W 또는 250W로 작다.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이 정도면 대형냉장고 한 대를 돌릴 수 있다. 가정에서 누진세 턱걸이는 면한다.

십자성 같은 마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에너지를 알고 배울 수 있는 견학 · 체험 과정을 많이 만들었으면 한다. 에너지관리공단에 가보면 정말 잘돼 있다. 어른인 우리도 새삼 느끼는 게 많은데 어린이들은 어떻겠나. 어렸을 때부터 이런 데 가서 한번이라도 보고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 우리 마을의 에너지자립률은 37%다. 이것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또 강동구청에서 운영하는 에너지 투어 코스가 있는데 우리 마을도 그 코스에 포함돼 있다. 에너지 투어 코스가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계획이다.

■ **유성임** 나라경제 기자

배성호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실 사무관
「패시브하우스 콘서트」 저자
bsh.kor@gmail.com



기존 에너지의 10분의 1만으로 쾌적한 실내… 공사비는 10~15년이면 회수



EU 등 선진국은 패시브하우스에 금융 · 세제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사진은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 세워진 6개동 354가구 규모의 패시브아파트(사진 제공: Team K2)

"여기가 정말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곳 맞나요?" 폭염이 쏟아지는 여름철, 관공서를 한 번쯤 방문해본 분들이라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특히 유리로 둘러싸인 날렵한 건물일수록 냉방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최근의 정부시책에 거의 속수무책이다. 아무리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동원해봐도 이미 거대한 찜통으로 변해버린 실내공간을 식히기엔 역부족이다. 이 같은 불편한 상황은 겨울철이라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냉골을 견디지 못해 두꺼운 파카를 입고 입김으로 손을 녹여가며 일을 하는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참고 불편하게 지내는 것과, 쾌적하게 지내기 위해 많은 에너지비용을 감수하는 것.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는 것일까? 아마도 패시브하우스라면 이 같은 질문에 조금은 색다른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 듯하다.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란 보일러나 에어컨과 같은 설비에 에너지를 투입해 실내온도를 조절하는 '액티브하우스(Active House)'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단열과 기밀(氣密)을 강화해 에너지 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토록 만든 건물을 말한다. 30cm에 가까운 두꺼운 단열재와 3중유리를 사용한 시스템창호, 폐열을 회수하는 환기장치와 여름철 일사를 차단하는 외부차양을 적용하면, 기존 에너지의 10분의 1만으로도 쾌적한 실내환경을 누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에너지를 쏟아붓는 즉시 새 나가는 '밑 빠진 독'이 아닌 한 톨의 에너지도 소중히 다루는 '보온병'과도 같은 구조에서라면, 에너지비용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도 쾌적하게 지내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패시브하우스를 도입하는 데 걸림돌은 있다. 바로 10~ 20%가량 추가로 소요되는 건축비가 그것. 하지만 이 또한 냉난방비를 기존 대비 90% 가까이 절감함으로써 10~15년 이내에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 특히 유럽처럼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될 경우 추가공사비를 10% 아래로까지 떨어뜨릴 수 있어 앞으로의 전망 또한 매우 밝다 하겠다.

이러한 개별건물 차원의 경제성을 넘어 우리가 지향하는 '에너지 자립 사회'를 위해서도 패시브하우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건물의 경우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는 24%,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선진국은 50%에 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효율화가 상당히 진행된 교통이나 산업 부문에 비해 개선의 여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만 있다면 생산해야 할 에너지 자체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에너지 자립에 이만큼 효율적인 수단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 점을 인식한 EU 등 선진국은 패시브하우스에 금융 · 세제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주택 외에도 관공서 · 아파트 · 학교 · 상업시설 등 거의 모든 건축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17년까지 패시브하우스,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를 목표로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공공청사 · 공공주택 등 다양한 선도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물론 패시브하우스가 아직은 낯설고 한편으론 부담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약간의 초기비용에 주저하고 있기에는 패시브하우스가 가져다줄 혜택이 너무도 크다. 사용자는 쾌적한 실내환경을 누릴 수 있고, 건축주는 생애주기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으며, 국가는 생산해야 할 에너지의 총량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 바로 패시브하우스다.

최정만
자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izzarder@gmail.com



'제로에너지' 기술 상당부분 확보… 경험 많은 기술자와 시장 키워야

우리나라가 현재 보유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제로에너지)은 약 10여동으로 추정되고 있다(비공식 집계). 아직까지는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나 지자체 시범사업으로 건립되고 있으며, 제로에너지의 기술적 가능성 타진에 의의를 두고 있다. 물론 주택과 같은 민간 분야의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제로에너지를 목표로 건립이 시도되고 있으나 정량적 평가를 득한 예는 극히 적다.

주택 이외의 준공 건축물 중 실제 거주자가 사용하는 건물로 제로에너지를 표방한 것은 성남시 삼평동우체국(2011년 1월)과 환경부 기후변화연구동(2011년 4월)이 유일하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완공된 이 두 건물은 각각 패시브와 액티브요소기술을 적절하게 접목시켜 제로에너지라는 목표에 다가간 사례이며, 이 시기를 즈음해 우리나라에서 패시브하우스라는 용어가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 뒤로 각종 연구과제와 지자체 지원 등을 통해 여러 개의 제로에너지가 시범적으로 완공돼 가고 있는 중이다.





성남시 삼평동 우체국(위),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동(전 기후변화연구동)은 패시브와 액티브 요소기술을 적절하게 접목시켜 제로에너지 목표에 다가간 사례이다.

제로에너지는 언급한 바와 같이 패시브요소기술과 액티브요소기술의 적절한 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제로에너지의 핵심 기술은 패시브도 액티브도 아닌 '적절한 조합'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제로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거의 모든 요소기술은 현재 그 가격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기술적으로는 이미 완성됐거나 완성돼 가고 있다. 문제는 각 건축물의 용도와 지역 또는 향 등 기타 특성이 반영돼 적용될 요소기술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것인데, 경제성은 이 부분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주거시설의 경우 그 패턴이 거의 일정하지만, 비주거시설의 경우는 이 조합 기술이 각별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목표 예산에 맞출 수만 있다면 제로에너지 구현은 의외로 단순하게 이뤄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개별 기술수준은 이미 상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사용하는 기술자의 경험적 측면에서는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는 해외선진국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 우리나라가 제로에너지 분야를 이끌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제로에너지를 구현하는 데 건축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기술을 '적절히 조합'하는 경험을 가진 기술자가 적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가장 절실하게 보강돼야 할 분야가 이 분야지만,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건축 분야의 특성상 그 발전 속도는 느릴 것이다.

대개의 경우 한 나라의 기술자 수준은 그 나라의 관련 기초 분야가 얼마만큼 탄탄한가에 달려 있다. 비록 속도는 느리겠지만 앞으로 나올 정보만이 아닌 지나간 정보를 정리해 차곡차곡 쌓을 필요가 있다. 이는 제로에너지가 미래기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로에너지는 경험한 기술의 조합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명사일 뿐이다. 이런 때일수록 건축의 기초를 다지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

또한 모든 기술은 그 기술이 갖는 가격을 떠나 이야기될 수 없고, 가격은 시장규모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특히 땅이 작고 밀집된 도시를 가진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의 적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까다로워 액티브기술의 시장규모가 커지는 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제로에너지 구현의 범위를 대지 내로 한정하지 말고 수준 높은 전력망을 이용해 대지 외부에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를 합산한 제로에너지를 구현해야 한다. 이것이 시장규모를 키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

마지막 과제는 다른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로에너지의 구현일 것이다. 이 부분은 앞선 두 가지의 과제를 풀면 저절로 풀릴 것이므로, 기초와 시장이 없는 한국형 제로에너지를 앞세우기보다는 '제대로 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홍도영
독일 Kramm & Strigl 실시설계부 팀장
bauhaushong@gmail.com



경작지 2m 아래 지열 활용한 '플러스에너지' 주거단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남동방향으로 약 두 시간 정도 차를 몰고 가면 6,600명 정도의 주민이 사는 뷔스텐로트(Wüstenrot)라는 그리 크지 않은 행정단위가 있다. 작지만 이 지자체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기존의 단순한 액티브적 요소를 강조한 에너지 공급대책과는 조금은 다른, 지역에 합당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뷔스텐로트의 에너지 자립 계획은 의식있는 주민들과 지자체 담당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2007년부터 시작됐다. 2년간의 분석과 가능성 검토 후 자치단체 의회에서 202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만으로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장기적으로는 플러스에너지 자치단체를 만든다는 계획을 2009년에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을 추진했다. 첫째, 관내에 지속 가능하고 적용 가능한 에너지원, 예를 들어 태양에너지와 경작지 지열 등을 이용해 공급망을 확충하고 둘째, 소비를 줄이기 위해 특히 건물 분야에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일 먼저 2012년 뷔스텐로트, 마인하르트(Mainhardt) 두 자치단체와 에너지공급업체가 공동으로 분할투자해 전체 에너지 공급을 관리하는 'emw'라는 새로운 업체를 만들었다. 두 번째는 포더레 피이바이데(Vordere Viehweide)에 25~34채(KfW 55스탠다드)의 단독 혹은 두 세대를 위한 플러스에너지 주거단지를 진행했다. 현재 약 70%의 대지가 분양됐고 1차 건물들이 공사를 완료했다.

플러스에너지 주거단지의 핵심은 경작지 2m 아래에 설치한 지열을 이용하는 브라인 시스템(brine system)이다. 보통 패시브하우스 건축에서 많이 적용되는 부동액을 섞은 브라인 배관은 지열을 열교환하는 시스템으로, 플러스에너지 단지 내 건물의 히트펌프 열원으로 냉난방을 하게 된다. 경작지를 빌려준 토지 소유주는 지열교환을 통해 얻은 열원의 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받게 된다. 부하조절 시스템은 주거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양을 분석하고 이에 준해 태양광을 통해 발생한 에너지를 건전지에 저장하거나 혹은 공공 전기망에 공급하는 것을 조절한다.

이 파일럿 프로젝트가 지자체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경제 및 에너지부의 300만유로(약 38억원) 지원과 슈투트가르트 기술대 지속가능에너지연구소(HFT) 그리고 태양 및 수자원연구소(ZSW), 슈투트가르트 공대 발전기술연구소의 동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팀은 초기부터 전체 과정에 대한 자문과 적용을 지원하고 이 프로젝트를 따라 적용하려는 지자체를 위해 모든 내용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한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주민과 산업 그리고 건축주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주민에너지단체를 설립하고 '에너지days'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며, 상설로 에너지 관련 이슈와 지원프로그램을 자문해 주는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 지역의 학교와 연계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나무심기 캠페인이다.

기존의 건물들을 에너지 면에서 개선하기 위해 연구팀은 현재의 모든 건물 상태와 에너지 소비를 계산하고 GIS를 바탕으로 3D모델을 만들어 그 결과를 시각화했다. 이 기본 데이터를 통해 정확하게 맞춤형 발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각각의 건물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에너지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지, 어느 지역에 추가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있다.





독일 뷔스텐로트의 플러스에너지 하우스 지구(위)와 경작지 지열배관을 위해 개조한 트랙터(사진출처: HFT Stuttgart)

앞으로 뷔스텐로트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고 발전계획서도 다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초기 단계부터 데이터를 구축하기까지의 과정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지역에 풍부한 농토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지역성을 볼 때 지역에 맞는 개발 가능성을 배울 수 있다.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heoe@snu.ac.kr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에 초점 맞춘 정책 나와야

21세기에 들어서자마자 미국 · 일본 · EU 등은 모두 장기 에너지정책을 내놓으며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미국은 2001년, 영국은 2002년, 일본은 2003년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2001~2003년 사이에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신기한 것은 그때 국제원유 가격이 배럴당 20달러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국제유가 상승을 미리 예측하고 다가올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해 중장기 에너지 대책을 내놓았던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01년에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2002년에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1세기형 정책을 시작했으나, 막상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국제원유 시장가격이 140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던 2008년 8월에야 발표했다. 한마디로 꼴찌를 한 것이다.

선진국 사례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정책의 목표가 단순히 에너지 안보 확보에만 국한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 문제도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또한 계획들은 기본적으로 자국이 보유한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데 바탕을 두고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추구하고 있다. 에너지자원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원칙에 충실한 것이다.

유럽은 확보하고 있던 북해유전과 프랑스의 원자력을 적극 활용하고, 여기에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라는 두 가지 새로운 축으로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했다. 대표적 예가 벨기에로, '50% 천연가스+50% 풍력으로 자립'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이면에는 북해유전의 가스와 프랑스의 원자력에 더해 자국의 풍부한 바람(wind)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LEEN(Learning Energy Efficiency Networks) 등 에너지절약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산업계 지원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중동 진출, 자원개발 등 공급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다가 에너지 기업들이 자국 내에서 셰일가스를 값싸게 그리고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한 덕분에 역시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다.

한편 중국 · 일본 · 한국 등 동북아 3국은 인구, 즉 에너지 수요에 비해 자국 내 에너지 공급원이 적어 원자력발전 확대 정책으로 두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이도저도 못하게 됐다. 중국은 그나마 시노펙, 페트로 차이나 등 자원개발 공기업을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육성하는 데 성공했으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산업 역시 세계 최고수준으로 성장시켰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동시에 정책을 세운 해외자원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두 축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09년에 발표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에너지 안보나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 대해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육성보다 사업비로만 투자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4일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육성정책을 발표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인프라를 에너지 분야에 활용한 새로운 산업들이다. 여기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에너지자립마을 등 민관이 함께 에너지 자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날 대통령이 제안한 '시장으로, 미래로, 세계로'라는 구호는 참으로 우리나라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이 기술경쟁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21세기에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해외자원 개발과 재생에너지 개발 그리고 에너지절약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들 분야가 기술개발을 통한 수출산업으로 육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산업의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은 현재의 국가 및 민간 R&D 그리고 OECD 최저수준인 전기요금으로는 미래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에 국민의 관심과 정부의 정책초점이 맞춰지길 기대한다.



중국은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성장시켰다. 사진은 중국 하미시 태양광발전소에서 작업자들이 태양전지판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뼛속까지 문화적 인자를 담아라!

김고금평
머니투데이 차장
dannykgp@gmail.com



〈生生 관가엿보기〉는 각 경제부처 출입기자들이 보고 느낀 공직현장 분위기, 기사에는 쓰지 못한 에피소드를 담아내는 코너입니다.

문화를 한마디로 요약하긴 어렵지만 가장 가까운 정의를 대라면 '자유'일 것이다. 하지만 문화를 정책으로 삼는 공무원 입장에서 자유는 선뜻 건네기 힘든 당근일지 모른다. 특히 경직된 사고, 소심한 결단력 등을 본의 아닌 특징(?)으로 체화한 공무원일수록 이 정의는 더욱 큰 거리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공무원에 대한 선입견도 여전히 유효한 듯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출입한 지 1년쯤 지나 이 선입견이 와르르 무너졌다. 지난 3월 전남 나주의 한 고깃집에서 열린 회식자리는 여타 부처와 다른 문체부 공무원들만이 지닌 개성을 드러낸 별난 특식이었다. 송수근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이 술이 서너 잔 돌자 "한 소절 뽑겠다."며 자진해서 흥을 돋웠다. 누가 시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서는 모습 자체가 '문화적'이었다. 송 실장이 맑고 고운 음색에 성악 창법으로 돈 맥클린의 '빈센트(Vincent)'의 첫 소절을 유려하게 부르자 시끌벅적하던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다. 딱딱하고 보수적인 공무원에 대한 편견도 실크 같은 영어 발음에 씻겨 나갔다. 앙코르가 쏟아지자 송 실장은 내친김에 성악 1곡과 팝송 1곡을 잇따라 추가했다. 알고 보니 그는 지난해 「매력을 부르는 피아노」라는 반주법을 소개하는 책자도 낸 '숨은 예술인'이었다.

이 광경을 그냥 지나치기 힘들었는지 갑자기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있던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원장이 기자가 가져온 기타를 빌려달라며 "한 곡 하겠다."고 자청했다. 그는 기타를 잡자마자 엘비스 프레슬리와 같은 포즈를 잡고는 사이먼&가펑클의 '더 박서(The Boxer)'를 연주하며 노래했다. 문체부와 콘진원 직원, 기자단 등 관객 30여명은 대박이라며 놀라워했다. 평소 무게 있는 표정으로 카리스마를 잃지 않던 송 원장은 아르페지오 주법의 기타 실력과 중저음의 매력적인 음색을 선보였다. 콘진원 직원들은 "아니, 우리 원장님한테 저런 매력이 있었어?" 하며 수군거렸고 참석자 모두 '오늘의 스타'라며 치켜세웠다. 서먹했던 분위기는 두 고위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로 확 바뀌었다. 그 후 식당문이 닫힐 때까지 참석자들은 '세시봉 분위기'를 내며 추억의 노래를 연달아 소화했다. 식사가 끝난 뒤 기자단과 공무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게 진짜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했다. 참석 기자 중 한 명은 '다른 부처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라며 웃었다.

현 정부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정책 중 하나가 '문화융성'이다. 문화 부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권리를 찾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려면 문화의 진짜 정의를 파악하고 이를 구성하는 정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 관건이다. 책상 위에 무더기로 쌓인 그럴듯한 보고서와 이론이 문화정책에 실질적 효과를 줄 수 있을까. 그런 정책들은 지금까지 난무하다 못해 폐기되거나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지 않았나.

소박한 고깃집 현장은 문체부 공무원의 '살아 있음'을 작게나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고위 공무원들이 노래를 부를 때 보였던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열정의 끝에서 마지막으로 내비치려는 그 순간의 행복감이 얼굴 곳곳에 묻어 있었다고나 할까. 마치 "왜 나의 이 숨은 끼와 열정을 꺼낼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하고 묻는 듯했다.

문화가 성공하려면 '자기 감동'에서 출발해야 한다. 스스로 감동하지 못하면 대중에게 감동을 줄 수 없는 가수처럼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 역시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느끼고 싶은지 알고 싶다면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비록 일부 공무원의 행동일지라도 타인을 감동시킬 준비를 위해 자신을 감동시키는 일련의 연출은 문체부 공무원이 지닌 미덕 중 하나다. 정형화된 옷을 입고, 격식에 얽매인 모습이라는 외형 속에 그들이 지닌 내재적 인자는 언제나 개성과 끼로 무장한 문화 마인드라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는지도 모른다.

문체부 공무원들이라면 한 발짝 더 나아가도 괜찮을 듯하다. 자기 감동에 이어 어울려 놀 줄 아는 문화에도 합류하라는 것이다. 더 놀고 더 삐딱해야 문화의 본질을 이해한다. 뼛속까지 문화적 인자를 담을 때, 의미 있는 정책이 실현되는 게 아닐까.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당선에 대한 소고

역대 세 번째 한국인 UN기구 수장 배출에 즈음하여



조승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
cshwan21@naver.com

지난 6월 30일 영국 런던에선 전 세계 해양 분야 종사자라면 누구나 주목하는 큰 선거가 치러졌다. 해운 · 조선산업의 안전 · 환경 관련 국제기준을 제정하는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차기 수장인 사무총장을 40개 이사국의 투표로 선출하는 날이었다.

IMO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이고 연임이 가능한데 현 사무총장이 연임포기를 선언해 올 12월 31일자로 임기가 끝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덴마크 · 러시아 · 사이프러스 · 필리핀 · 케냐 6개국의 사무총장 후보가 출마했다. 선거는 40개 이사국 표의 과반수인 21표를 득표하는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최저 득표 후보를 한 명씩 탈락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거 당일 현장에 있었던 필자는 감격적이고 역사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1차 투표에서 10표를 득표해 12표를 얻은 덴마크에 이어 2위였던 우리 후보가 2차 투표에서 14표를 얻어 10표를 득표한 덴마크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마지막 5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탈락후보들의 표를 대거 흡수하며 26표 득표로 당선되는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졌다. 故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반기문 UN 사무총장에 이어 우리나라 역사상 세 번째 UN기구 수장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준비된 스페셜리스트에게 주어진 기회

IMO는 해사안전 및 해양환경 기술기준을 제정하는 UN 전문기구이기 때문에 영국 · 노르웨이 · 덴마크 · 독일 등 유럽의 전통적 해양 국가들과 미국 · 캐나다 · 일본 등 선진국의 기술전문가들이 여론을 주도하는 핵심적 이너 서클(inner circle)을 형성해 왔다. IMO 사무총장은 아무리 개인적인 역량과 자질이 뛰어나더라도 어느 날 혜성같이 나타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개인적 역량과 IMO 활동경력을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은 전문가 중 한 사람이 국가 지원을 등에 업고 치열한 선거전에서 마지막까지 생존해야만 진출할 수 있는 자리다.

우리나라는 국제적 인지도와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임기택 부산항만공사(BPA) 사장을 후보로 결정했다. 임기택 후보는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해군장교로 복무한 뒤 6년간의 상선 항해사 경력을 쌓은 후 공직에 입문했으며, 이후 줄곧 해사 분야라는 전문 영역의 한 우물에서 해사안전정책과장, 안전관리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공직기간 중에는 IMO 전문위원회 의장, 런던 IMO 연락관, 주영대사관 해양수산관을 거치면서 국제해사 분야의 인적네트워크까지 갖추며 국내외적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국제해사 전문가로 발돋움하게 됐다.

임기택 사장은 공직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행정고시 출신은 아니다. 민간경력 특채 사무관으로 임관해 약 30년간 선박기술 관련 보직을 섭렵하며 차근차근 전문성과 국제적 인지도를 키워 나간 것이 한국인 최초의 IMO 사무총장 당선이라는 값진 결실로 맺어진 것이다.

지난 3월 30일 임기택 사장의 IMO 사무총장 입후보 등록을 마친 후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IMO 사무총장 선거지원 합동TF를 구성해 장 · 차관이 직접 전면에 나서 전방위적인 지지교섭 활동을 지휘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장관이 투표권을 가진 IMO 이사국들을 수차례 방문하고, 차관과 함께 서울 주재 이사국 대사들을 차례로 면담하며 지지를 요청했다. 외교부에서도 장 · 차관이 정상회담 또는 각료급 회담 등 계기가 있을 때 주요의제에 포함해 지지교섭을 했으며, 재외공관에서는 주재국 정부부처를 문턱이 닳도록 방문하며 우리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 해군 · 민간도 발 벗고 나섰다. 전방위적 지지교섭 활동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결정적인 전환점은 대통령의 남미 순방이었다. 후보자를 내지 않아 사무총장 선거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중남미 국가에서 제일 먼저 우리 후보 지지를 서면으로 확인해 주는 낭보를 전해오면서 지지교섭 활동성과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우리 후보도 선거 전까지 2개월 동안 30여개 나라의 정부부처를 시차에 아랑곳하지 않고 쉴 새 없이 찾아다니는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면서 자신의 차별화된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거 직전까지 40개 이사국의 1차적 지지성향 분석에서 우리 후보의 예상득표는 가장 강력한 덴마크 후보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결선투표 방식을 감안해 우리 후보 지지를 표명하지 않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국 후보 또는 지지후보 탈락 시 우리나라 후보에 대한 지지 약속을 받는 교섭활동을 선거 직전까지 실시해 2차 투표 이후부터 차수를 거듭할수록 탈락표 흡수에 가속을 붙이며 우리 후보가 최종 결선투표에서 압도적 표 차이로 승리하게 됐다.

UN기구 선거는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도 중요하지만 국가





지난 6월 30일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린 제9대 IMO 사무총장 투표에서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26표를 얻어 선출됐다. 1) 임기택 IMO 사무총장 당선자(왼쪽)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2) 투표를 하고 있는 유기준 장관(사진 제공: 해양수산부)



친환경 선박, e-내비게이션 등 혁신적 선박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국제기준이 IMO에서 채택되면 천문학적 규모의 세계시장이 형성될 예정이다. 사진은 현대삼호중공업이 건조한 9천TEU급 컨테이너선으로, 소음 · 진동 및 탄소배출량을 줄여 고효율 에코십(eco-ship)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 외교적 지원활동이 없이는 당선이 사실상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춘 6개국 후보 중에서 우리 후보가 승리한 것은 오랜 기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후보의 개인적 역량과 정부의 치밀한 선거대응 전략이 만들어낸 '총체적 협업의 결정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새로운 국제규범 주도하는 국제해사 선진국으로 발돋움

17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IMO는 선박의 안전 · 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국제규범을 제정하는 기구로 전 세계 해운 · 조선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예컨대 1996년 IMO가 유조선의 이중선체 구조를 강제화함에 따라 대형 유조선 발주가 이어지고 선체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조선 1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 최근엔 수억원에 달하는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설치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우리나라 업체들이 세계시장의 절반을 선점하면서 조선기자재산업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든 바 있다.

2014년 국내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지난 1981년부터 2013년까지 33년간 IMO에서 채택된 국제기준이 우리나라 관련 산업에 미친 경제적 영향은 약 153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친환경 선박, e-내비게이션(e-Navigation) 등 혁신적 선박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국제기준이 IMO에서 계속 채택되면 천문학적 규모의 세계시장이 형성될 예정이어서 IMO의 경제적 파급영향은 계속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6년부터는 모든 회원국들이 IMO의 안전 · 환경 관련 국제규범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IMO로부터 의무적인 감사까지 받아야 하므로 IMO의 역할과 영향력은 더욱 막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우리나라는 사무총장 배출국으로서 더욱 성숙된 해사역량으로 IMO 정책을 주도하고 산업계와 함께 새로운 국제규범을 주도해가는 명실상부한 국제해사 선진국이 돼야 한다. 이번 임기택 사장의 IMO 사무총장 당선이 해운 · 조선산업 부흥의 주춧돌이 되고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도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국제기준을 수용해서 이행하면 된다는 수동적 대응수준에서 벗어나 우리 기술력과 입장을 반영해 국제기준의 제정을 선도하는 '룰 메이커(rule maker)'가 되기 위해선 국내외 IMO 전담 대응기능을 강화하고 국제해사 전문인력 양성체계도 새로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UN 수장과 UN 전문기구의 수장을 배출한 국가의 품격에 걸맞은 노력 또한 필요하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빈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이룩한 성장 노하우를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가야 하며, 우리 국익에 직결되지 않더라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의제에 대해서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번 IMO 사무총장 당선으로 우리나라 해양외교의 저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담당 국장으로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감격을 향유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해양업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해사강국으로 도약시키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엄중한 책임감도 함께 느끼게 됐다. 우리나라가 해운 · 조선 분야의 국제적 트렌드를 선도하고 국제사회에서 모범적 국가로 주목받으며 바다에 뜻을 둔 많은 열정적 젊은이들이 제2, 제3의 임기택을 꿈꾸면서 도전하는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이완 서예 · 캘리그라피 작가
wanted179@naver.com



입으로 하는 말보단 손으로 하는 말이 편하여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필기도구로 세상에 소리치는 글씨를 쓴다. 하지만….



점 선 면 그리고 흑과 백을 쓰며
눈이 아닌 마음으로 읽기

전시장에서 글씨작품을 관람하는 사람들은 화선지가 머금은 단어나 문장을 한 글자 한 글자 눈으로 따라 쓴다. 그 눈에 눈물이 고이고, 입에선 한숨과 웃음이 나오며, 때론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저마다의 표정을 만들어낸다. 그들은 모두 문자를 보고 읽으며 느끼고 있다. 문자는 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기호체계이며, 세월의 체에 걸러진 우리의 약속이다. 때문에 얼마나 잘 읽히는가 하는 가독성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인간이 창조해낸 문자의 습관화로 우리는 때론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며, 문자를 문자로만 받아들이려는 습성이 생겨버렸다.

미술관에서 어떤 그림을 감상한다고 생각해 보자. 오른손이 왼손에 붙어 있고, 눈이 세 개며, 코가 삐뚤어진 작품을 본다면, 잘못 그린 틀린 그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술적이라 생각하며 화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를 고민할 것이다. 하지만 글씨작품에서 점, 획을 가감하거나 글자를 삐뚤게 쓰거나 간격, 크기 등이 들쭉날쭉하다면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평하거나 오자(誤字)라 지적할 것이다. 이것은 문자를 문자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다.

서예와 캘리그라피는 문자적 미감을 포함한 광활한 영역의 예술 학문이다. 여기서 문자는 절대적 요소이며, 그래서 쓰고 읽는다는 행위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쓴다는 행위는 문자의 이미지적인 연출과, 문자로써의 단순한 의사소통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붓끝으로 내뱉은 그 획 하나에 어떤 무수한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 말과 노래 역시 가슴속 깊이 들었을 때 비로소 숨겨진 목소리를 듣게 되듯, 활자와는 다르게 서사자의 정신이 손끝에서 모필(毛筆)로 전해진 함축적인 아름다움을 보아야 한다. 점과 선, 그리고 선이 모인 글자와, 글자와 글자가 모인 단어와 문장 그리고 그 반대의 여백 속에 숨겨진 서사와 기록 이상의 은유를 보아야 한다.

오늘은 어떤 문자로 문자를 보낼까.



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

개천에서 용이 사라진 시대

가난한 집안이나 변변하지 못한 부모에게서 훌륭한 인물이 나는 경우 우리는 '개천에서 용 났다.'라는 속담을 쓰곤 한다. '자수성가(自手成家)'형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말을 듣지 못하고 쓰지도 않게 됐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부모 교육수준 · 직업지위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좌우

2010년「사회복지연구」에 발표된 신명호 교수의 논문은 부모의 학력과 직업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러한 현상이 어떤 연유에서, 어떤 매커니즘을 거쳐 나타나는지를 밝혔다. 사례분석 결과 고학력 중산층과 저학력 노동자 · 저소득층 사이엔 교육에 관한 가치관과 교육열망 정도, 자녀를 공부시키는 방식 및 양육관행 등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이 논문에선 부모가 겪은 생활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풀이한다. 고학력 중산층은 좋은 대학의 위력을 스스로 체험했고 자녀세대가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략임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반면 후자는 일상생활에서 낮은 학력으로 인한 차별과 학력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고 있으며, 계층상승의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체험한 바도 없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서 성취할 수 있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지 못한다. 이러한 부모의 교육수준 및 직업(지위)이 자녀의 학업에 개입하는 정도와 방식의 차이를 결정짓고,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사무엘 볼스(Samuel Bowles)와 허버트 진티스(Herbert Gintis)의 논문(2002년)에서도 부모 세대의 부와 소득은 자녀의 학업성취 · 소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가 소득 10분위(91~100%), 즉 최상위 계층일 때 아이들도 최상위 계층일 가능성은 26.7%인 반면 최하위 소득 계층(0~10%)의 자녀가 마찬가지로 최하위 소득 계층에 포함될 가능성은 32.2%임을 보여주고 있다. 상위 계층의 자녀들은 커서도 계속 상위 계층에 머물고 하위 계층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하위 계층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세대 간 계층이동의 상관관계 변화를 살핀「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2015년)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국 20~69세(2013년 기준) 성인 남성 1,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본인의 조부로부터 아들까지 4대에 걸친 시기의 세대 간 계층 대물림이 본인에 이르러 낮아졌다가 다음 세대에 다시 높아지는 U자형 추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수준의 정도를 뜻하는 학력 상관계수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는 0.656에 달했으나 아버지와 본인 사이는 0.165로 급격히 떨어졌다. 상관계수가 높다는 것은 학력의 대물림(고학력-고학력, 저학력-저학력), 즉 부모의 학력을 자녀가 그대로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으로 평가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관계수도 할아버지-아버지-본인에 걸쳐 0.599에서 0.449로 낮아졌다.

'계층 간 사다리'에서 '계층 간 장벽'이 된 교육

그러나 본인과 아들의 학력 상관계수가 0.398로 다시 높아졌고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관계수도 0.6으로 올라갔다. 세대 간 계층이동이 원활히 진행되다가 최근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음을 조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서울대 진학률도 타 지역과 서울 지역 학생들 간 격차가 벌어지고, 특목고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서울 등 대도시와 지



서울시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열중하고 있다.

방 간 경제력 및 입시정보 접근성의 차이가 학력 격차로 고스란히 이어지면서 계층이동의 장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계층 간 사다리 역할을 했던 교육이 경제력을 등에 업고 이제는 반대로 계층 간 장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70년생 영국 아동들을 추적 조사한 자료(1970 British Cohort Study)를 이용한 파인스타인(Feinstein, 2003년)의 연구결과는 이러한 '금수저'(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식을 일컫는 상징적 의미)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생후 22개월에 인지능력이 상위 10% 수준이던 저소득 가구 아이는 성장할수록 인지능력이 하락한 반면 인지능력이 하위 10% 수준이던 고소득 가구 아이의 인지능력은 점점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천부적 인지능력과 상관없이 120개월(10세) 무렵에는 좋은 환경을 가진 아이는 높은 지능으로, 나쁜 환경을 가진 아이는 나쁜 지능으로 양분돼 수렴해 간다는 것이다. 좋은 지능과 뛰어난 잠재력을 갖고 태어나도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힘들어진 세상이 됐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와는 조금 다르게 2012년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분석자료에 따르면 부모의 직업과 아이 성적 사이의 상관관계가 나라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이 자녀의 학업성취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국가는 뉴질랜드다. 그렇지만 홍콩이나 핀란드, 한국의 경우는 OECD 평균에 비해 부모의 직업이 아이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작았다. 결국 부모의 직업은 아이의 학업성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교육제도나 시스템에 따라 그 영향력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논문이나 보고서들은 부모의 부와 소득이 자녀의 학업성취 및 소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전자전(父傳子傳). 아버지의 성격이나 행동, 생활습관 등을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아 같거나 비슷해지는 것을 뜻하는데, 앞으로는 물려받는 목록에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지위가 추가돼야 할 것 같다. 활발했던 계층이동이 어려워지고 그나마 유일한 통로였던 교육도 이미 상위계층이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 그 좁고 유일한 통로를 어떡하든 통과하기 위해서일까? 우리의 대다수 부모들은 자식에게 아낌없이 교육을 시키고 있다.

지난 2월 한국소비자원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3천명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교육비로 1인당 월평균 37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사교육을 받는 연령도 점점 내려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아이를 학원에 보낸다는 응답이 41%를 차지했다.

사회적 약자에게 좀 더 많은 지원과 배려를

오늘도 수많은 '이무기'들이 '용'을 꿈꾸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부모가 자식의 교육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에서 이제 분명한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좀 더 많은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기회균등의 원칙을 조금이나마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미국에서 주립대 입학이나 공무원 채용 시 인종이나 소수계를 우대하는 소수 계층 우대 정책)'처럼 우리도 기회균형선발제 확대와 재정적 지원 확대(예를 들면 등록금과 함께 생활비 지원 장학금 제공) 같은 저소득층 우대 정책이 요구된다.

■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

* 이 글에서 소개한 논문들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 신명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1권 2호, 2010.
- 김희삼,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KDI FOCUS 통권 제54호, 2015.
- Samuel Bowles and Herbert Gintis, "The Inheritance of Inequality",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6, No. 3(Summer, 2002), pp. 3~30.
- Feinstein, Leon, "Inequality in the Early Cognitive Development of British Children in the 1970 Cohort", *Economica* 70(277), 2003, pp. 73~97.

어디에 어떻게 진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상품의 운명. 변화의 광풍에도 살아남은 진열의 한 수를 세계의 전통시장에서 배워본다.



사식통조차 전통적인 것을 사용하고 있는 향신료 매장



향신료를 삼각형으로 곱게 쌓아서 진열

똑같은 물건은 있어도 똑같은 진열은 없다

터키 이스탄불 그랜드 바자르(Grand Bazaar), 이집션 바자르(Egyptian Bazaar)

에페소, 파묵칼레, 카파도키아를 거쳐 인류 문명의 박물관, 터키에서도 가장 특별한 도시 이스탄불에 도착했다.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은 '인류 문명의 야외 박물관'이라 불린다. 그 이유는 도시 어느 곳을 가더라도 페르시아 · 비잔틴 · 셀주크 · 오스만제국에 이르는 각양각색의 동서양을 아우르는 찬란한 문화유산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서양이 조화된 아름다운 문화는 박물관뿐 아니라 시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스탄불의 그랜드 바자르(Grand Bazaar)는 세계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규모를 가진 시장이다. 18개의 출입구와 4천개 이상의 상점들이 들어서 있다. 세계 최초로 지붕을 덮은 시장으로도 유명하다. 1400년대에 술탄 아흐메드 2세가 만들었으며 오스만제국 시대부터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시장에 들어서면 화려한 돔 형식의 지붕에 푸른색 타일과 장식들이 아치 모양을 그리면서 아름답게 장식돼 있다. 아치 형태의 돔은 이슬람 모



이랑주 비주얼머천다이저(VMD) lmy730@hanmail.net

국내 VMD(상품가치연출) 1호 박사. 한국 VMD협동조합 이사장. 'VMD 희망트럭', '나전사(나누는 전통시장 사람들)' 등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서로 「살아남은 것들의 비밀」, 「마음을 팝니다」 등이 있다.

스크를 닮아 있고, 정교한 조각상들은 유럽 스타일을 닮은 듯하다. 미로처럼 이어진 바닥은 대리석으로 포장돼 있어 걸으며 쇼핑을 즐기기에 좋다.

각각의 매장은 고객의 시선을 끌기 위해 진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액세서리 가게들은 컬러 톤이 비슷한 유색 보석끼리 진열함으로써 색상의 파워를 강하게 만들었다. 스카프 매장은 천장 아래까지 상품을 진열해 멀리서도 스카프를 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했다. 카펫 · 조명 · 도자기 · 전통모자 · 의류 등 각기 상품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시장의 분위기와 잘 조화를 이루도록 진열하고 있다.

그랜드 바자르는 시장의 형태부터 진열까지 시장 자체가 하나의 관광상품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풍겼다. 각종 보석과 카펫, 가죽제품, 수공예품, 이슬람 문양을 담은 다양한 사기그릇 등 이 시장에 없는 것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랜드 바자르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서민적이고 소박한 분위기를 가진 이집션 바자르(Egyptian Bazaar)를 만날 수 있다. 예전의 이름은 스파이스 바자르(Spice Bazaar)였는데 이집트에서 들어온 물건들을 팔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름이 바뀌었다. 시장 입구에서부터 코를 찌르는 강한 냄새가 이곳이 원래 향신료를 파는 시장이었음을 단번에 알려 준다.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터키의 젤리에 해당하는 '로쿰'의 달짝지근한 냄새가 향긋하게 퍼지며 식욕을 자극한다. 매장마다 독창적인 진열법에 각종 소도구를 활용

컬러 톤이 비슷한 보석끼리 진열한 액세서리 가게





천장까지 스카프를 진열한 매장

하고 있어 똑같은 진열을 한 곳이 하나도 없다.

이슬람 사원의 형태를 닮은 매장은 부드러운 곡선 형태의 지붕을 만들고 그 아래에는 정교하고 화려한 문양을 새겨 넣었다. 지붕 아래 천장에는 붉은색과 금박으로 장식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향신료를 담은 황금색 용기를 진열대 곳곳에 놓아 언제든지 손님들이 맛볼 수 있게 했다.

바로 옆 가게는 그 화려함에 뒤질세라 전통적인 것으로 승부를 걸었다. 나이테가 살아 있는 오래된 나무로 매장을 만들고 진열장도 장식했다. 제품을 터키 전통 항아리에 소복이 담아 진열장 위에 올려놓으니 한눈에도 고풍스럽게 느껴졌다.

매장마다 각기 다른 콘셉트와 디자인을 자랑하며 자신만의 진열로 승부를 걸고 있어 진열방법을 비교하면서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다. 로쿰 가게마다 작은 그릇에 달달한 로쿰을 담아 내놓는 바람에 시식만 하면서 돌아다녀도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달다.

550년의 전통을 가진 그랜드 바자르와 350년이 넘게 사랑받아 온 이집션 바자르는 터키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보물이다.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어느 하나도 똑같은 점포가 없었다. 옆 가게와는 조금 다르게, 옆 가게보다 조금 더 멋있게 만들려 한 것이 전체의 발전을 이끈 것이 아닐까?

그랜드 바자르처럼 500년 이상 사랑받으며 자신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남과 다르게 하려는 자신만의 각도를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인생 또한 '속도'가 아니라 '각도'다. 나의 가치를 올리고 오랫동안 살아남는 방법은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나의 각도를 갖는 것임을 개성으로 무장한 이스탄불의 시장에서 배울 수 있었다.

꿈과 끼를 찾아 떠나는 여행, 자유학기제!





조재익 과장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편성한 수업 덕분에 아이들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교사인 저도 무척 즐겁습니다. 활기찬 수업 중 문득 나오는 아이들의 배려하는 마음을 볼 때 벅찬 감동도 느꼈습니다."(울산 언양중 교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수업 시간이 더욱 재미있고요, 선생님들이 하나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충분한 논의 시간을 주셔서 매우 좋았어요."(강원 사북중 1학년)

학교 현장이 살아난다. 학생들은 끝없는 시험의 압박 속에서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은 모습이 아닌, 저마다의 색깔을 갖고 눈을 반짝이는 모습으로 수업에 참여한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 · 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운영을 토론 · 실습 등 학생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다.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탐색 · 설계할 수 있도록 체험 · 참여 중심의 교실수업, 진로 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 · 체육활동(악기교육, 학교 스포츠클럽 참여 등), 동아리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부 공교육진흥과(과장 조재익)는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요즘 가장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자유학기제 통해 꿈과 목표를 찾았어요"…
교사 · 학생 · 학부모 만족도 향상에 자긍심 커져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2013년 2학기 42개 연구학교를 시작으로 학교 현장에 확산되고 있다. 시행 준비단계에서 자유학기제의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정책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지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들이 있었다. 기존의 암기 · 주입식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 · 체험 · 실습 · 토론수업 등으로 교실 수업을 혁신하는 정책인 만큼 자유학기제의 도입 · 운영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일도 많았다.

공교육진흥과는 정책자문위원회 및 추진단을 구성해 자유학기 기본운영 모형을 구축했다. 17개 시 · 도 교육청 장학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했으며, 정책토론회를 거쳐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 · 체육활동, 동아리활동 등 네 가지 수업운영 모형의 틀을 마련했다. 이 네 가지 모형에 맞는 교과 및 주제 융합수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 및 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워크숍 및 교육(자유학기제 운영학교 교원연수, 시 · 도 교육청 장학사 워크숍, 중앙행정기관 자유학기제 담당자 워크숍, 교육장 워크숍,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워크숍 등)을 실시했고, 자유학기제 운영 종합매뉴얼, 자유학기제를 위한 평가방안 탐색, 자유학기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체험활동 지원방안 등의 자료를 발간했다. 이러한 노력 덕에 자유학기제의 네 가지 시범운영 모형은 2013년 42개 연구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됐다. 시험 · 정량평가의 압박에서 벗어난 덕분에 선생님은 새로운 수업을 시행할 수 있었고 아이들은 스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나갔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학교의 학생 · 학부모 · 교사의 학교생



(왼쪽부터)정현경 연구사, 장석환 팀장, 노정아 주무관



(왼쪽부터)유혜영 주무관, 김해리 주무관, 윤은애 주무관

활에 대한 만족도는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향상됐다. 학생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꿈과 목표를 찾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게 됐어요." 학부모는 "내 아이가 자유학기제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모습에 학교를 신뢰하게 됐어요." 교원은 "교사로서 전문성도 키우고 초임 시절에 가졌던 긍지와 열정이 다시 살아났어요."라는 의견을 줬다.

2014년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학생은 3.79→4.02, 학부모는 3.86→4.02, 교사는 3.85→4.15로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자유학기제 시행 전과 비교해 크게 높아졌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연구학교의 놀라운 변화에 자유학기제 희망학교는 2014년 800교로, 2015년에는 운영학교가 당초 계획한 1,500교(약 50%)에서 2,551교(약 80%)로 크게 늘었다. 정책에 대한 현장의 공감대가 확산되는 과정을 몸소 느끼며 공교육진흥과 일원들은 자유학기제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느꼈다.

2016년 3,204개 중학교로 전면 확대…현장 안착에 총력 기울일 것

시범학교 운영의 성과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공교육진흥과는 자유학기제 운영에 열정이 있는 연구학교 선생님들과 힘을 합쳐 지난해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를 발간했다. 올해에는 교과별 특성에 맞는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 수업강화와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학생 중심의 다양한 수업 실시를 통해 자유학기제를 바라본 「달라진 수업, 행복한 학교」를 발간했다.

아울러 아직도 자유학기제가 생소한 교사 · 학부모 · 학생에게 자유학기제가 무엇인지를 알리고 정책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 전국의 시 · 도 교육청 및 지자체를 다니며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학교 · 교사 · 학부모의 공감을 얻기 위해 SBS의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KBS, YTN 등 방송사를 통한 TV 공익광고, SNS 홍보, 언론기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전면 확대에 앞서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요소를 점검하고 현장과의 협력을 강화해 자유학기제 현장 안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자유학기제 덕분에 학생들이 막연하게나마 '내가 사는 세상, 나의 모습'에 대해 생각할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선생님들이 '진정 원하는 수업'을 학생들과 즐겁게 할 수 있게 된다면, 학부모들이 학교를 믿고 우리 교육을 믿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꿈꾸는 교육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2016년 3월부터 자유학기제가 전국 3,204개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공교육진흥과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묵묵히 노력할 것이다.

■ 글 · **신소영** 사무관



(왼쪽부터)길인영 사무관, 박재형 주무관, 신소영 사무관

www.mogah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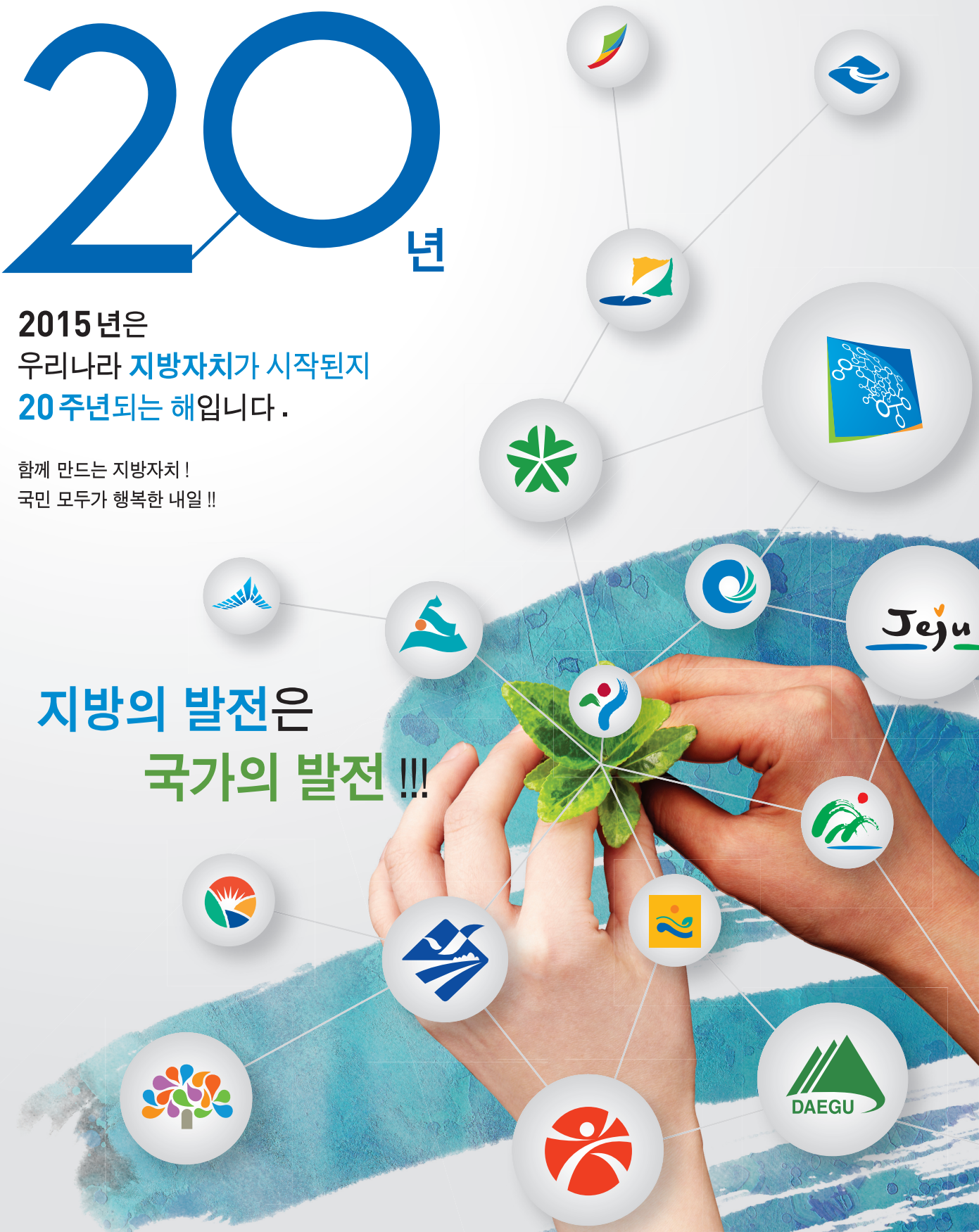
행정자치부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지방자치 20년

2015년은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0주년되는 해입니다.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내일!!

지방의 발전은 국가의 발전!!!





가정용 습기제거제 핵심성능 차이 있어

제습량 및 내구성 꼼꼼히 확인해야

곰팡이가 쉽게 발생하고 증식할 수 있는 고온다습한 여름이 찾아오면서, 눅눅해지기 쉬운 옷장이나 신발장 안에 사용하는 가정용 습기제거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습기제거제'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습성능,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 · 평가했다.

글_남현주 한국소비자원 화학섬유팀 책임연구원

*본 기사는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제품 유해 물질 미검출, 권장기준에 적합

습기제거제 12개 제품을 시험 · 평가한 결과, 내용물에서 납, 카드뮴, 비소, 수은 및 6가크롬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전 제품 한국산업표준(KS) 권장기준에 적합하며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 제품에 따라 제습성능과 투습막 및 용기의 내구성, 가격 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핵심성능인 제습량, 제품 간 차이 있어

시험대상 12개 제품 중 '통큰 참숯 제습왕', '물먹는 하마' 등 2개 제품은 제습량이 많아 상대적으로 제습성능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반면, '버블윅 참숯 습기제거제', '자연나라 습기제거제' 등 2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제습량이 낮았고, 'e 제습제', '홈즈 제습력' 등 8개 제품의 제습성능은 평균 수준이었다.

일부 제품, 내구성에 문제 있어

습기제거제 내용액인 염화칼슘액은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으며, 의류와 신발 등 가죽 제품에 묻었을 때 가죽이 경화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시험대상 12개 제품 중 '물먹는 고래', '버블윅 참숯 습기제거제', '자연나라 습기제거제' 등 3개 제품은 넘어질 경우 보호 뚜껑이 있는 상태에서도 내용액인 염화칼슘액이 투습막을 통해 새어 나왔다.*

또한 '통큰 참숯 제습왕', 'Mr 홈스타 습기좀 부탁해' 등 2개 제품은 낙하충격에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은 교체 시기

제습성능 시험결과

상대적으로 우수한 2개 제품 ★★★	• 통큰 참숯 제습왕	• 물먹는 하마
평균 수준인 8개 제품 ★★	• e 제습제 • 홈플러스 알뜰상품 제습제 • 그린 참숯 습기제거제 • 참숯 습기 제거제	• 홈즈 제습력 • Mr 홈스타 습기좀 부탁해 • 참숯 물도깨비 • 물먹는 고래
상대적으로 낮은 2개 제품 ★	• 버블윅 참숯 습기제거제	• 자연나라 습기제거제

내구성 개선이 필요한 5개 제품

보호 뚜껑이 있는 상태에서 새어 나옴 (전도상태)	떨어뜨렸을 때 용기가 파손됨 (1m 높이)
• 물먹는 고래 • 버블윅 참숯 습기제거제 • 자연나라 습기제거제	• 통큰 참숯 제습왕 • Mr 홈스타 습기좀 부탁해

까지 수분을 흡수한 제품을 1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용기가 파손되고 내용액이 누설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그린 참숯 습기제거제', '참숯 물도깨비', '참숯 습기제거제' 등 3개 제품은 보호 뚜껑이 벗겨진 상태에서 넘어지면 염화칼슘액이 샐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보호 뚜껑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상이 없어 일반적인 사용 조건에 문제가 없었다.

한편, 무거운 물체에 눌렸을 때 용기가 파손되지 않고 잘 견디는지 확인한 결과 시험대상 12개 제품 모두 이상이 없었다.

'교체시기, 제조연월' 표시 누락 제품에 대해 개선 권고

한국소비자원은 염화칼슘액이 새어나오고 용기가 파손될 수 있는 등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 관련 제품의 자발적 리콜 및 품질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 제조업체는 제품의 내구성을 개선하고, 관련 제품은 교환 · 환불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그린 참숯 습기제거제', '자연나라 습기제거제', '참숯 습기제거제'는 교체시기에 대한 표시가 없었으며, '자연나라 습기제거제'는 제조연월을 표시하지 않는 등 법정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아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했다.

소비자들은 습기제거제 사용 시, 내용물을 꺼내거나 투습막을 벗겨내지 않도록 하고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제품 선택 시에 곰팡이 제거, 냄새 제거 등은 직접적인 성능이 아니므로 제습성능과 내구성을 기준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 **업체 의견:** 아니코생활환경㈜, 버블윅코리아, ㈜크린피아 등 3개 업체는 투습막 개선을 통해 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며, 해당 제품은 교환 또는 환불 예정

** **업체 의견:** ㈜엘지생활건강은 낙하충격에 문제가 있는 용기를 개선할 예정이며 관련 제품은 교환 또는 환불 예정

습기제거제 12종 시험 · 평가 결과표

제품명		홈플러스 알뜰상품 제습제	버블윅 참숯 습기제거제	홈즈 제습력	통큰 참숯 제습왕	참숯 습기제거제	물먹는 고래
판매업체		홈플러스㈜	버블윅코리아	애경에스티㈜	롯데쇼핑㈜	태광유통	아니코생활환경㈜
제품							
1개당 가격 (원)*		791	834	863	885	960	988
제습성능		★★	★	★★	★★★	★★	★★
내구성	내누설성 (전도상태)	★★★	★	★★★	★★★	★★	★
	낙하충격	○	○	○	X	○	○
	압축시험	○	○	○	○	○	○
흡습제 안전성 (납, 카드뮴, 비소, 수은, 6가크롬)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제품명		참숯 물도깨비	그린 참숯 습기제거제	Mr 홈스타 습기좀 부탁해	물먹는 하마	자연나라 습기제거제	e 제습제
판매업체		㈜산도깨비	㈜다이소아성산업	㈜엘지생활건강	(유)옥시레킷벤키저	㈜크린피아	㈜이마트
제품							
1개당 가격 (원)*		995	1,000	1,002	1,015	1,209	1,238
제습성능		★★	★★	★★	★★★	★	★★
내구성	내누설성 (전도상태)	★★	★★	★★★	★★★	★	★★★
	낙하충격	○	○	X	○	○	○
	압축시험	○	○	○	○	○	○
흡습제 안전성 (납, 카드뮴, 비소, 수은, 6가크롬)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주: *가격-온라인 평균 최저가격(배송비 미포함, 5월 20일 ~ 6월 2일 중 3회) / 평균 982원

[기호의 표시]

- **제습성능**
  - ★ 제습량이 상대적으로 적음
  - ★★ 제습량이 평균 수준
  - ★★★ 제습량이 상대적으로 많음
- **내누설성(전도상태)**
  - ★ 미흡(보호 뚜껑이 있는 상태에서도 누설됨)
  - ★★ 보통(보호 뚜껑이 벗겨진 상태에서만 누설됨)
  - ★★★ 우수(누설 안 됨)
- **낙하충격 및 압축시험**
  - ○ 용기 파손 없음
  - X 용기 파손

습기제거제 선택 및 사용 요령

☑ 제습성능,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 선택할 것

습기제거제 구매 시 저렴하면서 제습성능 및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의 경우 2차 피해를 볼 수 있어 반드시 사용 전 투습막, 용기 등에 파손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용한다.

☑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

습기제거제는 일반 가정의 벽장, 옷장, 신발장 등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 제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화장실, 거실 등 개방된 곳에서 사용하는 것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

☑ 내용물을 꺼내거나 투습막을 벗기지 말 것

염화칼슘은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으며 의류와 신발 등 가죽제품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내용물을 꺼내거나 투습막을 벗기지 말아야 한다. 또한 피부에 닿았을 경우 바로 흐르는 물로 잘 씻어내야 한다.

☑ 오인할 만한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 것

제품 선택 시 곰팡이 제거, 냄새 제거 등은 습기제거제의 직접적인 성능이 아니므로 제습성능과 내구성을 기준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estima7@gmail.com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는 사람. 흥미로운 스타트업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개하는 것이 취미. 전 조선일보 기자, 전 라이코스 CEO. 테크블로거로 '에스티마의 인터넷이야기' 운영



유럽의 스타트업 허브, 베를린의 다섯 가지 매력

요즘 해외 스타트업계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유럽에서 베를린이 뜨고 있다."는 말을 한다. 베를린이 유럽에서 스타트업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스타트업을 하고자 하는 인재들이 베를린으로 몰려들고 있으며 사운드클라우드 같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스타트업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일본에서 만난 벤처캐피털리스트 다카히로 씨는 베를린을 침이 마르게 칭찬하며 "베를린에 가보겠다면 아는 스타트업들을 소개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니 왜 런던이나 파리가 아니고 베를린일까 궁금했다. 그래서 베를린에 가봤다. 그리고 왜 스타트업인들이 베를린에 열광하는지 그 의문이 풀렸다.

첫 번째 이유는 베를린의 국제적인 개방성이다. 베를린은 한마디로 외국인들에게 열린 곳이다. 처음 베를린에 도착해 펍네이티브라는 스타트업과 미팅을 했다. 우리를 맞아준 3명은 각각 이탈리아, 루마니아, 한국 출신이었다. 창업자를 포함해 26명이 있는 그 회사의 직원 중에 놀랍게도 독일인이 없었다. 다음 날은 베를린의 유명한 스타트업 코워킹공간인 팩토리베를린에 갔다. 우리를 안내해준 바바라는 헝가리 출신이었다. 그 다음에는 베를린을 대표하는 유명 스타트업인 사운드클라우드에 갔다. 이 회사의 창업자는 스웨덴인이며 우리를 맞아준 콜린과 톰은 각각 미국, 영국 출신이었다. "여기가 독일이 맞는가. 도대체 독일사람은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 다음 미팅에서 독일인을 만날 수 있었지만 그만큼 외국인에게 개방적인 베를린의 분위기를 실감했다.


스타트업 지원시설인 팩토리베를린 전경(사진 출처: wikimedia commons)

두 번째는 낮은 물가다. 맥주의 본고장이어서 그랬겠지만 생맥주 6잔과 안주요리 4접시를 시켰는데도 7만원대의 계산이 나왔다. 비슷한 메뉴로 서울의 맥주레스토랑에서 시켰으면 10만원은 가볍게 넘겼을 것이다. 식료품비용도 싸고 집세도 싸다.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일하기 위해서 온 젊은이들이 비교적 낮은 생활비로 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살인적인 물가를 경험한 내게는 베를린의 싼 물가가 정말 큰 장점으로 느껴졌다.

세 번째는 창의성이 넘치는 도시 분위기다. 패션전시회에 우연히 들렀는데 이 도시의 넘쳐나는 패셔니스타들의 존재에 놀랐다. 나만 빼고 다 패셔니스타였다. 스타트업 사무실에 가봐도 큰돈을 들이지 않은 세련되고 감각적인 인테리어에 감탄하게 됐다. 아마 베를린이 예술가들의 도시라 그런가 보다 했다. 이런 디자인 감각이 스타트업의 제품에도 이어진다.

네 번째는 이 도시 시민들의 영어능력이다. 수많은 스타트업 행사가 모두 영어로 열린다. 독일어를 하지 못해도 생활하는 데 거의 문제가 없다. 바로 이전에 들른 파리의 경우에는 스타트업이 모이는 곳의 행사 벽보가 모두 프랑스어로 적혀 있었다. 그런데 베를린에서는 그것조차 모두 영어로 돼 있었다.

다섯 번째는 비자를 받기가 쉽다는 점이다. 워킹비자 발급에 아주 까다로운 영국 같은 나라와 비교해 베를린의 비자 발급은 상대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쉬운 편에 속한다고 한다. 회사의 추천을 받으면 아시아인도 어렵지 않게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안전한 치안, 싼 물가와 함께 외국인에게 관용적인 도시 분위기가 스타트업 인구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큰 회사가 없는 베를린에선 스타트업들이 주인공으로 뜨고 있다. 특별한 정부 지원정책 없이도 도시의 문화와 매력으로 스타트업시티로 뜨고 있는 베를린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일자리는 늘리고, 격차는 줄이고

제1차 노동시장 개혁방안

저성장 시대 진입, 저출산 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와 급격한 기술변화 등 노동시장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연공 위주의 임금 · 직무체계, 장시간근로 관행, 획일적 노동시장 법제도 등 노동시장 구조 · 관행은 과거의 낡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좋은 일자리 부족과 청년취업난, 노동시장 격차 확대 등 노동시장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일자리는 늘리고 격차는 줄여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노사정은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2014년 9월 노사정위원회에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100여 차례에 걸친 집중 논의를 통해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지난 4월 3일 한국노총의 합의결렬 선언으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의 핵심은 청 · 장년 세대 간, 원 · 하청 간, 정규 · 비정규직 간 배려와 공유를 통해 윈윈(win-win)하는 상생고용을 이루는 것이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 직장인들의 모습

316개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

심각한 노동시장 격차와 청년고용난 등 절박한 노동시장 현실 그리고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의무제 등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바, 정부는 노사정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면서 노사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17일 정부는 현장 임단협 시기에 맞춰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담아 '제1차 노동시장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의 핵심은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통한 '상생고용'이다. 청 · 장년 세대 간, 원 · 하청 간, 정규 · 비정규직 간 배려와 공유를 통해 윈윈(win-win)하는 상생고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5대 분야 36개 과제를 담았다.

첫째, 기성세대인 중 · 장년과 미래세대인 청년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확산하고, 청년고용을 확대한다.

먼저 316개 전체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한편, 기관별 추진방안 및 신규채용 목표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30대 그룹, 조선 · 금융 · 제약 · 자동차 등 6개 업종을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확산시켜 나가고, 551개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현장지도와 컨설팅을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정년 60세 준비 및 임금체계 개편 관련 법 적용 및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기준 명확화를 추진한다.



지난 7월 15일 서울 서초구청에서 열린 '2015 행복일자리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받고 있다.

또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7월까지 집중취업지원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 마련, 청년일자리사업 개편, 인력미스매치 해소방안 등을 포함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7월까지 마련한다.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세제혜택…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강화

둘째, 우리 노동시장에서 가장 심각한 격차인 대 · 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원 · 하청 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를 촉진한다.

먼저 하청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원청의 노력에 대해 세제 · 재정 등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거나 하청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하청기업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원청기업의 노력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고, 상생협력 우수 중소 · 중견기업에는 정책자금 및 R&D 사업자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청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납품대금 문제 해소를 위해 중기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 기한 연장(7일→20일), 법적 보호범위 확대(중소기업→중견기업까지),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조달 분야에선 내년부터 공사 부문 종합심사낙찰제를 본격 시행하고, 물품 · 용역 분야 낙찰자 선정 시에도 동반성장 · 청년고용과 관련된 평가항목을 도입하는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셋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상생을 지원한다. 기간제,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 · 개정하고, 공공 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방안 마련,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행실적에 대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반영 등을 통해 처우개선을 선도한다.

넷째,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토대로 노사정이 접점을 이룬 내용을 반영해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다섯째, 노사 간 신뢰를 쌓아나가기 위해 노동계의 불법파업, 고용세습, 인사 · 경영권의 본질적 침해행위, 경영계의 부당노동행위, 기초질서 위반, 과도한 하도급 확대 등 위법 ·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해나가고, 노사정 대화 등 노사 파트너십 활성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충실히 추진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노사정 간 추가 논의키로 한 과제 등에 대해선 2차 방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시장 개혁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노사의 적극적 동참,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그리고 기업규모나 고용형태를 떠나 일한 만큼 보상받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사와 전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

■ **정경훈**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
rookiechampy@gmail.com

판교 창조경제밸리, 300개 창업기업 · 300개 성장기업 입주

판교 창조경제밸리 마스터플랜

판교 창조경제밸리 추진속도가 더욱 빨라진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창조경제밸리 조성에 착수하고 창조경제 지원기관이 집적된 기업지원허브를 선도 프로젝트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판교 창조경제밸리 마스터플랜'을 논의 · 확정했다. 지난 3월 30일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도로공사 부지와 개발제한구역(GB) 용지를 활용해 국가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43만㎡)를 조성키로 한 데 이어, 관계부처 합동T/F, MP(Master Planner) 자문단, 벤처기업협회 등 현장의 아이디어를 담아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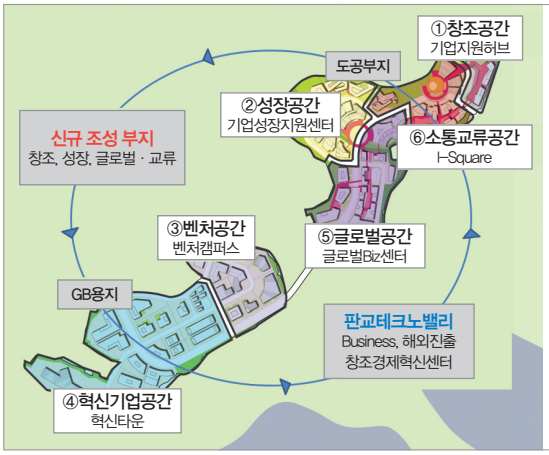
기업성장지원센터에서 성장단계 진입한 기업 지속적으로 지원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창조경제를 구성하는 창업, ICT 기술혁신, 문화융합 기능 등을 구체적 공간에 집약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된다. 현 판교 테크노밸리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과 기술지원 기능을 통해 혁신과 비즈니스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새로 조성하는 부지는 창업과 기술혁신이 활발하게 이뤄지고(①창조공간), 기업 성장단계에 맞춘 사업공간(②성장공간 ③벤처공간 ④혁신기업공간)과 글로벌 · 산학연 네트워크(⑤글로벌공간), 소통 · 교류 환경(⑥소통교류공간)이 구현된 미래형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간별 기본구상과 주요 입주시설 등을 살펴보면 우선 옛 도로공사 부지 동측에 기업지원허브라는 창조공간을 먼저 조성해 ICT 혁신기술, ICT–문화 융합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과 자유로운 창업의 장으로 육성한다. LH공사가 창업, 혁신기술, ICT–문화 융합의 3개 존(zone)과 교류 · 지원 존으로 구성(3+1)된 건물을 조성하고, 각 테마별 창조경제지원기관 및 시설이 입주(14개 예정)해 2017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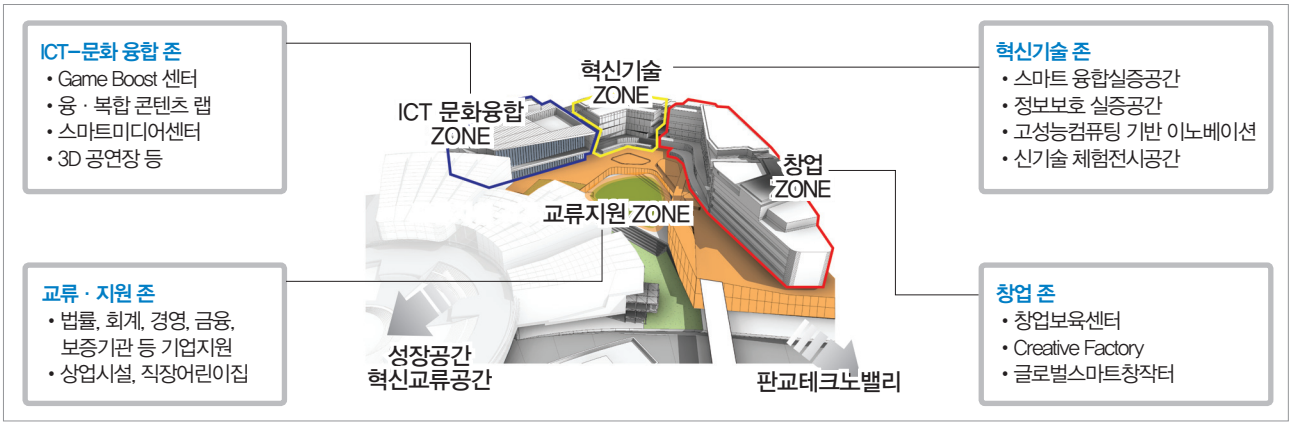
창업 존에서는 약 200여개 창업기업이 최대 3년간 실비 수준(시세 대비 20%의 임대료)으로 입주할 수 있는 창업 · 보육공간을 제공하고 원스톱 창업지원서비스, 투자자금도 지원한다. 혁신기술 존에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사물인터넷(IoT), 첨단보안, 핀테크, 고성능컴퓨팅(HPC) 등 ICT기술을 쉽게 실증 · 사업화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오픈랩(Open Lab), 체험 · 전시 공간 등을 조성한다. ICT–문화

〈그림 1〉 판교 창조경제밸리 공간구상(안)



①창조공간(기업지원허브)	2만㎡
②성장공간	4만㎡
기업성장지원센터	3만㎡
행복주택	1만㎡
③벤처공간(벤처캠퍼스)	6만㎡
④혁신기업공간(혁신타운)	8만㎡
⑤글로벌공간	7만㎡
글로벌Biz센터	1만㎡
글로벌기업/지식산업센터	6만㎡
⑥소통교류공간(I-Square)	3만㎡
⑦공공시설(녹지 등)	13만㎡
전체 면적	43만㎡

〈그림 2〉 창조공간(기업지원허브) 3+1 공간구성(안)



융합 존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상현실 · 증강현실 등 신기술 기반 게임, 융 · 복합 콘텐츠, 스마트미디어 등 ICT기술과 문화 · 예술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창작 · 개발 · 공동작업 공간과 전시 · 공연장을 조성한다.

도로공사 부지 서측에 위치한 성장공간의 경우 공공(LH, 경기도시공사)이 기업성장지원센터를 조성해 성장단계(창업 3~4년 이상)에 진입한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2017년 하반기부터 지식산업센터 4개동을 단계적으로 완공해 약 300개 성장기업에 시세 70~80% 수준의 저렴한 업무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GB용지 동측의 벤처공간에는 6만㎡ 규모의 벤처캠퍼스 단지가 조성된다.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 컨소시엄에 공모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해 선도 벤처기업들이 연관 분야 스타트업 육성 공간(약 100개 창업기업 입주 예상)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GB용지 서측의 혁신기업공간에는 8만㎡ 규모의 혁신타운을 조성한다. 기술심사 등을 거쳐 혁신형 기업 · 연구소를 선별적으로 유치해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 부지 남측의 글로벌공간에는 경기도가 국제교류 지원시설과 다수 대학공동 캠퍼스 등이 입주하는 글로벌 비즈(Biz)센터를 건립한다. 또한 글로벌 비즈센터 인근 6만㎡ 부지에는 ICT 관련 글로벌 기업 및 유관 국내기업을 유치해 투자, 기술교류를 촉진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부지 중심부에 위치한 소통 · 교류공간에는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아이스퀘어(I-Square)를 조성토록 해 소통 · 교류의 중심지로 만든다. 내년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광장을 중심으로 콘퍼런스 · 전시, 업무 · 상업 · 문화시설 등이 복합된 공간으로 계획한다. 아이스퀘어를 중심으로 보행 위주의 문화거리를 조성해 대학 캠퍼스와 같이 자연스러운 만남과 교류가 이뤄지는 공간(랜드마크)으로 만들 것이다.

창의적 디자인, IoT 등 첨단기술로 미래형 도시 조성

창조경제밸리에는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5G Open lab, 생활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도시 통합 네크워크, 스마트도로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제로에너지빌딩,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운행 등을 통해 친환경 에코(eco) 도시로 조성하고, 공공디자인, 건축공모를 통해 창의적인 설계 · 디자인을 도입할 것이다. 입주기업 종사자의 주거 · 육아 편의를 위해 행복주택 500호(LH · 경기도시공사)를 입주기업에 우선 공급해 사원용 기숙사로 활용하고, 주요 건물에 입주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도 설치할 예정이다.

창조경제밸리가 완성되면 300개 창업기업, 300개 성장기업이 마음껏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계속 배출되고, ICT기술 테스트베드, ICT-문화 융합센터 등 각종 지원프로그램이 결합돼 글로벌 수준의 클러스터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창조경제밸리 마스터플랜'이 차질 없이 실현되도록 범부처 합동T/F 등에서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기업, 예비 창업인 등 현장의 아이디어와 건의사항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 **윤의식**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esyoon71@gmail.com

해양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2019년 상용화

해양 바이오디젤 생산기술 개발

2015년 7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2017년까지 시중에서 판매하는 디젤에는 바이오디젤(BD) 2.5%(2018~2020년 BD 혼합비율 3%로 상향 예정)를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바이오디젤의 원료인 바이오매스가 부족해 국내 이용량의 약 4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목재, 폐식용유 등을 이용해 국산 바이오매스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2009년부터 해양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생산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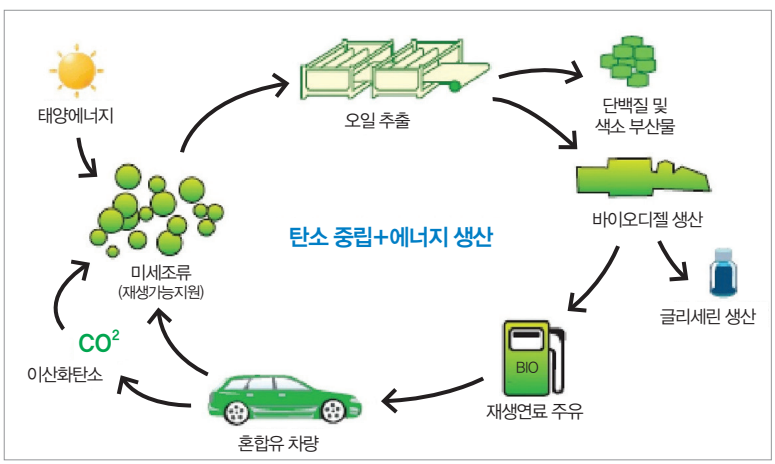
우리 바다에서 만드는 초록빛 기름, 바이오매스

저명한 과학저널 *Nature*는 미세조류로 만든 바이오 연료를 '녹색 금'이라 소개했고, 최근엔 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미세조류 기반의 바이오 연료가 전 세계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실렸다. 세계는 왜 미세조류 기반 바이오매스에 주목하는 것일까?

바이오매스는 대두, 옥수수와 같은 1세대, 억새나 폐목재 등 목질계의 2세대 그리고 해수나 담수에 분포하는 조류의 3세대 바이오매스로 구분된다. 하지만 1, 2세대 바이오매스는 한계를 안고 있다. 1세대 바이오매스는 공정이 간단하고 생산비용이 저렴하나 넓은 경작지가 필요하고 곡물가격 폭등의 우려가 있다. 2세대 바이오매스는 비식용 · 재활용 원료를 이용하지만, 전처리 과정이 복잡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3세대에 속하는 해양 미세조류는 대기나 해수 중의 이산화탄소와 물,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삼기 때문에 대규모 경작지가 필요 없고, 이산화탄소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어 기존 바이오매스를 대체할 새로운 원료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지질(脂質) 함량이 높고 번식과 성장이 빨라 기존의 바이오매스에 비해 생산성이 월등히 높다는 장점이 있다.

미세조류로부터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공정은 다음과 같다. 우리 해역에서 서식하는 미세조류 중에서 지질함량이 높은 종을 선별해 육상에서 배양한다. 육상에서 배양된 미세조류들을 해양에서 대량으로 배양한 후 건조를 거쳐 지질을 추출하고 정제하는 방식이다. 해양수산부는 육지가 좁고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는 해양 미세조류가 효율적인 바이오매스라고 보고, 2009년부터 10년간 490억원의 예산을 투

〈그림〉 해양 미세조류 바이오디젤 생산 및 활용 메커니즘





육상배양과 달리 해양배양은 대형 수조나 별도의 먹이가 필요하지 않아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풍부한 영양염류와 이산화탄소 공급으로 미세조류 배양의 최적지인 인천 영흥도에 설치된 해양배양장(사진 제공: 해양수산부)

입해 바이오디젤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총 3단계로 구성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1단계(2009~2011년)에서는 실험실 규모에서 바이오디젤 생산의 원천기술을 개발했고, 2단계(2012~2014년)에서는 파일럿 규모에서 실증사업을 실시해 경제성을 이미 검증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12년에는 풍부한 영양염류와 이산화탄소 공급으로 미세조류 배양의 최적지인 서해 영흥도 화력발전소 인근 해상에 해양배양장을 설치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시도된 것으로 육상배양과 달리 대형 수조나 별도의 먹이가 필요하지 않아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식으로 평가받았다.

마지막 3단계(2015~2018년)에서는 대량생산기술 확보를 통한 바이오디젤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다양한 배양방식의 개발을 통해 미세조류의 생산효율을 높이고 배양장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바이오디젤 생산의 경제성을 높이는 것이 기술의 핵심이다.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별도의 에너지 없이도 미세조류를 경제성 있는 농도까지 농축시켜 지질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



지난 5월 28일 해양수산부는 해양 바이오디젤 혼합유(BD 2.5%)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를 주행하는 데 성공했다. 사진은 해양 미세조류 바이오디젤 혼합유를 이용해 주행하는 모습(사진 제공: 해양수산부)

해양 바이오디젤 연료로 서울-부산 주행 성공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4월에는 국내 최초로 한국석유품질원의 상용제품 품질규격을 통과했으며, 이어서 5월 28일엔 해양 바이오디젤 혼합유(BD 2.5%)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의 차량 주행시험을 통해 해양 바이오디젤 연료의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2019년까지 연간 4,800톤을 생산해 연 100억 원 이상의 수입대체효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관련 기술개발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 자동화 생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재 0.25ha에 불과한 해양배양장을 200ha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디젤 추출이 보다 용이한 우수한 미세조류 종을 확보하고, 지질을 추출하는 공정을 최적화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지질을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을 활용해 바이오에탄올 등을 생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다. 현재 해양 바이오디젤 생산기술은 상용화 목표 대비 60%의 생산성(12g/m^2/day)을 달성하고 있으며, 해양 바이오디젤의 경제성 확보를 바탕으로 조기 상용화 및 초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상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
lsjin@korea.kr

서민금융상품 공급 규모 5조7천억원으로 확대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현대인의 삶에서 금융은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됐다. 금융은 재산 증식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어떤 이들은 창업자금, 긴급한 생활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이용한다. 다만 금융소외라는 명제에서 논의되고 있듯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층이나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거나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저신용 · 저소득 서민이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 약 55%의 서민이 낮은 신용등급, 소득부족 등을 이유로 금융회사 대출거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출거부 이후에는 40%가 대부업 등 사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고금리 부담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처럼 금융소외 현상이 확대될 경우 많은 서민이 고금리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되고, 이들의 상환능력이 낮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결국 연체의 늪에 빠져 정상적 경제생활이 곤란할 지경에 이르게 된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공급 5년간 연장, 최고금리도 10.5%로 인하

그간 정부는 저신용 · 저소득 서민에 대해 보다 원활한 금융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2008년 미소금융을 시작으로 바꿔드림론(2008년), 햇살론(2010년), 새희망홀씨(2010년)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 왔으며, 2013년에는 장기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킨 바 있다.

미소금융은 저소득 · 저신용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해 휴면예금 · 기부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해 무담보 · 무보증 소액대출을 취급하는 상품으로, 2013년 이후 지난 5월까지 7,188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햇살론은 정부와 서민금융회사가 공동 출연한 재원(2조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보증부대출로 저축은행과 농수협 ·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를 통해 대출이 이뤄지며, 2013년 이후 지난 5월까지 약 4조8,226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새희망홀씨를 통해 2013년 이후 지난 5월까지 4조6,085억원의 자금을 지원했고,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대출을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바꿔드림론을 통해 같은 기간 8,861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2013년 3월에는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켜 장기간 채무연체로 고통받아 온 저소득 장기연체자 280만명의 채권을 매입 · 이관함으로써 불법 채권추심의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올해 5월까지 41만명의 채무를 조정해 채무 부담을 경감했다.

이렇듯 정책 서민금융은 그동안 저소득 · 저신용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햇살론 근로자의 생계자금 수요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전체 자금공급의 88%를 책임지고 있는 햇살론, 새희망홀씨가 올해 말로 종료가 예정돼 있어 서민금융의 공급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동안의 정책 서민금융은 자금지원에 중점을 뒀으나 진정한 서민지원은 단순한 자금지원만이 아닌 자활지원 등 맞춤형 연계지원이 함께 이뤄져야만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는 지난 4월 실시된 서민금융 실태조사 결과 연체 경험자의 34%가 소득부족, 26%가 계획되지 않은 생활수요, 17%가 예상치 않은 사고로 연체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정부는 이번에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추진하면서 3대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①수요 확대에 맞춰 공급규모를 실질적으

로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부담도 경감되도록 지원하고 ②성실히 노력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상품을 설계하며 ③단순한 자금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행복기금은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은 서민이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서울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국민행복지원센터 창구에서 대출 신청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 정부는 서민들이 지속적으로 정책 서민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을 5년간 연장하는 한편, 그 규모도 5조7천억원으로 확대해 더 많은 서민을 포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의 기준금리 인하 등을 반영해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최고금리도 12.0%에서 10.5%로 1.5%p 인하하고,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도 5%p 인하를 추진해 고금리로 인한 상환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계획이다.

고용 · 복지와의 연계지원 강화…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추진

서민금융 지원에 대한 도덕적 해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기 의지를 갖고 성실하게 상환하는 분에 대한 추가적 인센티브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정책 서민금융을 지원받아 성실히 상환하는 도중에 갑작스런 자금수요가 발생할 경우 대부업 등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및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에는 생계자금을 더욱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통해 서민의 실질적 자활도 지원한다. 단순한 양적 자금지원에서 나아가 고용 · 복지와 연계한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채무연체자를 일자리로 연계하고, 근로소득의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칭 저축을 지원해 3년간 최대 1,3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하는 자활패키지사업이 시행된다. 이 사업에 참여해 마련한 목돈은 푸드트럭 등 소규모 창업자금으로 사용돼 실질적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실행하는 한편 서민금융이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 출범도 추진하고 있다. 서민들은 생계에 쫓겨 시간 · 자금의 여유가 부족해 다양한 정보를 직접 찾고 획득하기 어렵고, 제도마다 대상이나 기준이 달라 어떤 기관을 찾아가야 가장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수혜자들로부터 제도에 대한 정보나 이해가 부족해 여러 기관을 전전해야 했던 경험도 종종 듣게 된다. 지난 4월 설문조사 결과 약 61%가 '서민금융의 존재를 몰라서' 또는 '적합한 상품을 몰라서' 서민금융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 · 신용회복위원회 · 국민행복기금 등 기존의 서민금융기관을 통합해 설립된다. 서민들은 서민금융진흥원만 방문하면 서민금융상품 및 제도에 대한 종합상담을 통해 가장 필요한 제도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민간 서민금융회사 또는 고용 · 복지와의 연계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서민들에게 금융의 문턱이 한결 낮아지고 금융이용 기회가 활짝 열리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 **김기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fscboy1@naver.com

지속성장의 해답 '투자'에서 찾는 OECD

2015년 OECD 각료회의와 국제 무역 및 투자 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포용적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투자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난 6월 3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각료급회의(MCM; Ministerial Council Meeting)를 통해 지속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Unlocking Investment for Sustainable Growth and Jobs)을 논의했다.

OECD ISSUE

세계 무역 · 투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계무역의 GDP 탄력성은 1990년대 이후 2.7 이상으로 증가했으나 2000년대 이후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국제투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급감한 이후 아직 그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 낮은 이자율과 팽창적인 통화정책에도 기업들의 투자는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OECD 국가와 역외지역 간 투자 역시 감소 추세다. OECD 국가에서 역외지역으로의 투자는 2007년 1조9,357억달러에서 2012년 9,818억달러로 감소했으며, 역외지역에서 OECD 국가로의 투자는 2007년 1조3,605억달러에서 2012년 5,779억달러로 감소했다. 하지만 OECD 국가 경제에서 역외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OECD 국가의 전체 무역 중 비OECD 국가와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22.8%에서 2012년 33.5%로 증가했다.

OECD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부가가치 무역통계(TiVA; Trade in Value-Added) 구축 확대, 중소기업과 개도국의 글로벌가치사슬(GVCs; Global Value Chains) 참여 촉진, 서비스교역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투자 · 무역 촉진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투자(green investment), 다국적기업의 투명한 책임경영 촉진, 생산성 및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지식기반 자본 구축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부가가치 무역통계' 확대 전망…서비스산업 비중 높아져

OECD는 산업 내 수직적 분업이 심화되고 중간투입재의 무역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WTO와 공동으로 부가가치 무역통계를 분석해 2013년 1월 1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부가가치 무역통계는 총액기준 무역통계와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총액기준 무역통계에서 무역불균형이 과다하게 평가됐음을 보여준다. 부가가치 무역통계에서는 총액기준 무역통계와 비교해 볼 때 무역적자 또는 무역흑자가 10~30%

정도 감소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국 무역흑자가 80% 정도 감소하고, 대일본 무역적자는 거의 없는 상태임을 보여준다. 거대 경제 또는 자원보유국일수록 수출액 중 자국 내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서비스산업의 중요도가 기존의 총액기준 무역통계로 산출했을 때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G20 국가의 경우 부가가치 무역통계에서 서비스산업 비중이 국가별로 전체 무역량의 30~60%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기존 무역통계에서는 세계 무역성장률이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지만, 중간재 교역량은 2배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산업 내 무역 심화로 무역장벽으로 인한 비용은 승수적으로 점증하게 되며, 무역정책은 수출지향적이 아닌 수입과 수출을 모두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모돼야 한다.

넷째, 산업 분야에 따라 글로벌가치사슬 편입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품 중 해외 중간재의 비중이 전자제품의 경우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OECD는 2015년 발표한 부가가치 무역통계에서 분석대상 국가를 기존 57개국에서 61개국으로 확대(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튀니지 추가), 분석대상 산업을 18개 산업에서 34개 산업으로 확대, 2008~2011년 통계 신규 추가, 새로운 지표 추가 등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이 통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 심화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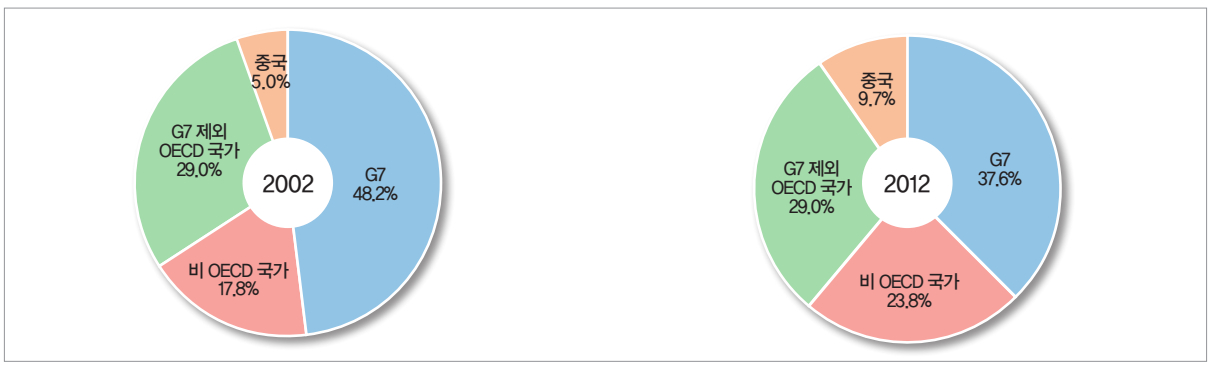
한편 OECD는 통합된 경제에서는 세계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개도국, 중소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GVCs)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본집약적 산업일수록 GVCs 상류 부문에 중소기업 참여도가 낮은 상황이지만, 중소기업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자본집약적 산업과 관련된 서비스산업에서도 GVCs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수익기반이 약하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혁신과 인력양성, 효과적인 운송 및 물류망 개발, 제품인증 및 기준, R&D, 금융접근성 등에서의 정부 지원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6월 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5년 OECD 각료이사회

OECD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접근, 규모의 경제 등을 위해 e-commerce, e-platform 등 디지털공급망 활용방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지식기반자본(Knowledge-Based Capital) 축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개도국의 GVCs 참여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개도국의 GVCs 참여형태, 참여 결정요인, 참여혜택 제고 방안,

〈그림〉 OECD 국가의 상품무역 비중



자료: OECD factbook 2014

전응길
주OECD대표부 참사관
eungkil@gmail.com



동남아시아 국가의 GVCs 발전과정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도국의 GVCs 참여 촉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OECD는 무역과 투자의 촉진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비스산업의 규제혁신을 위한 사전단계로서 서비스교역을 제한하는 요소에 대한 DB를 구축, 이를 상호 비교하기 위한 종합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OECD는 40여개 국가, 18개 업종을 포함하는 1차 결과를 2014년 5월에 발표했으며 2016년까지 DB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콜롬비아 · 라트비아 · 코스타리카 · 리투아니아 등 대상국가 및 교육 · 환경 · 에너지 등의 업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 DB를 토대로 서비스무역 제한요소에 따른 비용 측정 및 제한요소 완화에 따른 서비스교역 확대 효과 등에 대해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서비스 무역제한 지수의 비용측정 방법을 개발하고,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해 분야별, 국별, 서비스공급 형태별 무역제한 비용을 추정할 예정이다. G20 국가들에 대해 구체적인 서비스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서비스 규제개혁을 위한 국제적 공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도 검토 중이다. 향후 서비스협상 등에서 기초자료 및 통계로 활용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DB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40주년 맞아 기업 책임경영 장기비전 논의 중

OECD는 개도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2006년에 개발된 투자정책체계(PFI; 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를 2015년 각료회의를 계기로 개정했다. PFI는 투자, 무역, 경쟁, 조세, 기업 지배구조 등 다양한 정책 부문에 대한 국제적 모범관행을 바탕으로 투자 정책입안자가 고려해야 할 질문 및 체크리스트 등을 종합해 구성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반부에 수평정책을 다루고 각론으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독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그간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해 인프라 투자를 투자금융과 별도의 장으로 구성했으며, 기후변화 등 녹색투자를 별도의 장으로 신설했다.

또한 OECD는 투자자유화라운드테이블(Freedom of Investment Roundtable)을 통해 투자협정의 유용성, 사례연구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지난 3월 OECD 투자위원회를 계기로 투자협약의 정책목표와 공공지원에 대한 컨퍼런스(Conference on Investment Treaties: Policy Goal and Public Support)를 개최했으며, OECD 투자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같은 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국제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와 함께 기업들의 투명한 책임경영에 대한 논의도 확대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부패, 조세회피, 책임경영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기업의 책임경영은 광물 및 농업공급망, 섬유산업, 금융 등 업종별 책임경영에 대한 논의로 세분화돼 가고 있으며, OECD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40주년을 맞는 2016년을 계기로 기업의 책임경영에 대한 장기비전 논의를 진행 중이다.

OECD는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녹색투자 촉진과 장기적인 생산성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향후 지구기온을 2℃ 상승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존 투자계획의 2배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OECD도 2015년 각료회의를 계기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대안에 대한 보고서(Aligning Policies to Facilitate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를 발표하고, 녹색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OECD는 올해 파리에서 개최되는 UN 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를 맞아 저탄소형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장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생산성 제고와 혁신역량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OECD혁신전략보고서」를 개정하고 있다. 지난 6월 OECD각료회의에서 보고서 개정안 초안이 발표됐으며 올해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최종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OECD는 올해 각료회의를 통해 환경, 개발, 교육, 경제성장 등 다양한 국제 경제 · 사회적 이슈를 투자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하고자 했다. OECD의 이러한 논의는 낮은 이자율과 원유가격, 주요국들의 금융확대정책 등의 호재에도 느리게 반응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시각과 장기적 비전을 제시했지만, 단기적 경기회복 및 투자촉진에는 크게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 따라서 향후 장기적 비전과 단기적 투자촉진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미래 먹거리 디지털시장 살리려는 EU의 노력

EU 디지털시장 단일화 추진 동향

EU는 디지털경제가 EU의 경제성장,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EU의 디지털경쟁력은 미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낙후된 규제를 철폐해 혁신 ICT기술의 상용화 속도를 높이고 유럽의 창업 · 중소기업이 미국의 구글, 아마존 등과 같은 대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6일 '디지털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을 발표했다.

EU ISSUE

유럽연합(EU)은 2014년 기준으로 인구 5억700만명, GDP 규모 13조9천억유로, 전 세계 상품교역의 33.2%를 차지(2013년)하는 등 세계 최대 경제주체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회원국들의 잇따른 재정위기 등을 거치며 장기 경제침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EU는 정보통신(ICT) 기술 · 산업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모든 경제활동을 지칭하는 디지털경제가 EU의 경제성장, 고용 문제 해결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의 ICT 분야는 매년 12%씩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EU 생산성 증가의 절반 정도가 ICT투자에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내 ICT 분야 고용은 700만명에 이르며, 특히 인터넷(on-line) 경제는 전통(off-line) 산업에서 2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때 5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유럽 인터넷 검색시장의 90% 이상을 구글, 온라인 구매시장의 30% 이상을 아마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장의 60% 이상을 페이스북 등 미국 인터넷 대기업이 점유하는 등 EU의 디지털경쟁력은 미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 EU가 전 세계 최대 경제주체임에도 구글 등과 같은 인터넷 대기업을 배출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을 EU는 28개 회원국별로 분할된 디지털 · 인터넷 시장에서 찾고 있다. 디지털시장에 각국별로 다른 법령 ·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혁신적 디지털기업들이 자국의 시장을 벗어나 전체 EU 디지털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거나 상이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추가비용이 수반되는 것이 현실이다.

낙후된 규제를 철폐해 혁신 ICT기술의 상용화 속도를 높이고, EU 디지털시장 단일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배경으로 유럽의 창업 · 중소기업이 구글, 아마존 등과 같은 대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6일 유럽 내 디지털시장의 각종 규제장벽을

헐고 28개국의 단일시장화를 추진하는 '디지털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유럽 내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접근성 제고, 디지털 네트워크와 혁신적인 서비스 활성화에 적합한 조건과 공정경쟁 시장 조성, 디지털경제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등 3대 중점 분야로 구성되며 통신규제, 저작권, 배송시스템 등 광범위한 분야의 16개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EU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하고 부가세체계 단일화

①국가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입법조치: EU 전체 소비자의 15%만이 타 회원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EU 내 중소기업 7%만이 회원국 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 EU는 소비자와 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국가 간 온라인 구매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입법안을 올해 말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②소비자보호 강화: EU 소비자의 61%가 자국 내 판매상의 온라인 구매에 안심하는 반면,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온라인 구매에 안심한다는 비율은 38%에 그쳤다. EU는 온라인 · 디지털 구매에 관한 소비자보호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연내에 '소비자 보호 협력에 관한 규정(Consumer Protection Cooperation Regulation)'에 관한 검토안을 제출하며 내년까지 EU 차원의 온라인분쟁조정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③저렴하고 고품질의 국가 간 물품배송 구현: 온라인 판매 의향이 있는 EU 기업의 62%가 온라인 판매 시 높은 배송비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 간 물품 배송비가 국내보다 2~5배 비싼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EU는 이와 관련해 가격책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저렴하면서도 고품질의 국가 간 배송시스템을 2016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④부당한 지리적 차단 종식: 유럽소비자센터네트워크에 접수된 가격 및 지리적 차별 민원의 74%가 국가 간 온라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e-commerce framework)', '지리적 차별과 관련된 서비스 지침 제20항(Article of 20 of the Services Directive)' 개정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리적 장벽 해소 입법안을 2016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려 한다.

⑤유럽 전자상거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독점금지 우려 규명: 지리적 차단은 회원국 간 법령체제 차이 외에도 기업의 지역 간 가격차별 등 불공정행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EU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독점금지법 적용에 중점을 둔 기업의 불공정경쟁행위 조사를 올해 중 착수할 계획이다.

⑥디지털 콘텐츠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대적이고 유럽에 적합한 저작권법 프레임워크 마련: EU의 현 저작권 지침은 2001년 마련돼 인터넷기술의 발달, 빅데이터 출현 등 오늘날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으며, 현재 EU 차원의 저작권 지침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별로 저작권 법규를 가지고 있어 저작권 단일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EU는 회원국별로 상이한 저작권 예외조항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포함하는 저작권 지침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⑦방송사의 온라인 전송 확대와 방송서비스에 대한 국가 간 접근성 제고: 인터넷기술 발달로 온라인 방송서비스가 가능해졌으나, 1993년 제정된 '위성 및 케이블 지침(Satellite and Cable Directive)'은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EU는 위성 및 케이블을 통한 유럽 전역에 걸친 온라인 방송서비스 확대를 위해 연내에 기존 지침의 전반적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⑧회원국 간 부가가치세 부과체계 단일화로 기업의 행정적 부담 절감: 회원국별로 상이한 온라인 콘텐츠 부가가치세(VAT) 체계는 기업들에 많은 행정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지난 5월 6일 안드러스 안십(Andrus Ansip)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귄터 외팅거(Günther Oettinger) EU 디지털 경제 및 사회위원이 유럽 내 디지털시장의 각종 규제장벽을 없애는 '디지털단일시장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최준환
주벨기에 · 유럽연합대사관 과학관
joonhn@msip.go.kr



기업별로는 타 회원국으로의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제 준수를 위해 매출 대상 회원국별로 적어도 연간 5천유로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바, EU는 각 회원국별 부가가치세 제도 차이로 발생하는 기업의 행정부담 절감 방안을 2016년까지 제안할 계획이다.

'데이터 자유 흐름 이니셔티브' 2016년까지 마련

⑨EU 통신규정에 대한 재검토: 유럽 전역을 연결하는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은 디지털단일시장 구현의 근간이다. 그럼에도 EU는 타 선진국에 비해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률이 매우 뒤처져 있다. 일례로 미국인의 90% 이상이 4G 무선통신 접근이 가능하나, 유럽인의 경우 25%만 접근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EU는 2016년 말까지 소비자 및 신규 사업자와 관련된 제반 통신규정을 개혁하고, 회원국 간 주파수 분배 방식 조율을 위한 EU의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등 초고속 무선망 구축 투자를 위한 통신업체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⑩21세기형 시청각 미디어 프레임워크 마련: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한 시청각 미디어 콘텐츠의 소비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EU는 유럽 작품 활성화 방안, 소수자 보호, 광고에 관한 규정 등 기존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을 2016년 말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⑪온라인 플랫폼 및 중개자 역할 분석: 디지털 · 인터넷 경제에서 차지하는 온라인 플랫폼(검색엔진, SNS, 앱스토어 등)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권한 남용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EU는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검색결과의 불투명성, 가격정책, 자체 서비스 홍보 등 권한남용 사례에 대한 조사를 연말까지 착수하고, 인터넷상 불법 콘텐츠 단속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⑫디지털서비스 및 개인정보 관리의 신뢰와 보안 강화: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22%의 유럽인만이 검색엔진과 SNS 및 이메일 서비스를 신뢰하며, 72%의 인터넷 사용자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디지털서비스와 개인정보 관리의 신뢰 및 보안 강화를 위해 연말까지 새로운 '데이터보호규정(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입법절차를 완료하고, 기존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지침(e-Privacy Directive)'을 2016년 말까지 재검토할 것이다.

⑬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EU는 내년 상반기에 '사이버보안에 관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해 온라인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기술 및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⑭'유럽의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 계획' 제안: 빅데이터, 클라우드서비스, 사물인터넷(IoT) 등 혁신적 ICT기술은 미래 EU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이며, 특히 빅데이터 분야는 매년 40%씩 성장하는 등 전체 IT산업보다 7배나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EU는 역내 개인정보보호 목적 이외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활용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약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데이터 자유 흐름 이니셔티브(European free flow of data initiative)'를 2016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⑮표준과 호환성 확보를 통한 ICT 경쟁력 강화: 다양한 기기가 통신망에 연결돼 정보가 자유롭게 공유되기 위해서는 표준과 호환성 확보가 필수다. EU는 연내에 e-health, 교통, 스마트에너지 등 필수 분야별로 표준 및 호환성 확보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⑯포괄적인 디지털 사회 구현: EU는 모든 유럽인들이 향후 디지털 사회 실현에 따른 기회를 포착하고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교육의 강화와 취업기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구매, 전자서명제도 등 전자정부(e-government) 구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U는 디지털단일시장 전략을 통해 그동안 미국 인터넷 거대기업에 뒤진 EU ICT산업의 경쟁력 회복 및 시장단일화에 따른 연간 4,150억유로의 경제적 수익과 수십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EU의 디지털단일시장 전략은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우리 정부의 창조경제정책 및 민간 창의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규제개혁정책과도 여러 측면에서 유사하며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한편, 방송 · 통신 · 신규 융합서비스 등 디지털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새로운 법령 및 정책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다.

뮤지엄(museum)은 고대 그리스의 문학과 예술을 관장하는 여신들, 무사이(Mousai)에게 바쳐진 신전 무세이온(Mouseion)에서 유래했다. 박물관, 미술관, 문학관, 기념관 등은 그 명칭은 서로 다르나 모두 무세이온을 같은 뿌리로 한다. 이 땅 여기저기에 뿌려져 있는 문학과 예술에 바쳐진 집들을 찾아다니며 그 안과 밖을 더듬어 본다.

바람의 노래, 온양민속박물관 구정아트센터



미술관 전경

"이 땅, 이 풍경 속에서 건축은 견고하고 토착성에 뿌리내린 담대함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어머니 나라의 풍경은 땅속에서 신호를 보내는 듯했다. …… 흙을 주제로 한 이 건축물의 외관은 혹독한 자연과 토착성에 맞서기도 하고, 어우러지기도 하면서 완성된 것이다."

충청북도 아산시에는 온양민속박물관이 있다. 이 박물관은 현대 산업화에 밀려난 우리 기층의 삶을 이뤄온 물적 토대들을 기록하고 또 기억하기 위해 1978년에 세워졌다. 박물관은 너른 부지 위에 여유롭게 조성됐는데 부지 한편에는 설립자(故 김원대 계몽문화재단 회장)의 호를 빌린 구정아트센터(설립 당시의 명칭은 구정미술관, 이하 구정미술관 또는 미술관)가 있다. 이 미술관은 1982년 건축가 이타미 준의 설계로 완성됐는데, 일본 속 한



최우용 건축가 achitectchoi@daum.net

(주)엄앤드이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본부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건축을 통해 삶의 흔적들을 찾아 떠나길 좋아한다. 저서로는 「유럽방랑 건축 + 畫」, 「다시 관계의 집으로」가 있다.

미술관 로비

국건축가였던 이타미 준이 모국인 대한민국에 설계한 최초의 건축물이다.

모진 냉대와 차별 속에서 성장한 제일교포 2세 유동룡은 일본 무사시공업대를 졸업하고 자신의 설계사무실을 개소하면서 '이타미 준'이란 예명을 지었다. 일본에서 죽는 날까지 한국건축가로 작업한 그는 항상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는데, 그 치열한 고민의 과정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 나라의 미적 정서에 애착을 갖게 됐다. 이타미 준은 모국 산하의 정서, 공예품과 고가구의 아름다움 그리고 초가와 민화의 기층적 생동감에 천착했으며, 이 한국적 전통의 서정을 통해 그의 건축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다듬어 나갔다.

그는 관념적 철학에 기댄 건축을 지양했으며, 건축이 놓일 땅과 그 땅을 쓸고 가는 바람의 노래를 들으며 생생한 만들기에 집중했던 건축가였다.

구정미술관은 하루가 다르게 상전벽해하는 산업화의 한가운데서 지어진 건축물이다. 아산 구도심 외곽에 위치한 미술관이 지어질 당시에는 미술관 부지 주변이 온통 논이고 밭이었으며 전방위로 부는 바람이 부지 온 곳을 쓸고 다녔다.



◀미술관 내부
▼측창으로 흘러드는 자연광의 은은한 분위기



이타미 준은 이 땅에 어울리는 미술관을 짓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여러 토속적 재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질감과 물성 그리고 그 질감과 물성들이 엮어내는 다채로운 분위기와 심상을 조화롭게 엮어내고자 했다.

그는 직접 아산의 돌을 캐고 두드려가며 미술관의 둘레를 구획했고, 충청도의 너른 옥토를 덮고 있는 붉은 흙으로 황토 벽돌을 구워 미술관의 몸체를 쌓아올렸으며, 지붕에는 전통 기와를 올려 미술관을 완성했다. 이 서로 다른 재료들은 겉돌거나 반목하지 아니하며, 건축가의 섬세하고 조화로운 배열과 구도로 한국적 정서를 품은 고유한 아름다움에 이를 수 있었다.

전실을 거쳐 들어가게 되는 미술관의 본체는 수미터 높이가 통으로 뚫린 열린 공간이다. 이 대공간은 평면 가운데 좌우측 대칭으로 솟아 있는 탑과 같은 수직구조물로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는데, 노출된 목구조 천장의 자연스러움과 측창을 통해 흘러드는 자연광의 은은함은 시적 여운이 감도는 충만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타미 준은 '일본에서는 조센징, 한국에서는 일본인'일 수밖에 없었던,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소외된 건축가였다. 그러나 그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계인 또는 주변인의 힘으로 중심담론 또는 거대담론에 함몰되지 않으며 그만의 농밀한 건축세계를 펼쳐보였다. 그의 건축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흩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FTA, 어디쯤 와 있나?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ecsjhur@sogang.ac.kr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해외 부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속적인 수출지향적 개방정책과 거시성장 전략을 취한 결과 오늘날 총GDP 규모로 세계 13위(IMF 2014년도 GDP 추계자료)에 올랐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에 과거와 현재의 국제통상환경의 변천과정과 현재 우리나라의 통상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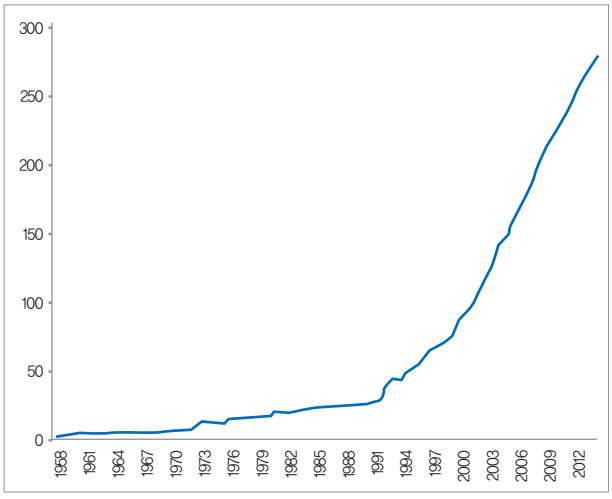
개별 국가 간의 지역적 자유무역협정 체결하는 글로벌 지구촌

자유무역협정(FTA)은 크게 GATT · WTO체제 아래에서 이뤄지는 다자간 무역협정과 개별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양자 간 혹은 복수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은 3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맺은 협정이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수출과 수입장벽을 없애고 무역확대를 통해 국민의 소비후생과 거시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듯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체제는 GATT체제(1947~1994년)와 WTO체제(1994년~현재)로 크게 구분되며, 대표적인 협정으로는 GATT체제 아래 우루과이라운드와 WTO체제 아래 도하라운드가 있다. GATT · WTO체제는 관세에 관한 국가별 무차별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GATT · WTO의 조항 중 24조는 그 예외를 허용(24조는 지역협정이 비회원국에 무역장벽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느슨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유무역지대의 취지가 무역자유화에 합당하고 역외 차별적이 아니라면 제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됨.)하고 있어 거의 모든 회원국은 개별 국가 간의 지역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오고 있다. WTO의 집계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총 538건의 지역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됐고, 이 중 377건은 현재 발효 상태(〈그림〉은 2014년 현재 발효 중인 377건 중 서비스 자유무역협정과 그외 다양한 지역 경제통합 등을 제외한 상품 관련 자유무역지대와 관세동맹의 시계열 누적합을 나타낸 것)다. 우리나라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지역적 자유무역협정체제로 통상기조가 바뀌었고, 2004년 한-칠레 FTA 체결을 시작으로 올 3월 현재 미국, EU, 중국 및 ASEAN 등을 포함한 총 16건 57국과의 FTA가 타결 혹은 발효 상태다.

이와 같은 다자간 혹은 지역 간 자유무역협정의 중요한 특징은 이 협정을 통해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 자유화 및 제도규범 단일화의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FTA는 국

〈그림〉 상품 관련 자유무역지대와 관세동맹 누적건수(1958~2014년)



자료: 세계무역기구(regional trade agreements 관련 데이터베이스)



지난 6월 24일 대통령에게 신속협상권을 부여하는 TPA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TPP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6월 30일 TPA(무역협상촉진권한) · TAA(무역조정지원제도) 법안에 정식 서명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가 간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통상 분야의 학술연구 결과만 보더라도, FTA는 국가 간의 무역거래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선진 산업국가들의 해외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입량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법인이 생산하는 총액이 한 해 총GDP의 절반에 이른다는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통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FTA가 한 국가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은 과거에 비해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상정책의 속도 조절 및 다른 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한 시기

최근 국제통상환경은 과거의 다자간 혹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의 차원을 넘어 글로벌 수준의 경제통합으로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그 예로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주도의 경제통합 이니셔티브가 서로 대립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우선 미국 주도의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총 12개국이 참여해 현재 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가입하고 있지 않으나 기존 회원국의 협상이 끝나는 대로 가입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12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 입장에선 일본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 이점을 누리고 있었으나 TPP가 타결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 통상정책담당자들은 우리나라의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현재 맺고 있는 FTA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이른바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 여러 국가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할 때 각 국가의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인해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상황)로 거래비용의 증가가 예상돼 통일된 하나의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는 TPP에 가입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대외 부문 거래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최근 국제통상환경에서 중국의 부상은 우리를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통상현안이다.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와 ASEAN 10개국을 포함한 총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RCEP에서 고려하고 있는 협력 내용과 규범 수준은 TPP에 비해 다소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TPP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상 한-일 FTA가 되는 반면 RCEP은 한-중-일 FTA를 대체할 수 있는 협정이라는 사실이다. 즉 올해 체결된 한-중 FTA를 통해 일본에 앞서 중국 시장 선점이 예상됐던 현 상황에서 RCEP 내 일본의 존재로 인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RCEP의 협력과 규범수준 설정에 참여할 이유가 생긴 것이다. 인구규모로만 봐도 RCEP은 2015년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TPP는 9.4%를 포괄하고 있다. 경상 GDP 수준으로는 RCEP이 전 세계 GDP의 32%, TPP가 30%를 차지한다. 이러한 시장규모와 구매력이 우리나라가 TPP 못지않게 RCEP을 중요시 여겨야 하는 이유가 된다.

이와 같이 **복잡다단한 오늘날의 국제통상환경에서 FTA에 대한 관심과 통상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전략은 필수적이다. 다만 이러한 FTA 참여 자체가 우리나라의 산업과 거시경제적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의 실현을 위해 통상정책의 속도 조절과 다른 정책과의 공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FTA들과 이로 인해 국내 산업과 고용 부문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지 현재로는 미지수다.** FTA를 맺기 전에 각종 협정 시나리오별 국내 산업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하고는 있으나 이는 정책의 시간 불일치성(time inconsistency)이라는 문제점을 항상 갖고 있다. 간단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수출액과 수입액의 총합은 2014년 현재 총GDP를 넘어서고 있다. 즉 급속한 무역거래량의 증가로 국내 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중간점검할 필요가 있다. 통상정책과 산업 및 고용정책이 공조를 이뤄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종이 달 멈추기 위해 달리는 그 여자의 이야기

벽돌을 쌓아 올립니다. 차근차근 성실하게. 나만의 보금자리를 완성해 갑니다. 그러다 문득 주위를 둘러봅니다. 집을 짓는다고 믿었는데 이제 보니 벽을 쌓고 있었다면? 주위를 빙 둘러 좁고 높은 울타리만 세우고 있었다면?

지금 리카(미야자와 리에 분)의 상황이 꼭 그러합니다. 벽돌 쌓듯 차곡차곡 자신의 삶을 쌓아 올린 여자. 남편의 직업, 남편과의 결혼생활 그리고 이제 막 출근하기 시작한 자신의 새 직장까지. 모두 안정되고 온통 안전한 것들뿐이죠. 조금 권태롭긴 해도 위태로운 삶보단 나을 테니까. 리카는 매일 벽돌을 쌓아 올리듯 어제의 하루 위에 모양도 크기도 똑같은 오늘의 하루를 또 올려 놓습니다.

때는 1990년대 중반. 일본 버블경제 막바지. 부동산 가격이 마지막으로 치솟아 큰 현금을 손에 쥔 노년층이 많던 시절. 그녀가 맡은 업무는 돈 많은 고객을 직접 찾아가 예금을 유치하는 일입니다. 서류만 작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고객이 건넨 돈뭉치를 들고 지점으로 돌아오는 일까지가 리카의 몫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외근 마치고 복귀하는 길. 백화점에 들렀다가 맘에 드는 물건을 발견합니다. 가진 돈이 조금 부족합니다. 가방 속 고객의 돈뭉치가 눈에 들어옵니다. 1만엔만 살짝 빼 쓰고 얼른 다시 채워 놓습니다. 시작은 그랬습니다. 겨우 1만엔. 고작 지폐 한 장. 그런데 지폐 한 장을 빼는 순간 리카 인생의 벽돌 한 장이 함께 빠져버린 겁니다. 지폐를 뺀 자리는 다시 채워 넣었지만 벽돌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벽이었구나. 내가 평생을 바쳐 쌓은 게 집이 아니라 벽이었구나. 울타리 안의 이 좁은 세상을 벗어날 생각조차 못했구나. 지폐 한 장이 빠진 자리. 벽돌 한 장이 빠진 자리. 그 작은 구멍을 통해 리카는 자신의 꿈틀대는 욕망을 보았습니다. 안전해서 안심하던 인생이 문득 답답해졌습니다. 벽 너머 세상이 마구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그 남자를 만납니다. 어느 노인 고객 집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고객의 손자 고타(이케마츠 소스케 분). 우연히 지하철에서 다시 만나 인사를 나눈 날, 리카는 충동적으로 이 대학생 청년과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렇게 그녀의 일상에서 또 한 장의 벽돌이 빠져버립니다. 울타리 밖으로 밀어두었던 그녀의 욕망이 그 작은

김세윤 방송작가 seyooni@gmail.com

영화 보고 글 쓰는 사람. 서류 보고 용쓰는 직장인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한 뼘 더 재미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기 최면에 빠져 사는, 그래봐야 오늘도 비정규직 프리랜서.





틈새로 뱀처럼 파고듭니다. 이제 벽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 이제는 벽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조차 지루해진 리카. 아예 벽을 뛰어넘기로 마음먹습니다. 희망을 저축하던 삶에서 욕망을 베팅하는 삶으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한번 달리기 시작하자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가쿠다 미쓰요의 소설 「종이 달」에는 실제로 리카가 달리는 순간이 묘사됩니다. 점점 대담해진 불륜과 횡령이 결국 어마어마한 범죄로 이어진 뒤, 잡히지 않으려고 '리카가 뛰어 달아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시다 다이하치 감독이 이 소설을 꼭 영화로 만들고 싶게 만든 장면입니다. "원작을 읽고 '별것 아닌 일로 달라진 운명의 무서움'이나 '여성의 업에 대한 깊이' 등 다양한 감정을 느꼈지만 '리카가 달린다'는 액션에 모든 감정이 담겼다고 생각"한 감독은 "리카가 어디를 어떻게 달릴까, 언제 달리기 시작하나, 어디를 향해 뛸까, 하는 것으로부터 각본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덕분에 '리카가 달리는 장면'이 영화 〈종이 달〉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클라이맥스로 담겼습니다. 은행원의 흔해 빠진 유니폼을 입고 뛰는 여자. 은행원의 흔해 빠진 인생으로부터 도망치는 여자. 힐끗힐끗 뒤를 돌아보는 리카. 그러면서 악착같이 앞으로만 뛰어가는 주인공. 저는 그녀의 필사적인 뜀박질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론 기특했습니다. 그녀는 잡혀야 마땅한 범죄자이겠지만, 제가 이미 그녀의 공범자가 된 뒤였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리카의 '욕망의 정체'에 있다. 만족할 만한 일상인데 왜 공허하게 느껴질까." 일본 아사히신문이 「종이 달」을 보고 쓴 서평의 일부. "그녀가 저지른 불륜과 범죄에는 공감하지 않더라도" 작품에 묘사된 리카의 심리와 욕망을 따라가면서 "찔리는 구석이 있는 독자가 남녀 불문하고 적지 않을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죠. 영화 〈종이 달〉을 보면서 '찔리는 구석이 있는' 관객 중 한 명이 바로 저였습니다.

'공허'라는 건, 인과관계가 분명한 감정도 전조 증상이 뚜렷한 감정도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멀리뛰기보다는 복싱에 가깝죠. 오랜 도움닫기 끝에 착지하는 감정이 아니라 느닷없이 날아오는 펀치와도 같은 감정. 언제 나를 찾아올지 모르는, 얼마나 세게 나를 때릴지 알 수 없는, 피하고 싶다고 쉽게 피할 수도 없는. '집'을 짓다 말고 별안간 '벽'에 갇힌 듯 답답해진 모든 인간들의 감정. 특히 중년의 감정.

공허함을 채우려고 리카는 마치 풍선을 불듯 욕망을 부풀렸습니다. 점점 커지는 풍선이란 결국 점점 거대해지는 '빈 공간'이듯 이 욕망을 아무리 부풀려도 그 속은 계속 더 비어갈 뿐입니다. 리카는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공허함을 채우려고 할수록 오히려 마음의 빈 공간이 자꾸 커졌으니까요. 풍선을 계속 불다보면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 불안해집니다. 제발 터지지 말았으면, 하고 잔뜩 긴장하다가 차라리 빨리 터져버렸으면, 하고 바라는 순간이 옵니다. 펑! 파국이 온 뒤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평온함. 그러므로 리카가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건 평온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멈추기 위해 달려야만 했습니다.

안쓰러우면서도 기특했던 이 역설의 질주를 지켜보면서 저는 다른 소설 「파이 이야기」의 두 문장을 기억해냈습니다. "동물은 '다른 곳으로'가 아니라 '무언가로부터' 달아난다." "도망치는 동물들은 '아는 곳'에서 '미지의 세계'로 간다." 「파이 이야기」가 '야생동물이 동물원을 탈출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쓴 문장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이 달〉은 다만 '뭔가로부터' 달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곳'을 박차고 나와 '미지의 세계'를 향해 뛰어가는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다른 곳으로' 가려는 시도가 과연 성공할지는 관객의 상상에 맡겨둡니다. 영화가 남겨둔 그 '상상의 여지'가 참 좋았습니다. 상상 속에서 저는 이 위험한 여자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죠. 리카는 탈출하는 야생동물, 저는 아직 동물원에 남아 있는 동물. 울타리 밖을 동경하는 기린의 눈에는 힘껏 달려나간 울타리 너머의 사슴이 그렇게 근사해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줄거리만 요약하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이야기'. 장르로만 구분하면 '간 큰 주부가 불륜과 횡령에 빠져드는 범죄드라마'. 하지만 '사건' 뒤에 숨은 '사연'을 읽어낼 때 이 영화를 설명하는 문장은 훨씬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면 기사가 미처 말해주지 못한 우리 사회의 이면이 〈종이 달〉에 담겨 있습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을 또 쌓아 올린 우리의 삶에서 벽돌 한 장은 뺄 만한 이야기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정책방향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지난 3월 말 가계가 진 빚이 1,100조원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발표되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한 번 전 국민의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다. 현재로선 가계부채의 부담으로 인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으나, 내부 및 외부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잠재적 위험요인이라는 점에 대해선 학계는 물론 정책당국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근원은 1997년 외환위기와 그에 이은 경제구조 전환에서 찾을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정부가 신용자원 배분에 강력하게 개입해 가계 부문으로 신용이 유입되는 것을 가급적 억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신용시장에서 자원배분 의사결정의 핵심적 기제로서 시장이 정부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은행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기업금융시장보다 우월한 소비자금융시장에서 빠르게 영역을 확대했는데, 이는 2000년부터 시작된 가계부채 증가의 출발점이 됐다. 특히 은행은 신용위험이 높지 않고 대출 관련 비용이 낮은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했다.

대출수요 측면에서도 2000년 이후 저금리 기조가 추세적 현상으로 고착화되면서 채무조달을 통한 자산취득과 소비에 우호적 환경이 계속됐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본이득의 가능성에 기대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수요가 대폭 확대됐다. 보다 근본적으론 외환위기 이후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는 부진한 반면 주거비 · 사교육비 · 통신비 등 지출수요는 종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장기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도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경로로 크게 취약한 주택담보대출 구조와 과도한 저소득층 부채부담이 제시되고 있으며, 정책 대응 또한 이 두 측면과 관련되는 위험요인 관리에 집중돼 있다.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기간 중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만 상환하는 소위 거치식 대출이 지배적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거치식 대출은 대출기간이 3년 이하 단기이고 변동금리 대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차환위험(rollover risk)과 이자율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원리금 분할상환 고정금리 대출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됐으며, 정책 당국도 담보인정비율(LTV) 강화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도입 등과 같은 명시적 규제에 더해 담보가치가 아니라 차주의 상환능력을 대출심사의 중심에 두는 관행 정착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미소금융 · 햇살론 · 새희망홀씨대출 · 바꿔드림론 등 저리의 소위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함으로써 대응하고 있다. 이들 정책상품은 서민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득창출기반 강화를 통해 자체적으로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을 갖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현재의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추진되는 경우 향후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서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축된 서민 정책금융체제는 서민계층의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궁극적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장기적 호흡을 가진 정책이 제시돼야 할 필요가 있다. 서민계층의 소득증대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자금공급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사회안전망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우리 사회가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복지비용이 서민의 채무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라경제 기획 2015
AUGUST

부록

book in BOOK

정부 교육지원 · 교육정보의 모든 것

02 저소득층 · 소외계층 자녀 공교육비 부담 덜어요~ 양은주 나라경제 기자

03 커리어넷 '커리어플래너'로 진로정보 · 상담 · 검사 종합적으로 관리하자 김민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04 전국 20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 · 긴급구조 · 일시보호 제공 최정인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장

05 심리 · 정서적 문제, 가출, 폭력 겪는 청소년이라면 ☎1388로 'SOS' 김태성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선임상담원

06 방학 끝나기 전에 무료 체험현장으로 gogo! 허경숙 「내 아이의 리얼 체험 학습」 저자

07 해외파견 봉사단 정보는 '월드프렌즈코리아'에서 권현수 머니투데이 대학경제 기자

08 등록금 ·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성윤 한국장학재단 대외협력실 팀장

10 2개월 200시간 이상 훈련 프로그램으로 기초 · 실무지식 습득 임승묵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지원팀장

11 창업 관련 체계적인 교육, 여기에 있어요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

12 대학 가지 않고도 학위 취득하려면 학점은행제 · 독학학위제를 백은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독학사관리본부장

13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 1인당 연 200만원 지원 김규석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장

14 평생 동안의 학습이력, 한곳에서 관리하고 학력취득에도 활용하고 오창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이력개발실장

15 정부기관 특색 살린 강좌 풍성…국어문화학교 · 지식재산교육 등 양은주 나라경제 기자

16 알아두면 좋은 정보

저소득층 · 소외계층 자녀 공교육비 부담 덜어요~

- 저소득층 자녀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에 인터넷통신비까지!
- 1~3급 장애인 초 · 중 · 고 학생에게는 부교재비 · 수업료 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에게는 고등학교 학비 지원

✚ 저소득층 초 · 중 · 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 · 중 · 고 학생 교육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이나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가 있는 학부모가 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는 학부모와 학생 모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올해 신청은 3월에 이미 마감됐으며 내년도 일정은 추후 공지).

한편 새로운 교육급여의 시행으로 이미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초등학생 부교재비, 중학생 부교재비 · 학용품비, 고등학생 학용품비 · 교과서대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조하자. 단, 고교 입학금 · 수업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새로운 교육급여는 9월 25일부터 지급된다(문의: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지원대상: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우선 돌봄 차상위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
- 학교장 추천자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지원내용

- 고교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급식비: 학기 중 평일 중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간 60만원 내외(교재비 포함)
- 교육정보화 지원: 가구당 컴퓨터 1대(1회에 한정),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만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이내(유해차단서비스 지원 여부는 시도 교육청별 상이)

✚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중 1~3급 장애인의 초 · 중 · 고생 자녀 또는 1~3급 장애인 초 · 중 · 고학생 본인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등 타법에 의해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은 거주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지원내용

- 초등학생: 부교재비 3만8,700원
- 중학생: 부교재비 3만8,700원, 학용품비 5만2,600원
- 고등학생: 학교장이 고시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12만9,500원, 학용품비 5만2,600원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고등학생 교육비(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한다. 거주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044-203-6521)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최저생계비 150%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초수급자 가구는 제외)에게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원한다. 거주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지원내용: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실비

-문의: 여성가족부 대표전화(☎02-2100-6000), 위드맘(withmom.mogef.go.kr)

■ **양은주** 나라경제 기자

김민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mk77@krivet.re.kr



커리어넷 '커리어플래너'로 진로정보 · 상담 · 검사 종합적으로 관리하자

- 자신을 이해하고 직업세계 파악하는 진로심리검사☞커리어넷 · 워크넷
- 각종 상담은 cyber1388(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로

중 · 고등학교 시기는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시기다. 자신의 성향이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진로심리검사와 상담을 받고, 장래 희망하는 학과나 직업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하고자 한다.

✚ 진로심리검사

진로심리검사는 개인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기를 이해하고 직업세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특성과 관련성이 높은 직업 · 학과 등을 탐색하는 데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결과 자체를 맹신해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커리어넷(www.career.go.kr)에서는 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직업가치관검사, 진로성숙도검사 등을 제공한다. 워크넷(www.work.go.kr)이나 한국가이던스(www.guidance.co.kr)에서도 다양한 진로심리검사를 받아볼 수 있다.

✚ 진학정보

진학정보는 학생의 적성과 흥미,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고등학교 진학정보는 고입정보포털(www.hischool.go.kr)과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학교정보는 하이파이브(www.hifive.go.kr)와 특성화고(www.특성화고.com) 사이트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대학 진학의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상담센터(univ.kcue.or.kr),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입학정보(ipsi.kcce.or.kr) 사이트에서 입학정보를 제공한다.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사이트를 통해서는 대학의 공시정보 및 특성화 추진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각 지역의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도 입시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진로상담 및 진학상담

진로 및 진학상담의 경우 개인맞춤형 상담을 통해 미래 진로를 설계하고, 상급학교 진학 선택이나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제공하는 곳으로는 커리어넷, 시도 교육청의 진로진학지원센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청소년상담센터(www.kyci.or.kr),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 등이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상담센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입학정보, EBS 진학상담실(www.ebsi.co.kr)은 입시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 직업정보 · 학과정보

직업 및 학과정보는 커리어넷의 미래의 직업세계 '학과편', '직업편'을 통해 탐색할 수 있다. 각종 직업과 관련된 학과정보와 자격정보를 연계해 살펴볼 수 있으므로 진로계획을 세우는 학생들에게 유용하다. 워크넷에서는 직업별 정보, 다양한 신생학과 및 이색학과 정보를 제공하며 시도 교육청의 진로진학지원센터나 에듀넷(www.edunet.net)에서도 직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커리어넷 '커리어플래너'(plan.career.go.kr)를 이용하면 진로정보 · 상담 · 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학생들이 초 · 중 · 고 시기에 걸쳐 자신의 진로 · 학습 · 학교활동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진로 결정에 참고할 수 있으며, 대학 진학 시 자기소개서 작성 등 학생부종합전형 자료 준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최정인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장
jungin37@hanmail.net



전국 20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 · 긴급구조 · 일시보호 제공

- 청소년 고민상담, '1388'로 24시간 365일 전화상담 가능
- 대면상담 통해 청소년상담 전문가가 심리적 지원 제공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근거해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활지원, 교육, 연구 등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를 운영해 위기청소년들을 돕는 전문 상담기관이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상담 및 위기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청소년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부모교육, 지역사회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5년 현재 전국 시 · 도 및 시 · 군 · 구 단위로 208개가 설치 · 운영되고 있다.

✚ 청소년 · 학부모 대상 상담 제공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고민 있는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인면접상담, 집단상담 등 다양한 상담을 제공한다.

- **전화상담**: 학업, 대인관계, 가족관계, 이성 · 진로 문제, 학교폭력 등 고민이 있는 청소년들이 국번 없이 '1388'로 전화하면 청소년상담 전문가와 24시간 365일 상담이 가능하며, 위기청소년의 경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개인면접상담**: 센터로 방문해 일대일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상담, 부모상담이 가능하며 자격을 갖춘 청소년상담 전문가가 상담을 진행한다.
- **사이버상담**: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www.teen1318.or.kr)에 접속해 도움받고 싶은 문제를 고민상담 게시판에 올리면 상담전문가가 답변을 해주며, 비공개로 상담이 가능하다.
- **심리검사**: 자신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청소년들은 성격, 진로, 학습, 정신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국 센터별로 실시하는 검사는 상이할 수 있으며,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에 대한 해석상담을 진행한다.
- **집단상담**: 10명 내외의 청소년들이 모여 이뤄지는 집단상담은 친구사귀기, 학습동기 향상, 진로탐색, 분노조절 프로그램 등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검정고시,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 청소년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

위기청소년 긴급구조는 청소년에게 폭력, 가출, 자살 등 신체적 · 정서적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 개입을 통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고, 신체적 ·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일시보호는 긴급구조된 청소년이나 자발적으로 일시보호소에 입소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귀가하거나 시설에 입소하기 전까지 보호하면서 심신의 안정을 유도한다. 서울센터에는 남, 여 일시보호소가 설치돼 있고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1~7일간 보호하고 있다. 긴급구조나 일시보호를 원하는 청소년 역시 청소년전화 '1388'로 전화하면 된다.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안내

– 대상: 9~24세 청소년, 학부모
– 지원내용: 청소년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 신청
– 신청방법: 청소년전화 '1388'(24시간 365일 운영)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2-2285-1318, www.teen1318.or.kr)로 상담신청 및 문의

김태성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선임상담원
hycounsel@kyci.or.kr



심리 · 정서적 문제, 가출, 폭력 겪는 청소년이라면 ☎1388로 'SOS'

-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 미디어와 단절된 환경에서 '캠프'로 치유
- 전국 200개 '꿈드림' 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 취업 · 자립 지원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는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발견하고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자원을 연계해 다각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청소년 사회안전망 사업이다. 전국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역사회 허브가 돼 청소년의 문제를 진단 · 평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 지원한다.

가출, 폭력(학교, 성, 가정 등) 등 위기 문제, 심리 · 정서적 문제,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1388) 또는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서비스

- 청소년전화 1388: 24시간 365일 청소년과 관련된 고민상담부터 긴급한 위기 문제 해결까지 종합 서비스 제공(국번 없이 ☎1388 / 평일 09~18시, 토요일 09~17시)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심리상담, 지역자원 및 기관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
- 1388청소년지원단: 민간의 자발적 참여조직으로 위기청소년 발견 · 구조, 의료 · 법률, 상담 · 멘토 등 다양한 활동 수행

✚ 청소년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 예방 · 해소사업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을 치유하기 위해 다양한 상담 ·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 치유캠프는 중학교 이상 고위험군 미디어 중독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단절된 환경에서 11박 12일 동안 상담과 다양한 체험 및 대안활동을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사용 습관 형성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가족치유캠프는 미디어 중독으로 인해 부모 · 자녀 간 갈등이나 학교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는 4~6학년 초등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2박 3일 동안 교육 및 집단상담, 다양한 가족활동 등을 실시한다.

-참가신청: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www.kyci.or.kr)에서 일정 확인 후 신청 또는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국번 없이 ☎1388)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학교를 그만뒀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전국 200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이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꿈드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각종 교육, 직업체험, 취업, 자립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학교 밖 청소년(9~24세)

-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제적 ·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학업중단숙려대상 등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주요 서비스

- 교육지원: 복학지원, 상급학교 · 대안학교 진학지원, 검정고시 지원, 문화 · 예술 · 체육활동 지원 등
- 직업체험 · 취업지원: 직업체험, 진로교육, 경제활동체험, 취업연계 지원 등
- 자립지원: 생활지원, 건강 · 정서지원, 법률교육, 자기계발(자격취득 등), 생활기술 지원 등

-이용방법: 해당 지역 꿈드림으로 전화 · 방문 신청,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에서 '온라인 참여신청' 바로가기

허경숙「내 아이의 리얼 체험 학습」 저자
hks8934@naver.com



방학 끝나기 전에 무료 체험현장으로 gogo!

- 타국 문화 체험하고 지구촌 이슈도 배우는 '코이카 지구촌체험관'
- 매주 토요일, '외교사료관'에서 외교관 체험을!
- 역사 속 인물도 공부하고 연계체험도 하려면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으로

✚ 타 문화 배워보는 '코이카 지구촌체험관'



지난 7월 13일 코이카 지구촌체험관에서 열린 특별행사 '컬처 인 우즈베키스탄'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코이카 지구촌체험관은 2010년 개관했다. 교육프로그램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의 개발사업과 지구촌 이슈들을 다루고, 지구촌의 삶과 문화를 생생하게 전하는 문화체험도 병행한다. 그중에서도 식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직접 이국의 음식 맛을 접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매년 코이카에서 개발지원사업을 진행하는 56개국 중 한 국가를 선정해 역사 · 문화 · 예술 · 자연 등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해 놓는다. 더불어 그 국가가 처한 어려운 현실도 알 수 있게 했다.

- **이용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일요일, 공휴일 휴관)
- **이용료**: 무료(식문화체험은 유료)
- **대상**: 초 · 중등생
- **신청방법**: 신청날짜를 홈페이지(gv.koica.go.kr)에 공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
- **문의**: ☎031-7400-711

✚ 외교관을 꿈꾸며! '어린이 · 청소년 외교관학교'

외교관학교는 외교부 외교사료관에서 초 ·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다. 기수별로 4주간 매주 토요일에 체험이 진행되며 상반기(3~7월) · 하반기(9~12월)에 월별로 접수신청을 해야 한다. 1~3주 차는 외교사 강의, 외교사전시실 견학, 해설, 체험학습이 진행되며, 4주 차에는 외교관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된다. 어린이 외교관학교는 초등 5~6학년이 대상이며, 청소년 외교관학교는 중등 1~3학년이 대상이다. 방학(8월, 12월) 때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관학교도 열린다.

- **체험시간**: 오전 10~12시, 오후 2~4시
- **이용료**: 무료
- **대상**: 초등 5학년~중등 3학년, 체험인원은 각 회차 20명
- **신청방법**: 신청날짜를 홈페이지(diplomaticarchives.mofa.go.kr)에 공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
- **문의**: ☎02-3497-8716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박물관 연계프로그램 –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와 연계해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번 프로그램은 박물관 유물을 중심으로 5가지의 꿈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서재필 · 주시경 등 근대역사 인물탐구 체험활동을 통해 역사적 인물의 성장과정과 일생을 알아보고 미래의 나의 모습을 상상해 인생의 목표와 꿈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회 동안 인물과 역사에 대해 배운 후 타임캡슐 편지쓰기, 판화 제작하기 등 다양한 결과물을 제작해 본다.

- **체험시간**: 1기당 6회(총 5기),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
- **이용료**: 무료
- **대상**: 초등 5학년~중등생
- **신청방법**: 신청날짜를 홈페이지(appenzeller.pcu.ac.kr)에 공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
- **문의**: ☎070-4015-8793

권현수 머니투데이 대학경제 기자
kdain@mt.co.kr



해외파견 봉사단 정보는 '월드프렌즈코리아'에서

- 초 · 중 · 고 학생에게 학습지도, 진로상담 해주는 '지식멘토링'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으로
- 교육기부, 어렵지 않아요~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

대학생들에게 이른바 '스펙'을 쌓을 수 있는 대외활동 중 하나로 봉사활동이 손꼽힌다. 하지만 요즘 대학가에선 단순히 취업을 위한 스펙을 뛰어넘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고 보람을 느끼는 나눔의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국내외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이를 잘 활용한다면 자신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아 진정한 나눔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월드프렌즈코리아 해외봉사단

월드프렌즈코리아는 정부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해외봉사단사업을 통합해 출범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해외봉사단이다. 코이카 해외봉사단, 중장기자문단, 청년봉사단(KUCSS), 청년봉사단(PAS), IT봉사단, 과학기술지원단, 퇴직전문가, 태권도평화봉사단의 총 8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각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문의**: 월드프렌즈코리아(www.worldfriendskorea.or.kr), 코이카봉사단 및 중장기자문단(kov.koica.go.kr), 청년봉사단KUCSS(kucss.or.kr), 청년봉사단PAS(www.pas.or.kr), IT봉사단(kiv.nia.or.kr), 과학기술지원단(tpc.nrf.re.kr), 태권도평화봉사단(www.tpcorps.org)

✚ 대학생 지식멘토링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지식봉사사업으로 대학생들이 전국 초 · 중 · 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학습 동기부여, 진로상담, 돌봄 등 멘토링을 지원한다.

나눔지기(멘토) 1인당 배움지기(멘티) 5명 이내로 모임이 구성되는데 활동유형에 따라 '지식멘토링 일반'과 '지식멘토링 캠프'로 나뉜다. 멘토링 캠프는 하계 및 동계 방학 때 4일 이상 진행되며 단기간에 집중 멘토링을 펼치는 봉사활동이다. 이 밖에 다문화 · 탈북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력 향상을 돕는 멘토링도 인기를 끌고 있다.

지식봉사사업 참여대학 소속 대학(원)생(휴학생 가능)이면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가능 대학목록을 참고하면 된다. 멘토링 캠프 신청일정은 올 10~11월경(12기)이며, 신청기간, 방법 등은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

한국과학창의재단과 대한민국 대학생 교육기부단이 진행하는 사업으로, 대학생이 초 · 중등학교를 방문해 다양한 창의 · 인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창의적 체험활동 캠프인 '쏙쏙캠프', 다양한 스포츠활동과 체험활동 프로그램 '함성소리', 과학지식과 체험을 제공하는 '과학나눔 봉사단', 방과후 창의적 체험활동인 '알락달락' 총 4개의 프로그램이 있다.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 ·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봉사활동보다 보람과 가치를 더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참가자격은 전국 대학교 재학생이며, 각 프로그램별 모집기간 및 참여방법은 홈페이지(www.teachforkorea.go.kr)를 참조하면 된다.

✚ 국립중앙도서관 사회봉사 · 장애인자원봉사

국립중앙도서관 사회봉사는 도서관 자료 이용안내, 자료정리, 이용자 질서유지 등을 돕는 활동이다. 장애인자원봉사의 경우엔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면낭독(음성, 수화), 영상물 시청 또는 문서작성 등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20세 이상의 일반인 · 대학생이며, 신청방법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www.nl.go.kr)를 참고하면 된다.

한성윤 한국장학재단 대외협력실 팀장
sungyune@kosaf.go.kr



등록금 ·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 소득 · 성적기준 충족한 대학생에게 등록금 ·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소득 발생하면 상환
- 이공계 · 인문계 · 예체능계 등 분야별 우수학생 선발해 등록금 전액 지원
- '희망사다리장학금', 중소 · 중견기업 취업 희망 대학생에 등록금 · 준비장려금 지원

2009년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은 다양한 재원을 운용해 저소득층 학생 및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금리의 학자금 대출을 통해 가계 부담을 낮추고 대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 중인 학자금대출사업, 국가장학사업 등을 소개한다.

✚ 학자금대출사업

등록금과 생활비가 필요한 대학(원)생이 성적기준을 충족할 경우 매학기 학자금을 대출해 학자금 마련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대출)은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간 300만원 한도)를 낮은 금리로 대출하고,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대출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취업연계 중점대학 사업은 해당 대학의 근로장학생이 취직 희망 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후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진은 지난 6월 22일 한국장학재단과 충청권 선정 대학들의 업무협약식 현장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원생 및 소득 9~10분위 대학생에게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간 200만원 한도)를 낮은 금리로 대출하고,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내고 상환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된다.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의 경우 농어촌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학기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이다.

✚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등록금, 학업장려금 및 생활비 등을 장학금으로 지원해 기초 학문 분야 및 미래 국가전략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로 육성한다.

대통령과학장학금은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 예정인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비(연간 50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 학생의 경우 생활비(연간 360만원 한도)를 추가로 지원한다. 해외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는 학비와 체재비 등을 연간 5만 달러까지 지원하고 있다.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은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예정인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수시 또는 수능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매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기초생활수급 학생의 경우 생활비(연간 360만원 한도)를 추가로 지원한다.

인문학100년장학금[구 국가우수장학금(인문사회계)]은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부)의 1, 3학년 학생 및 고등학교 3학년생(인

문사회계열 대학 진학 후 지원)을 대상으로 한다. 서류 · 심층면접 심사 및 대학 자체 선발을 통해 선발된 우수학생에게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비(연간 60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기초생활수급 학생의 경우 생활비(연간 360만원 한도)를 추가로 지원한다.

예체능계 국가우수장학금은 대학 예체능계열 학과(부) 3학년 중 서류 · 심층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된 우수 학생에게 매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기초생활수급 학생의 경우 생활비(연간 360만원 한도)를 추가로 지원한다.

드림장학금은 해외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국내 고등학교 2학년 및 3학년생으로서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등을 통해 선발된 우수 학생에게 해외 대학 진학준비비로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해외 대학 입학 시 연간 최대 5만달러를 추가로 지원한다.

✚ 소득연계 국가장학지원사업

소득기준과 성적기준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해 등록금 마련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Ⅰ유형 장학금은 대학생의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 8분위까지 차등적으로 연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며 **Ⅱ유형 장학금**은 대학의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등 자체 노력에 대응해 지원하는 것으로 대학이 자체 지원기준을 수립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해 지원한다.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의 경우 다자녀 가구의 대학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 8분위 이하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연간 450만원(2분위 이하 480만원)을 지원한다.

〈표 1〉 2015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소득분위별 지원금액 (단위: 만원)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지급액	480	480	480	360	264	168	120	67.5	67.5

✚ 취업지원 장학사업

대학생에게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사회적응력 및 취업역량을 제고하고 등록금 및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한다.

희망사다리장학금은 중소 · 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준비장려금(연간 400만원 한도)을 지원해 맞춤형 인재 양성,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대학 내 창업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장학금이다.

〈표 2〉 소득분위별 수혜 가능 학자금

학생 구분		학자금대출	성적우수 장학금	소득연계 장학금	취업연계 장학금
대학생	1분위	든든	○	○	○
	2분위	든든	○	○	○
	3분위	든든	○	○	○
	4분위	든든	○	○	○
	5분위	든든	○	○	○
	6분위	든든	○	○	○
	7분위	든든	○	○	○
	8분위	든든	○	○	○
	9분위	일반	○	×	○
	10분위	일반	○	×	○
대학원생		일반	×	×	×

주: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확인

국가근로장학금은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한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재학 중 전공 관련 체험과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교내근로의 경우 시급 8천원, 교외근로의 경우 시급 9,500원(시급 외에 대학 및 근로장학기관의 추가장학금 지원 가능)을 받게 되며 근로시간은 학기 중 주당 최대 20시간, 방학 중 주당 최대 40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취업연계 중점대학**은 취업연계 중점대학(11개교)으로 선정된 대학에 소속된 근로장학생이 취직을 희망하는 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후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내년 2월까지 총 30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돼 약 800명이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2학기 대학생 학자금 · 장학금 신청기간

- 학자금(든든 및 일반) 대출: 7월 6일~9월 23일
-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2차 신청: 8월 25일~9월 4일
- 희망사다리장학금: 9월 중
-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 8월 중

– 문의: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1599-2000)

임승묵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지원팀장
smook111@hrdkorea.or.kr



2개월 200시간 이상 훈련 프로그램으로 기초 · 실무지식 습득

- 극심한 취업난 타파하기 위해 IT · SW 등 인문계 특화과정 운영
- 기본역량 강화교육, 기업맞춤형 취업훈련, 커리어코칭 등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
- 취업사관학교 훈련비 · 기숙사비 무료, 자립수당도 월 30만원 지원

✚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은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산업계에서 필요한 직업능력을 반영한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연수생들은 2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교육(200시간)을 통해 실무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운영기관과 협약을 맺은 대학의 재학생들은 교육을 들으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인문계열 학생들이 IT · SW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과 기술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참여대상**: 만 34세 이하의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미취업 졸업자로서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이 가능한 청년
- **운영기관 및 과정확인 방법**: 청년취업아카데미 홈페이지(www.myjobacademy.kr)에서 확인(각 운영기관에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면접을 거쳐 교육생 선발)
- **교육비**: 아카데미 참여생은 전액 무료
-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지원팀(☎052-714-8272, 8275, 8279)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중장년취업아카데미사업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은퇴 후 체계적 인생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재설계 멘토링, 기본역량 강화교육, 기업맞춤형 취업훈련, 커리어코칭 등을 통해 취업(창업)으로 연계하는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훈련생들은 2개월 200시간 이상(이 · 전직유형은 2개월 100시간 이상)의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 및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운영기관을 통해 취업지원도 받을 수 있다.

- **참여대상**: 만 40세 이상 중장년 구직(실업)자 또는 훈련 수료 후 6개월 이내 전직 또는 퇴직(예정)자로 과정별 훈련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40세 미만자도 참여 가능
- **훈련유형**
  - 이 · 전직유형: 훈련대상자 중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과정을 거쳐 다른 사업장의 동일(유사) 직종 또는 다른 직종으로 취업
  - 취업유형: 훈련대상자 중 재직근로자 또는 구직(실업)자를 대상으로 훈련과정을 거쳐 재취업
  - 창업유형: 훈련대상자 중 재직근로자 또는 구직(실업)자를 대상으로 훈련과정을 거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법인설립을 통한 창업과 연계
- **훈련비**: 전액 무료
-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지원팀(☎052-714-8278, 8280)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취업사관학교

취업사관학교사업은 학업중단, 가출 등의 이유로 경제적 · 사회적 ·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해 건전한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및 직업진로지도, 학업(검정고시) 지원 등 개별적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 **참여대상**: 학교 밖 위기청소년(만 15~24세 미만)
- **지원내용**: 훈련비 및 기숙사비 무료, 자립수당(월 30만원)
-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지원팀(☎052-714-8278, 8280)

창업 관련 체계적인 교육, 여기에 있어요

- 창업 리스크 관리 및 체계적인 사업 성공방법 지도하는 챌린지 1000 프로젝트
-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100시간의 실전창업교육 커리큘럼으로 집중 관리
- 창업이론, 업종별 기능 · 실습 연마, 인턴체험 등 창업준비에 필요한 종합교육 제공하는 소상공인 창업학교 교육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지난 5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 수는 지난해 8만4,697개로 전년보다 12.1% 증가했지만, 창업기업의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2013년 기준 41.0%로 OECD 17개 주요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후 생존율도 30%에 그쳐 미국(43%)과 유럽(47%)보다 크게 낮다. 이렇게 치열한 생존시장에서 실패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충분한 경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당신을 경쟁력 있는 창업자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 실전창업교육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청년창업센터에서 실시하는 **챌린지 1000 프로젝트**를 눈여겨볼 만하다. 만 20~39세 청년층 중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창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청년 CEO에 대한 상시 사업지원 및 초기 문제점 조기 발견을 통한 창업리스크 관리부터 창업에 필요한 집체교육 및 참여형 교육을 실시해 창업기반을 마련하고 창업생존율을 높이며, 창업 초기 위험 최소화 및 체계적인 사업 성공방법을 지도한다.

- **신청방법**: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sba.seoul.kr)→서면 · 면접 심사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각종 증빙서류 등
- **문의**: 서울산업진흥원 청년창업팀(☎070-4880-3000),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창업지원과(☎02-2133-5506)

40세 이상이라면 시니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니어 기술창업스쿨**도 매력적이다. 시니어의 관심 분야와 역량에 따른 실무 중심의 집중 기술창업교육을 지원한다. 100시간의 실전창업교육 커리큘럼으로 꾸며져 있으며 교육생 1인당 100만원 내외의 교육비가 지원(교육생 부담 교육비는 10만원)된다.

- **신청방법**: 창업넷(www.startup.go.kr)→창업정보→창업교육(시니어 기술창업스쿨 교육과정 참조)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문의**: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팀(☎042-480-4388),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4523)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창업학교 교육** 프로그램은 20세 이상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예비창업자에게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실전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업종전환예정자, 폐업자를 대상으로는 업종전환에 필요한 특화교육을 제공한다. 창업이론, 업종별 기능 · 실습 연마, 인턴체험 등 창업준비에 필요한 종합교육을 60시간 이내에서 교육한다.

- **신청방법**: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edu.sbiz.or.kr)→창업학교 교육 신청
- **교육생 부담금**: 5만원
- **문의**: 전국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이 밖에 대학생,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창업아카데미**, 창업기획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유망벤처 · 창업기업 내 청년인턴십 경험을 통한 실무지식 습득으로 준비된 청년창업자를 양성하는 **창업인턴제**도 놓치지 말자.

■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

백은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독학사관리본부장
esbaik@nile.or.kr



대학 가지 않고도 학위 취득하려면 학점은행제 · 독학학위제를

- 학점은행제☞국가기술자격, 중요무형문화재 기 · 예능 보유자 등 학교 밖 학습 · 자격 모두 학점으로 인정
- 독학학위제☞교육기관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해 4개 과정별 시험 통과하면 학위취득

✚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다.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대학에 꿈이 있는 사람, 시험응시를 위한 자격요건 충족을 희망하는 사람 또는 사회변화에 맞춰 제2의 전공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특히 유용하다.

–운영기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원 등 다양한 교육기관이 대상이 된다.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인정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교육기관의 특정 과목에 한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과목으로 승인된다.

–학위과정 및 전공: 전문학사 110개 전공, 학사 113개 전공

–인정 가능한 학점: 이전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 국가기술자격,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요무형문화재 기 · 예능 보유자 및 전수교육 경험, 시간제등록 학점,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독학학위제 시험합격과목 및 면제교육과정 이수학점 등

–학위취득: 학사 140학점, 전문학사 80학점 이상

- 교육부 장관 수여 학위 또는 대학의 장이 수여하는 학위취득 가능. 단, 대학 장의 학위수여를 위해서는 일정 학점 이상을 해당 대학에서 이수해야 함.

–문의: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국번 없이 ☎1600–0400(평일 9~18시)

✚ 독학학위제

독학학위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대학에 입학하거나 교육기관을 다니는 대신 스스로 공부해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을 통해 자신의 학업능력을 인정받음으로써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라면 누구나 개인의 능력에 따라 학비 부담 없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전공 분야: 총 11개

-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심리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유아교육학(제3, 4과정만 개설), 가정학, 컴퓨터과학, 정보통신학(제3, 4과정만 개설), 간호학(제4과정만 개설)

–시험과정: 각 과정별 시험은 대학의 교양 및 전공 영역의 전문지식을 평가하며, 한 해에 각 과정별로 1회씩 총 4회의 시험이 실시된다.

교양과정 인정시험	▶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	학위취득 종합시험
제1과정		제2과정		제3과정		제4과정

–응시자격: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제3과정)까지 응시 가능하다. 일정 학력 또는 자격(면허) · 국가시험 등에 합격한 경우에는 일부 과정 또는 시험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마지막 학위취득 종합시험(제4과정)은 반드시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학위취득: 학위취득 종합시험(제4과정)에 합격한 사람은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문의: 독학학위제 홈페이지(bdes.nile.or.kr), 국번 없이 ☎1600–0400(평일 9~18시)

김규석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장
gyuseog123@korea.kr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 1인당 연 200만원 지원

- 일학습병행제로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현장에서 습득 가능
- 일반직종 계좌적합훈련, 신규실업자와 전직실업자의 재취업에 필요한 기능 · 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기회 제공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 향상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는 크게 재직자 훈련과 실업자 훈련으로 나뉜다.

▶ 재직자 훈련

✚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목적**: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을 촉진

–**지원내용**: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해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진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원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

–**목적**: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직업훈련기회 확대를 통한 평생 고용 가능성 제고

–**지원내용**: 1인당 1년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일학습병행제

–**목적**: 기업이 청년 취업희망자를 채용해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교육을 병행 · 제공해 직무역량을 습득시키는 일터기반 학습으로, 기업은 우수인재를 선점, 현장훈련 및 실무경험으로 기업에 필요한 숙련인재를 양성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기업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으며, 학생은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현장에서 배워 불필요한 스펙쌓기 없이 기업에 조기 채용 · 정착이 가능하다.

–**지원내용**: 학습기업에서 소요되는 훈련비(S–OJT, off–JT), 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수당 및 학습근로자 지원금(월 40만원 한도) 등 지원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훈련

–**목적**: 인적자원 개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 참여를 촉진,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내용**: 중소기업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핵심직무능력 향상 훈련비용 전액 지원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 실업자 훈련(내일배움카드제)

✚ 국가기간 · 전략산업 직종훈련

–**목적**: 국가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 필요성이 있는 직종의 기술 · 기능 인력을 양성 · 공급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

–**지원내용**: 훈련비 전액 및 훈련장려금(월 최대 31만6천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일반직종 계좌적합훈련

–**목적**: 고용보험 미적용 신규실업자와 전직실업자의 재취업에 필요한 기능 · 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기회 제공

–**지원내용**: 1인당 200만원(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50~100% 지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오창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이력개발실장
ochcap1@nile.or.kr



평생 동안의 학습이력, 한곳에서 관리하고 학력취득에도 활용하고

- 학습계좌 개설해 다양한 학습이력 통합 기록 · 관리, 교육 · 훈련 결과 자동 등록
- 전화(02-3780-9773, 5) · 온라인(www.all.go.kr) · 방문으로 상담 가능
- 초 · 중등 학력 취득 시 활용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국평원)은 학습자 개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온라인 학습계좌에 체계적으로 통합 기록 ·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러한 결과가 학력인정 등 사회적으로 인정되거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평생학습계좌제 사업을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학습계좌 개설 및 학습이력 등록

개인이 학습이력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학습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직접 학습이력관리시스템(www.all.go.kr)에서 개설하거나 평생학습계좌제 연계기관(전국 약 500여개)에 방문해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학습계좌에는 개인의 인적사항, 학력, 경력, 자격증, 기타 특기사항 및 교육훈련 이수결과를 등록할 수 있다. 지역의 대학 평생교육원이나 주변의 유통업체 문화센터에서 이수한 교육훈련 결과도 등록 가능하다. 일부 교육훈련 이수 및 자격증 취득 결과는 국평원에서 검증해 사실 여부를 승인한다.

학습이력 등록 시 특징적인 점은 모든 정보를 개인이 직접 입력할 필요는 없고, 평생학습계좌제 연계기관에서 수강을 하거나 자격을 취득했다면 해당 정보를 바로 학습이력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로 국평원은 2014년 국방부와의 협약을 통해 군 장병들이 나라사랑포털(www.narasarang.or.kr)에서 학습한 교육훈련 결과가 자동으로 평생학습계좌제에 등록되도록 했다.

✚ 학습이력 진단 및 설계

학습자는 평생학습계좌제에 학습이력을 등록함으로써 평생동안의 학습이력을 온라인 학습계좌에 누적 ·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적된 학습이력을 분석해 향후 학습방향을 설계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우선 학습자는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학습이력을 진단받을 수 있는데, 학습자가 이수한 교육훈련 과정과 취득한 자격증 정보를 분석해 관련된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국평원에서는 각 지역 단위의 전문활동가를 중심으로 매년 '평생학습계좌제 제도알리미'를 선정, 학습자에게 직접적인 학습상담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학력취득 등 사회적 활용

「평생교육법」 등 법령에 근거해 평생학습계좌제에 등록한 교육훈련 이수결과는 학력취득과 연계가 가능하다.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취득을 희망하는 학습자의 경우 평생학습계좌제에서 인정한 검정고시 연계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 해당 시험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과정은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페이지에서 평생학습이력증명서를 출력해 시 · 도 교육청 및 해당 기관에 제출해 활용할 수 있다. 비슷한 절차로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방송통신중 · 고등학교의 수업을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한 학력취득은 초 · 중 · 고등학교에 활용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성인 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 등을 통해 그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 **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이력개발실(☎02-3780-9773, 5)

정부기관 특색 살린 강좌 풍성…
국어문화학교 · 번역아카데미 · 지식재산교육 등

- 클릭! 온라인 무료교육…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정보화교육은 배움나라로
- 집 근처 평생교육진흥원 · 행복학습센터에서 다양한 오프라인 교육을

정부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 15개 시도에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전국 지자체에 290여개의 행복학습센터를 설치 · 운영 중이다. 또 평생학습도시 조성,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정을 통해 다양한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마련했다. 집 가까이에 있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을 찾아가 교육받는 방법뿐 아니라 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ongedu.go.kr)을 통해 분야별 온라인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관들이 특색을 살린 학습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국어문화학교(edu.korean.go.kr / ☎02-2669-9729)를 통해 온 · 오프라인 국어교육을 실시한다. 일반인 ·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강좌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두 차례 편성되며 어문규정, 글쓰기, 말하기, 언어와 문화 등의 주제로 5일간 진행된다. 교재비가 포함된 수강료는 12만원이다. 그 밖에 특별과정, 기획과정,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온라인 과정 등이 마련돼 있으므로 홈페이지에 안내된 일정을 참고하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적십자사(www.redcross.or.kr)의 안전 · 구호 · 보건교육이 눈에 띈다. 일반인 대상 안전교육은 심폐소생술 강습을 비롯해 기도폐쇄, 자동제세동기 사용, 상처나 골절처치를 배울 수 있는 응급처치법 등이 있다. 교육시간과 비용은 강좌마다 다르며 지역별로 진행되는 일정은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교육을 수료하면 수료증이 발급되고, 수료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전문과정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그 밖에 가정보건교육, 청소년또래보건교육, 노인건강교육, 심리사회적지지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보건교육도 진행한다.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 번역에 관심이 많고 한국어와 해당 외국어에 능숙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번역아카데미(www.klti.or.kr/academyMain.do / ☎02-6919-7752, 7754)를 개설한다. 정규과정의 경우 2015년부터 기존 1년 과정에서 2년 과정으로 개편해 운영하며 매해 4월 지원자를 모집한다. 수강료는 없으며 학년당 등록비 1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대전에 위치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iipti.kipo.go.kr)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특허정보 검색, 특허명세서 작성, 특허 출원 · 등록 실무 등의 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비, 교육기간은 과정마다 다르므로 홈페이지를 참조하자.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강습 열기도 뜨겁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KOCW(www.kocw.net)는 국내 일반대학 및 원격대학에서 개발한 이러닝 콘텐츠와 해외 고등교육기관의 강의 자료를 제공한다. 23개 기관, 161개 대학이 제공하는 8천개 이상의 공개강의가 모두 무료다.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이용할 수도 있다.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IP-ACADEMY(www.ipacademy.net)는 지식재산 정보, 대상별 · 수준별 맞춤형 지식재산교육 콘텐츠와 학습자료를 제공한다.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온라인교육센터(edu.parents.go.kr)를 찾자. 부모가 길러주는 창의성, 우리아이 경제교육, 부모를 위한 행복교육, 자녀를 위한 행복교육 등 자녀교육을 위한 여러 콘텐츠가 기다리고 있다. 컴퓨터 정보이용 능력을 키우고 싶은 사람에게는 미래창조과학부 배움나라(www.estudy.or.kr)를 추천한다. 컴퓨터 기초부터 인터넷활용, 웹디자인, 프로그래밍까지 유용한 강좌가 모두 무료다.

■ **양은주** 나라경제 기자

교육비 · 장학금 지원

보건복지부 복지로 www.bokjiro.go.kr
지역별 · 유형별 교육서비스 소개 및 온라인 신청



교육부 교육비원클릭시스템
oneclick.mest.go.kr
초 · 중 · 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조회, 사업내용 소개 및 온라인 상담
여성가족부 위드맘 withmom.mogef.go.kr
한부모 가족 고교생 교육비 지원, 검정고시 학습비 안내 및 신청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안내, 온라인 신청, 상담, 증명서 발급

진로 및 직업정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
www.career.go.kr
직업적성 · 직업가치관 · 진로심리 검사, 직업 · 학과 정보, 진로 교육자료 제공, 진로상담 신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에듀넷 www.edunet.net
교과학습 · 수업자료 제공, 농어촌 ICT 학습 지원, 체험활동 정보 안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상담센터
univ.kcue.or.kr
전형정보 및 대입설명회 일정 안내, 내게 맞는 전형 등 수험생 맞춤형 입시 상담
교육부 하이파이브 www.hifive.go.kr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소개 및 지역별 학교 조회, 관련 정책 · 통계 등 정보 제공

청소년 상담 · 선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www.kyci.or.kr
청소년 전문상담 제공, 청소년복지프로그램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부모교육 프로그램 안내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www.cyber1388.kr
청소년 대상 사이버상담 · 채팅상담, 학교폭력 · 청소년자살 등 청소년 문제 정보 제공
여성가족부 꿈드림 www.kdream.or.kr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고민상담, 멘토 신청, 온라인 참여신청, 지역 꿈드림 정보
여성가족부 e-청소년 www.youth.go.kr
방과후아카데미 · 청소년활동 · 자원봉사 정보 검색, 청소년복지 · 보호 정보 안내
교육부 도란도란 www.dorandoran.go.kr
학교폭력 예방 누리집, 학교폭력 예방 · 대처법 안내, 24시간 상담
한국교육개발원 WEE wee.go.kr
학생위기상담 종합지원서비스, 학교폭력 관련 온라인 상담, 전국 WEE센터 검색

봉사활동

월드프렌즈코리아
www.worldfriendskorea.or.kr
정부 해외봉사단 종합 사이트, 코이카봉사단 등 8개 프로그램 소개 및 지원방법 안내
교육부 교육기부 www.teachforkorea.go.kr
교육기부 프로그램 검색 및 안내, 교육기부자 등록, 교육기부 신청 및 문의

취업 및 창업지원

고용노동부 워크넷 www.work.go.kr
구직 · 구인 등 일자리 정보 및 신청 안내, 직업심리검사 · 진로상담
중소기업청 창업넷 www.startup.go.kr
창업포털사이트, 창업정보 및 입지정보, 창업교육,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기술창업 안내
한국산업인력공단 월드잡 www.worldjob.or.kr
해외연수 · 인턴 · 해외봉사 · 해외창업 사업 소개, K-move 멘토링 지원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www.work.go.kr/pkg
지원대상 선정요건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www.work.go.kr/intern
사업소개, 취업인턴 구인 · 구직 정보 및 신청
교육부 정부해외인턴사업 ggi.go.kr
해외인턴 사업 안내 및 파견현황 정보, 인턴 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www.q-net.or.kr
국가 자격시험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자격정보 및 시험일정 제공

직업교육

한국고용정보원 직업능력지식포털
www.hrd.go.kr
실업자 · 재직자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안내, 자격 · 구인정보, 이러닝 무료학습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
www.ncs.go.kr
직무능력진단, NCS · 학습 모듈검색, 교재 및 학습모듈 자료제공, 이용방법 등 안내

평생학습 · 학력인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www.nile.or.kr
학점은행 · 직업평생교육 · 독학학위제 등 국가평생학습 사업 안내
교육부 나이스 www.neis.go.kr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검정고시 시행 안내 및 온라인 접수, 기타 학생 · 학부모 서비스 제공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www.lifelongedu.go.kr
지역별 · 주제별 평생학습 정보 및 학습콘텐츠 제공, 나의 학습 관리

유용한 앱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서울시 제공. 사이버강좌 조회 및 수강, 위치기반 평생학습기관 정보

맘에쏙 진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공. 커리어넷 진로 검사 및 결과 상담, 팟캐스트 영상 지원

늘배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공. 평생교육기관, 강좌정보, 프로그램 운영정보 안내

NEXT

할 수 있 어

고운말 한 마디가 세상을 바꿉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는 가슴에 멍이 듭니다. 이제 선플을 생활화 합시다.

잘 됄 꺼 야

재 수 없 더 어 러 운 쓰 놈 레 야 기 장 하 난 냐 Enter

토 나 뭘 나 가 다 온 꼴 병 죽 어 왜 아 시 ㅋ 아 사 냐 나 빡 오 죽 ? 역 쳐 어 쩔 겨 Enter 라 려 운 놈 꺼 져 버

kobaco
공익광고협의회

디지털 **나라경제**를 만나보세요

1990년에 창간한 국내 유일의 경제정책 정보지 『나라경제』를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만나보세요.
주요 경제정책과 최신 경제동향 등 『나라경제』의 다양한 콘텐츠를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App Store)와
구글 플레이(Google Play)에서
나라경제라고 입력한 뒤
〈나라경제〉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디지털 나라경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KDI 경제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